

# 김정은 정권의 대남정책 및 통일담론: 텍스트마이닝을 이용한 분석

오경섭·이경화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 김정은 정권의 대남정책 및 통일담론: 텍스트마이닝을 이용한 분석

오경섭·이경화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 김정은 정권의 대남정책 및 통일담론: 텍스트마이닝을 이용한 분석

(김정은 정권의 대남정책 및 통일 담론 분석) KINU 연구총서 16-05

인 쇄 2016년 12월

발 행 2016년 12월

발 행 처 통일연구원

발 행 인 최진욱

편 집 인 북한인권연구센터

등 록 제2-02361호 (97.4.23)

주 소 (06578)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통일연구원

전 화 (대표) 02-2023-8000

(팩시밀리) 02-2023-8297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기획·디자인 세일포커스(02-2275-6894)

인 쇄 처 (사)한국신체장애인복지회인쇄사업장(02-6401-8891)

ISBN 978-89-8479-848-9 93340

대남 정책, 통일 정책

340.911-KDC6 / 320.95193-DDC23 CIP2016030211

가 격 8,000원

© 통일연구원, 2016

통일연구원에서 발간한 간행물은 전국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정부간행물판매센터: 매장(02-734-6818), 사무실(02-394-0337)

# 김정은 정권의 대남정책 및 통일담론: 텍스트마이닝을 이용한 분석



---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 목차

요약 .....	ix
<b>I. 서론   오경섭 .....</b>	<b>1</b>
1. 연구목적과 필요성 .....	3
2. 연구내용과 방법 .....	7
3. 선행연구 검토 .....	18
<b>II. 대남전략과 대남정책의 지속과 변화   오경섭 .....</b>	<b>25</b>
1. 대남전략의 목표: 민족해방 민주주의혁명 유지 .....	27
2. 대남전략 목표 유지원인: 김정은 세습정권의 정당화 .....	35
3. 대남정책 목표와 대남요구사항 .....	41
<b>III. 군집별 대남정책의 특징   오경섭 .....</b>	<b>59</b>
1. 분기별 대남정책 군집화: 대결국면과 유화국면 .....	61
2. 군집별 대남정책 특징: 토픽 모델링을 이용한 분석 .....	68
3. 대결국면(A군집)의 대남정책 특징 .....	70
4. 유화국면(B군집)의 대남정책 특징 .....	95

김정은 정권의 대남정책 및 통일담론:  
텍스트마이닝을 이용한 분석

<b>IV. 군집별 통일담론의 특징   이경화</b> .....	<b>103</b>
1. 분기별 통일담론 군집화 .....	106
2. 군집별 통일담론 특징: 토픽 모델링을 이용한 분석 .....	116
3. 통일담론의 내용적 특징 .....	128
4. 담론을 통한 통일전략 평가 .....	142
<b>V. 결론 및 정책 시사점   오경섭·이경화</b> .....	<b>145</b>
1. 결론 .....	147
2. 정책 시사점 .....	150
참고문헌 .....	157
부록 1: 단어 빈도수 분석 통한 군집의 특징: 대남정책 .....	165
부록 2: 단어 빈도수 분석 통한 군집의 특징: 통일담론 .....	169
최근 발간자료 안내 .....	173

## 표·그림목차

표 I-1	대남정책·통일담론 문서 .....	12
표 I-2	노동신문 10개 토픽(2012년~2016년 2분기) .....	15
표 I-3	2014년 1월 1일의 토픽 분포 .....	16
표 II-1	남북 접촉·회담에서 대남요구사항 .....	47
표 II-2	조선중앙통신·노동신문 기사 유형 .....	49
표 II-3	조평통 서기국 백서(2012.1.12.) .....	51
표 II-4	국방위원회 정책국 공개질문장(2012.2.1.) .....	51
표 II-5	남조선당국과 여러 정당, 사회단체들, 각 계층 인민들에게 보내는 공개서한(2014.1.16.) .....	52
표 II-6	조평통 진상공개장과 공개질문장(2014.4.23.) .....	53
표 III-1	단어 빈도수 분석 통한 군집의 특징: 대남정책 .....	63
표 III-2	분기별 대결국면과 유화국면 .....	65
표 III-3	계층적 군집과 주요 사건 .....	66
표 III-4	토픽 모델링 .....	69
표 III-5	토픽 주제 .....	70
표 III-6	a군집 주요 사건 .....	71
표 III-7	조평통 성명(2016.6.2.)과 전체 조선민족에게 보내는 호소문(2016.6.10.) .....	77
표 III-8	조평통 진상공개장과 공개질문장(2014.4.14.·4.23.) .....	79
표 III-9	국방위 정책국 대변인 성명(2014.11.15.)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공보(2014.12.20.) .....	81



김정은 정권의 대남정책 및 통일담론:  
텍스트마이닝을 이용한 분석

표 III-10 국방위 대변인담화·정책국성명(2015.1.7.·1.25.), 조평통 서기국보도(2015.1.29.)	82
표 III-11 b군집 주요 사건	86
표 III-12 조평통 서기국 백서(2012.1.12.)	88
표 III-13 국방위원회 정책국 공개질문장(2012.2.1.)	89
표 III-14 c군집 주요 사건	92
표 III-15 국방위원회 중대제안(2014.1.16.)	100
표 III-16 남조선당국과 여러 정당, 사회단체들, 각 계층 인민들에게 보내는 공개서한(2014.1.16.)	100
표 IV-1 토픽 모델링	109
표 IV-2 토픽 주제	110
표 IV-3 단어 빈도수 분석 통한 군집의 특징: 통일담론	114
표 IV-4 2012년 1·2 분기 ‘련방제’ 포함 노동신문 기사	119
표 IV-5 2014년 ‘련방제’ 포함 노동신문 기사	120
표 IV-6 2015년 ‘련방제’ 포함 노동신문 기사	121
표 IV-7 2016년 ‘련방제’ 포함 노동신문 기사	123
표 IV-8 2012년 3·4분기~2013년 4분기 ‘련방제’ 포함 노동신문 기사	125

## 표·그림목차

그림 I-1 문서 간 상관관계 시각화 .....	13
그림 I-2 계층적 군집화 .....	14
그림 I-3 '련방제'의 네트워크 분석 .....	17
그림 II-1 북한의 대남전략과 대남정책·통일정책 .....	28
그림 II-2 대남전략 실행 조직체계 .....	32
그림 II-3 비슷한 문맥에서 사용된 단어(Word2Vec) .....	34
그림 III-1 문서 간 유사도 시각화 .....	61
그림 III-2 분기별 대남정책의 계층적 군집화 .....	62
그림 III-3 A군집에서 박근혜의 네트워크 분석 .....	67
그림 III-4 B군집에서 박근혜의 네트워크 분석 .....	68
그림 III-5 a군집 토픽 분포 .....	72
그림 III-6 b군집 토픽 분포 .....	86
그림 III-7 c군집 토픽 분포 .....	93
그림 III-8 d군집 토픽 분포 .....	96
그림 III-9 e군집 토픽 분포 .....	98
그림 IV-1 문서 간 유사도 시각화: 통일담론 .....	107
그림 IV-2 분기별 통일담론의 계층적 군집화 .....	108
그림 IV-3 A군집의 토픽 분포 .....	110
그림 IV-4 B군집의 토픽 분포 .....	111
그림 IV-5 A군집 - 통일과 함께 쓰인 단어의 네트워크 .....	112
그림 IV-6 B군집 - 통일과 함께 쓰인 단어의 네트워크 .....	113

이 연구의 목적은 김정은 정권의 대남전략 목표와 성격에 대한 분석을 기초로 대남정책과 통일담론의 특징을 규명하고, 이를 기초로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 연구는 2012년 1분기부터 2016년 2분기까지 18개 분기 54개월 동안 조선중앙통신·노동신문 기사를 텍스트마이닝과 정성적 연구방법을 이용한 분석을 통해서 김정은 정권의 대남정책과 통일담론의 특징을 구명했다. 이 연구는 김정은 정권에서 대남정책의 몇 가지 특징을 밝혔다.

무엇보다도 김정은 정권은 당규약에서 민족해방 민주주의혁명을 목표로 한 대남전략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김정은 정권은 민족해방 민주주의혁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는다. 북한은 민족해방 민주주의혁명을 실현할 수 있을 정도의 힘과 능력을 갖지 못했고, 심각한 대북 경제제재로 인해 체제 생존 위협을 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정은 정권의 핵심엘리트들은 사실상 민족해방 민주주의혁명을 실현하기 어려운 목표로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 정권은 민족해방 민주주의혁명을 고수한다. 왜냐하면 민족해방 민주주의혁명은 김정은의 통치를 정당화하는 통치이데올로기이기 때문이다. 김정은 정권은 민족해방 민주주의혁명을 내걸고, 미국과 한국을 적으로 설정한다. 외부의 적은 내부 통제와 지배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활용된다. 김정은 정권은 미국과 한국의 군사적 위협을 부각시켜서 인민들의 희생을 요구하고, 경제 위기 등 국가 실패의 책임을 미국과 한국에게 전가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남 전략을 포기하면, 3대세습 정권의 정당성이 뿌리째 흔들릴 것이다.

김정은 정권의 대남정책은 국가전략의 차원에서 실행된다. 김정은

정권의 핵심 목표는 김정은의 권력 안정화 여건 조성, 핵 국가 인정, 대남 주도권 장악과 대북정책 전환 유도 등이다. 대남정책의 목표는 북한체제·지도자 비방 중단,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 전환, 한미합동 군사훈련 중단, 핵보유 정당화와 한국 정부의 북핵 묵인 유도, 남한 내 반미·반정부투쟁 선동 등 대남요구사항으로 구체화된다.

이명박·박근혜정부에서 남북관계가 악화한 것은 남북한이 북핵 문제로 대립했기 때문이다. 북한은 10·3 합의를 어기고, 장거리 미사일과 핵 실험을 진행했다. 이명박·박근혜정부는 북핵 폐기를 대북정책의 핵심과제로 설정했고 김정은 정권이 관철하려고 했던 대남정책의 목표와 대남요구사항을 거부했다. 오히려 6·15공동선언과 10·4 선언을 통해 합의한 남북한 간 거래조건의 변경을 시도했다. 남북관계는 경색되었다.

텍스트마이닝 분석 결과는 이상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김정은 정권의 대남정책은 16개 분기(48개월)가 대결국면이었고, 단 2개 분기(6개월)만 유화국면이었다. 대결국면은 제3·4차 핵실험, 한미합동 군사훈련, NLL 충돌, 각종 남북한 현안을 둘러싼 대남비난, 남북고위급 접촉 무산, DMZ 지뢰도발 등의 사건이 발생했다. 남북한은 대결국면에서 참여하게 대립했다.

그러나 유화국면에서도 남북관계는 진전되지 않았다. 유화국면은 북한이 신년사 이후 대화공세를 펼치면서 남북고위급 접촉을 시도한 2014년 1분기와 남북한이 DMZ 지뢰도발에 합의한 2015년 4분기이다. 김정은 정권은 2개 분기의 유화국면에서도 박근혜정부가 대남정책의 목표와 대남요구사항을 수용하는 것을 전제로 한 남북관계 개선을 주장했다. 실제로 김정은 정권은 한미합동 군사훈련 중단을 요구(토픽

3)하고, 박근혜정부를 비난(토픽4)하면서 남북관계 개선(토픽8)을 모색했다. 유화국면에서도 대결국면에서 사용하는 토픽3·4·5가 많이 등장했다. 그러나 박근혜정부는 북핵 폐기를 목표로 대북제재를 실행하면서 북한의 대남정책 목표와 대남요구사항을 거부했다. 남북관계에서 유화국면은 한시적이었고, 대결국면이 지속되었다.

통일담론의 특징은 통일논의를 확대하면서 공세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다. 공세적인 태도는 2012년 중후반부터 2013년까지 통일방안에 대한 언급 없이 통일대전의 위협성을 강조하면서 부각되었다. 이러한 시기를 지나 북한은 다시 통일 논의를 확대하기 시작했으며 북한식 통일방안인 연방제에 의한 통일을 강조하면서 한반도 전쟁 위협을 병행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통일담론은 김정은 정권이 점차 안정화되고 정책적 방향을 찾아가면서 구체화되기 시작했고, 김정일 정권과 비교하여 상당히 많은 담론을 쏟아내며 북한 주도 통일에 적극성과 공세성을 보였다. 김정은 정권이 제7차 당대회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에서 밝힌 통일에 대한 기본 입장은 과거 1980년대부터 1990년대 선대 정권에서 형성된 노선과 정책을 그대로 유지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제시된 통일노선은 조국통일3대원칙과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 전민족대단결 10대 강령으로 이루어져 있는 조국통일 3대현장과 민족대단결 5대방침이며 이에 대한 투쟁방침은 민족자주와 민족대단결, 평화보장 및 연방제 통일이다.

이러한 지속성과 함께 통일담론에서 변화된 내용은 통일 추진과 통일논의에 대한 적극성·공세성이다. 김정일이 통일논의에 소극적이고 통일보다는 민족 담론을 확대한 것과 달리, 김정은은 ‘련방연합제’라는

표현을 제시하기도 했고, 연방제에 대한 구체적인 실현성을 선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7차 당대회에서 제시된 주체적 통일방안을 전파하기 위해 ‘각계각층에서 남한의 계층까지 아우르는 통일제안’이 등장하기도 했다. 민족을 강조하는 담론에서도 핵을 보유하는 새로운 전략적 지위와 자주성에 대해 새롭게 언급하고 있다.

김정은 정권은 이와 같은 새로운 통일담론을 내놓기 위해 상당 기간 고민한 것으로 보인다. 2012년도 중후반부터 2013년까지 연방제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고 ‘통일대전’의 위협적인 담론이 주된 내용을 이루었던 시기와 2014년 후반기에 북한이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을 뒤이어 통일방안을 주도하기 위해 잠시 동안 등장했던 ‘련방연합제’의 제시하는 북한의 통일담론을 어떤 방향으로 제시할 것인지에 대한 고심의 기간 중에 등장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북한은 2016년 제7차 당대회를 계기로 김정은은 통일담론의 확대, ‘연방제의 통일방안이 아니면 전쟁의 길밖에 없다’는 식의 공세적이고 적극적인 통일담론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을 종합해 보았을 때, 김정은 정권이 북한 주도의 적화통일을 포기했다고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오히려 북한이 지금 제시하고 있는 담론은 그 어느 때보다 솔직한 표현으로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북한은 지금 속내를 숨기지 않고, 북한의 체제를 위협하는 ‘남한의 제도통일, 체제통일’에 맞서 북한 주도의 연방제 통일방안이 ‘평화적인 방법’이라고 주장하며, 그 길이 아니면 ‘비평화적인 방도’인 핵전쟁으로 답할 수도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주제어:** 김정은, 대남전략, 대남정책, 통일정책, 통일담론, 연방제, 통일대전, 텍스트마이닝

## **Analysis of the Kim Jong-un Regime's South Korea Policy and Unification Discourse through Text Mining**

*Oh, Gyeong Seob, Lee, Kyung Hwa*

This study analyzes articles published by Rodong Sinmun from January 1, 2012 to June 30, 2016 through text mining, to investigate characteristics of the Kim Jong-un regime's South Korea policy and unification discourse. The Kim Jong-un regime has adhered to a National Liberation and People's Democratic Revolution(NLPDR) as its South Korea strategy in order to justify its hereditary rule. However, in reality, the Kim Jong-un regime does not have the capacity to promote a South Korea strategy due to economic crisis and sanctions. In these circumstances, North Korea's South Korea policies strive for three realistic aims: creating stable grounds for Kim Jong-un's power, inducing Korean government's tolerance over North Korea's nuclear possession, and overtaking the South Korean leadership and transforming its North Korea policy. However, with the Lee Myung-bak and Park Geun-hye administrations' refusal to grant North Korea's requests, North Korea's South Korea policy has taken a confrontational stance during 16 quarters(48 months) out of 18 quarters(54 months). One characteristic of unification discourse is that North Korea has shown an aggressive stance as discussions on unification have expanded. Such aggressive stance has been notable with North Korea's emphasis on the threat of unification war with no mention on the means of unification from mid 2012s to 2013. After this period, North Korea has once again expanded discussions on unification, emphasizing a federal system,

which is North Korea's preferred way of achieving unification, while simultaneously threatening to wage a war on the Korean Peninsula.

**Keywords:** Kim Jong-un, South Korea-strategies, South Korea Policy, Unification Policy, Unification Discourse, Unification War, Text Mining



# I. 서론

오경섭(통일연구원)





## 1. 연구목적과 필요성

이 연구의 목적은 김정은 정권의 대남전략 목표와 성격에 대한 분석을 기초로 대남정책과 통일담론의 특징을 규명하고, 이를 기초로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김정은 정권의 대남정책과 통일담론의 특징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민족해방 민주주의혁명(NLPDR)이라는 전통적인 대남전략의 목표를 바꿨는가를 검토해야 한다. 대남전략의 목표가 무엇인가에 따라서 대남정책과 통일담론의 방향이 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북한의 대남정책 연구에서 중요한 쟁점 중 하나는 북한정권이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을 목표로 한 민족해방 민주주의혁명이라는 대남전략의 목표를 추구하는가이다.<sup>1)</sup> 일부 전문가들은 경제위기, 대외적 고립, 남북교류협력 확대 등으로 인해서 북한이 남조선혁명과 흡수통일을 골자로 한 한반도 공산화라는 대남전략 목표를 포기했다고 주장했다.<sup>2)</sup>

그러나 대남전략 변화론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았다. 대남전략 불변론자들은 북한이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을 통한 한반도 공산화라는 대남전략 목표를 여전히 추구한다고 주장한다.<sup>3)</sup> 왜냐하면 북한은

1) 전미영, “북한 대남정책 연구의 쟁점,” 『현대 북한 연구의 쟁점2』 (파주: 한울아카데미, 2007), pp. 107~116. 이에 대해서는 II장에서 자세히 다룰 것이다.

2) 백학순, “최근 북한과 관련된 일련의 사태를 어떻게 보아야 하며 우리는 과연 햇빛정책을 지속해야 하는가,” 『정세와 정책』, 7월호 (세종연구소, 1999); 김연철, “최근 남북한 환경변화에 따른 북한의 대남정책 변화,” 『통일경제』, 40호 (1998), p. 35; 이종석, 『분단시대의 통일학』 (서울: 한울, 1998), p. 108.

3) 김효진, “김정일-김정은 체제 대남정책의 새로운 이해: 신제도주의적 관점에서,” 통일부 『신진연구논문집』 (2014), pp. 315~320; 오경섭, “김정은 정권 대남전략과 한국 정부의 대응방안,” 『북한체제의 내구력 평가와 한국의 통일전략』, (제29차 세종국가전략포럼, 2014), p. 11; 김동식, 『북한 대남전략의 실체』 (서울: 기파랑, 2013), p. 23; 유동열, “북한의 대남전략,” 『주제가 있는 통일문제 강좌23』 (서울: 통일부 통일교육원, 2010), p. 12; 전현준, 『북한의 대남정책 특징』 (서울: 통일연구원, 2002), p. 17; 김열수, “북한의 무력도발 위협: 심리전인가, 실제인가?,” 『통일로』

당규약과 사회주의 헌법에 민족해방 민주주의혁명을 대남전략 목표로 명시했고, 당의 대남사업담당비서를 중심으로 통일전선부·정찰총국 등 대남전략을 실행하기 위한 조직체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논쟁은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북한의 대남전략 목표와 성격을 어떻게 파악하는가에 따라서 상호주의 정책을 추진할 수도 있고, 유화정책을 추진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대체로 불변론자들은 상호주의 정책을 선호한다. 상호주의 정책의 이론적 기반은 엑셀로드의 티포탯(Tit-for-Tat) 전략이다. 중앙 권위체가 없는 상태에서 이기적 행위자들 사이에 협력의 관행을 만들어내는 데는 티포탯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것이다.<sup>4)</sup> 남북한은 반복적으로 상호작용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정권의 배신을 막고, 협력의 관행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호혜주의에 입각해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상호주의 정책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한국 정부가 선의를 가지고 일방적으로 양보만 해서는 북한의 협력을 이끌어낼 수 없고, 북한의 변화도 유도할 수 없다고 본다. 1945년 이후 남북관계의 역사가 그 증거라고 주장한다. 상호주의 정책은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채찍을 가하지 않은 채 대화와 협상을 통한 일방적 양보만으로는 북한의 변화를 통한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실현할 수 없다고 본다.

반면에 변화론자들은 유화정책을 선호한다. 유화정책은 햇볕정책·포용정책·화해협력정책 등으로 불리고, 김대중·노무현정부가 추진했다. 유화정책의 이론적 기반은 기능주의·신기능주의 통합이론이다.<sup>5)</sup> 기능주의·신기능주의는 기술적인 분야에서 통합은 다른 분야의 통합

---

(안보문제연구원, 2009), p. 10.

4) Robert Axelrod, *The Evolution of Cooperation* (New York: BasicBooks, 1984), pp. 27~54, 124~141.

5) 김학노, “평화통화통합전략으로서의 햇볕정책,” 『한국정치학회보』, 제39집 5호 (2005), p. 238.

으로 확산되고, 그 과정에서 더 많은 결정이 초국가적 기구에 이양됨으로써 궁극적으로 관련 국가의 정부들이 정치공동체로 통합을 추진할 것이라고 주장한다.<sup>6)</sup> 신기능주의자들은 경제적 통합이 통합을 더 심화시키는 정치적 동학을 형성한다고 주장한다. 이 과정은 확산효과로 설명한다. 즉, 국가들은 경제적 유대를 효과적으로 작동시키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정치적 조정을 거치고, 이러한 과정은 정치적 통합으로 나간다는 것이다.<sup>7)</sup>

햇볕정책 입안을 주도한 임동원은 통일을 목표로 한 대북정책을 3가지로 구분한다. 하나는 북한의 붕괴를 촉진하는 적대적 대결정책이고, 다른 하나는 북한이 붕괴할 때까지 기다리는 방관정책이고, 나머지 하나가 평화공존·화해협력을 통해 북한의 점진적 변화를 도모하는 포용정책이다. 적대적 대결정책과 방관정책은 전쟁이나 북한의 내부적 폭발을 야기할 수 있어서 위험하다고 본다. 이들은 화해협력을 통해서 북한의 개방과 시장경제로의 개혁을 유도하고, 평화공존을 통해 법적 통일에 앞서 남과 북이 서로 오가고 돕고 나누는 사실상의 통일 상황을 실현하는 포용정책, 즉 화해협력정책이 대안이라고 주장한다.<sup>8)</sup> 유화정책은 북한과 대화·협상을 통해서 북한의 점진적 변화를 유도함으로써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실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들의 입장에서 텃포텃은 북한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적절치 않다.

이처럼 대북정책은 김정은 정권의 대남전략과 대남정책에 대한 평가에 기초해서 수립해야 한다. 김정은 정권은 민족해방 민주주의혁명을 여전히 추구하는가? 아니면 ‘두 개의 한국’ 정책에 따라 한반도 공산화

6) 박재영, 『국제정치패러다임』 (서울: 법문사, 1998), pp. 320~330.

7) Joshua S. Goldstein 지음, 김연각·백창재 옮김, 『국제관계의 이해』 (고양: 인간사랑, 2004), p. 485.

8) 임동원, 『피스메이커』 (서울: 중앙books, 2008), pp. 333~334.

I
II
III
IV
V

를 포기하고 남북한 평화공존을 추구하는가? 김정은 정권은 대내외적 정세의 변화에 따라 대남정책과 통일정책의 변화를 시도하는가? 대남 전략은 대남정책과 통일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 연구의 핵심 주장은 3가지이다. 첫째, 김정은 정권이 수령유일지배체제를 유지하려고 할수록, 김일성·김정일 정권을 거치면서 정립한 민족해방 민주주의혁명이라는 대남전략 목표를 추구할 것이다. 왜냐하면 민족해방 민주주의혁명은 세습정권의 정통성과 존립 근거를 보장하는 통치이데올로기이기 때문이다. 김정은 정권은 대남전략을 개인독재와 통제 수단으로 활용한다.

둘째, 김정은 정권은 자국의 힘과 대내외 정세의 변화에 맞게 대남정책·통일정책의 변화를 추구할 것이다. 1990년대 이후 경제 위기, 남북한 국력 격차 심화, 대외적 고립과 경제제재 등으로 인해서 북한은 남북관계에서 수세적 상황으로 몰렸다. 김정은 정권은 체제·정권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핵보유전략을 추진했고, 이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대남정책·통일정책을 변화시켰다. 대남정책은 핵보유에 유리한 환경을 만드는 데 초점을 맞췄다. 통일정책은 적극적인 통일 추구를 포기하고 기존의 통일방안을 원론적으로 되풀이하면서 국내정치적 통제에 활용했다.

셋째, 김정은 정권은 한국 정부가 대남요구사항을 수용할 때, 남북관계 개선에 나설 것이다. 김정은 정권의 가장 중요한 대남정책 목표와 대남요구사항은 한국 정부가 북한의 핵보유를 사실상 묵인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김정은 정권은 한국 정부가 북핵 폐기를 요구하면서 대북 제재를 추진할 경우 남북관계 개선에 나서지 않을 것이다.

이 연구는 3가지 핵심 주장을 검증함으로써 김정은 정권이 왜 민족해방 민주주의혁명 노선을 고수하는지, 김정은 정권이 추구하는 대남정책의 목표가 무엇인지, 대남전략은 김정은 집권 5년 동안 대남정책·통

일정책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분석할 것이다.

## 2. 연구내용과 방법

### 가. 개념과 연구내용

이 연구는 대남전략과 대남정책·통일정책을 조작적으로 정의한다. 대남전략의 개념은 전략의 개념을 원용해서 정의한다. 전략은 전쟁의 목적인 승리를 위해서 전투를 활용하는 기술이다.<sup>9)</sup> 그러므로 정치적 목적과 군사적 수단 사이의 도구적 연결(instrumental link)이 전략이다.<sup>10)</sup>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전략이 정치적 목적과 군사적 수단 사이를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하는가와 어떻게 정치적 결과들이 군사적 수단에 의해 산출되는가를 밝히는 것이다. 그런데 북한의 경우에는 대남전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군사적 수단 뿐만 아니라 비군사적 수단도 활용한다. 그러므로 대남전략은 북한정권이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군사적·비군사적 수단을 운용하여 결과를 산출하는 것이다. 북한정권은 민족해방 민주주의혁명이라는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군사적·비군사적 수단을 운용·활용하고, 대남·통일정책을 실행한다. 대남전략은 김일성·김정일 정권을 거쳐 형성·발전했고, 당규약과 사회주의 헌법에 명시해서 제도화했고, 당·군에 대남전략 실행체계를 구축·운용했다. 물론 대남전략은 국가전략을 구성하는 한 부분이다. 국가전략이 변하면, 대남전략도 변하고, 대북정책과 통일정책도 바뀐다.

<sup>9)</sup> Carl Von Clausewitz, *On War*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4), p. 128.

<sup>10)</sup> Richard K. Betts, "Is Strategy an Illusion?," *International Security*, vol. 25, no. 2 (Autumn, 2000), p. 5.

대남정책·통일정책의 개념은 외교정책의 개념을 원용한다. 외교정책은 대외적 환경과 관련된 국가정책의 한 부분이다.<sup>11)</sup> 모든 국가는 다른 국가들이나 비국가 행위자들과 상호작용하기 위한 정부의 전략을 가지고 있다. 한 국가의 정부는 외교정책을 통해서 다른 국가들의 행동을 바꾸기도 하고, 국제환경에 맞게 자국의 행동을 조정하기 위해서 체계적으로 행동한다.<sup>12)</sup> 그러므로 한 국가의 정부는 국제무대에서 행동지침이 되는 전략에 따라 행동하고, 다른 국가들과의 관계를 더 발전시키면서 국익을 추구한다. 이러한 국가의 행동에는 제약이 따른다. 왜냐하면 국가는 자국이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 외부적 환경의 범위 내에서 외교정책을 결정·실행해야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외교정책은 국가지도자가 어떤 국가와의 관계에서 혹은 어떤 상황에서 추구하는 목표와 그러한 목표를 추구하기 위한 일반적 수단을 포함한다.<sup>13)</sup> 사무엘 김은 중국의 외교정책은 어떤 가치와 이익,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 국제환경이나 다른 국제적 행위자들의 행위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를 가진 합목적적 대외행동과 활동의 총합이라고 정의한다.<sup>14)</sup>

북한정권은 한국을 상대로 북한정권의 목표를 달성하고, 군사적·경제적·정치적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대남정책을 실행한다. 그러므로 대남정책은 한국 정부·비정부단체·한국 국민들과의 상호작용에서 북한정권의 행동지침이 되는 전략이다. 대남정책은 북한의 대남정책 담당부서와 기관들이 남북관계 현안에 대해서 그날그날 내리는 정책결정

<sup>11)</sup> Norman J. Padelford and George A. Lincoln, *The Dynamics of International Politics* (New York: The Macmillan Company, 1962), p. 223.

<sup>12)</sup> George Modelski, *A Theory of Foreign Policy* (New York: Frederick A. Praeger, Inc., 1962), pp. 6~7.

<sup>13)</sup> Joshua S. Goldstein 지음, 김연각·백창재 옮김, 『국제관계의 이해』, p. 197.

<sup>14)</sup> Samuel S. Kim, "Chinese Foreign Policy in Theory and Practice," in *China and the World: Chinese Foreign Policy Faces the New Millennium*, ed. Samuel S. Kim (Boulder: Westview Press, 1988), p. 11.



이다. 대남정책의 목표는 이러한 대남정책을 일정한 방향으로 유도한다. 대남정책은 조선중앙통신·노동신문에서 공화국정부,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등 대남기구, 국방위·총참모부 등 인민군 등의 각종 대남 성명으로 발표된다. 각종 대남성명을 분석하면, 대남정책의 목표와 대남요구사항을 파악할 수 있다.

통일정책은 북한이 연방제를 통한 조국통일의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행동지침이고, 그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서 사용하는 일반적 수단이다. 통일정책은 북한의 대남정책 담당 부처와 기관들이 통일에 관해서 발표하는 각종 대남 성명에 나타난다. 통일담론은 “통일에 관한 국가적·개인적 철학의 총체로서, 통일에 대한 규범과 가치를 생산하는 인식론적 배경”으로 규정한다.<sup>15)</sup> 북한정권은 국가와 사회의 교환과 상호작용을 통해서 통일담론을 형성·수정·보완한다.

이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김정은 정권이 김일성·김정일 시대를 거쳐 정립한 민족해방 민주주의혁명이라는 대남전략의 목표를 고수하는 원인을 분석할 것이다. 둘째, 김정은 정권의 대남정책과 통일담론을 지속과 변화의 시각에서 분석하고, 김정은 집권기간(2012.1.~2016.6.) 동안 대남정책과 통일담론의 특징을 분석할 것이다. 셋째, 이 연구의 결론과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것이다.

이 연구는 총 5장으로 구성한다. I 장은 연구목적과 필요성, 연구내용과 방법, 선행연구를 다룬다. II 장은 김정은 정권의 대남전략과 대남정책을 분석한다. 이 장에서는 김정은 정권이 세습정권의 정당화를 위해서 민족해방 민주주의혁명이라는 대남전략의 목표를 유지한다는 것을 분석할 것이다. 또 김정은 정권은 민족해방 민주주의혁명을 추진

<sup>15)</sup> 통일연구원, 『제10차 KINU 통일포럼: 통일담론 3.0과 북한 변화 전략』, KINU 통일포럼 15-04 (서울: 통일연구원, 2015), pp. 2~3.

I
II
III
IV
V

하는 것에 관심이 없고, 김정은의 권력 안정화 여건 조성, 핵 국가 인정, 대남 주도권 장악과 대북정책 전환 요구 등의 관철을 목표로 대남 정책을 추진한다는 것을 규명할 것이다. III장은 텍스트마이닝을 이용해서 김정은 집권 5년 동안 분기별 대남정책의 특성을 2개의 군집(대결국면과 유화국면)으로 구분하고, 이를 다시 5개의 군집(대결국면 3개 군집, 유화국면 2개 군집)으로 세분해서 분석한다. IV장은 텍스트마이닝을 이용해서 김정은 집권 5년 동안 분기별 통일담론의 특성을 2개의 군집으로 구분해서 분석한다. V장은 결론과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 나. 연구방법과 범위

연구방법은 문헌연구와 텍스트마이닝을 활용한다. 문헌연구는 북한 문헌, 조선중앙통신·노동신문 기사, 국내외 연구문헌, 언론기사 등을 분석한다. 조선중앙통신·노동신문 기사는 김정일이 사망한 2011년 12월 17일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 대남정책·통일정책 관련 기사를 분석한다.<sup>16)</sup> 문헌연구는 다음의 내용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첫째, 김정은 정권이 민족해방 민주주의혁명을 대남전략의 목표로 고수하는 원인을 파악한다. 둘째, 김정은 정권이 실제로 추구하는 대남정책 목표와 대남요구사항을 분석한다. 셋째, 김정은 정권의 대남정책을 텍스트마이닝으로 구분한 후 각 군집별 대남정책·통일담론의 특징을 분석한다.

이 연구는 문헌연구를 보완하기 위해서 텍스트마이닝을 활용해서 노동신문 기사를 분석한다.<sup>17)</sup> 텍스트마이닝은 텍스트 자료에 대한 전

<sup>16)</sup> 조선중앙통신·노동신문 기사는 통일연구원 통합정보시스템의 북한정보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다.

<sup>17)</sup> 양호성 연구원(서울대학교 텍스트마이닝 연구실)은 노동신문 기사를 텍스트마이닝

문연구자들의 정성적 연구방법과 정량적 연구방법의 결합가능성을 시사한다.<sup>18)</sup> 정성적 연구방법은 방대한 문헌을 연구하는데 제한적이다.

예컨대 연구자가 2005년부터 2016년까지 방대한 양의 노동신문 문서를 모두 읽고, 이 방대한 데이터에서 정량적 패턴을 찾아내고, 이를 시각화해서 보여주는 불가능에 가깝다. 또 연구자가 실행한 정보추출 과정을 객관화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연구자가 동일한 자료를 가지고 똑같이 재현할 수도 없다. 텍스트마이닝은 전문연구자가 자료의 독해를 통해 입력한 자료를 처리·정리·분석하는 전 과정이 베일에 가려져 있는 약점을 보완해서 분석의 투명성과 재현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sup>19)</sup>

이 연구는 2005년 1분기부터 2016년 2분기까지 노동신문 데이터베이스에서 대남정책·통일담론에 관한 문서를 각각 추출했다. 전체 분석 결과 중에서 김정은 정권의 집권기간에 해당하는 2012년 1분기부터 2016년 2분기까지의 분석 결과만을 활용했다. 대남정책·통일담론 문서는 연구자들이 선정한 핵심 키워드를 가지고 추출했다.

대남정책 문서는 남조선·패당·남반부·호전광·청와대·통치배·남측·역적·북남·북남관계·남북합의·민간교류·보수당국 등의 단어가 포함된 노동신문 기사를 추출했다. 통일담론 문서는 통일·련방제·반통일 등의 단어가 포함된 노동신문 기사를 추출했다.

〈표 I-1〉 대남정책·통일담론 문서는 2005년~2016년 2분기까지 기간에 각 연도별로 대남정책·통일담론 문서의 수를 표시한 것이다. 2012년 이후 김정은 정권에서 대남정책 문서는 9,067개를, 통일담론

---

으로 분석했고, 분석결과를 연구자들에게 제공했다. 또 연구자들에게 텍스트마이닝에 대해서 자문했다.

<sup>18)</sup> 박종희·박은정·조동준, “북한 신년사(1946-2015)에 대한 자동화된 텍스트 분석,” 『한국정치학회보』, 제49권 2호 (2015), p. 28.

<sup>19)</sup> 위의 글, p. 29.

I
II
III
IV
V

문서는 7,838개를 추출했다.

**표 I-1** 대남정책·통일담론 문서

(단위: 건)

연도	대남정책 문서	통일담론 문서	중복 문서
2005년	852	939	529
2006년	941	999	627
2007년	884	1,081	636
2008년	1,142	1,167	793
2009년	1,093	983	706
2010년	1,280	998	729
2011년	1,295	1,115	713
2012년	2,128	1,838	1,032
2013년	2,127	1,871	1,045
2014년	1,751	1,667	860
2015년	1,845	1,585	925
2016년	1,216	877	496

출처: 텍스트마이닝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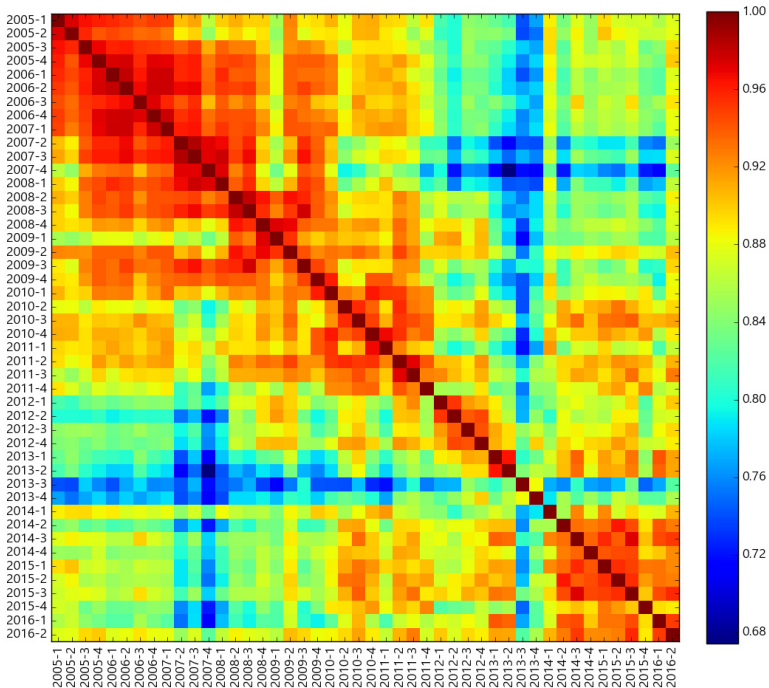
이 연구에서 추출된 대남정책·통일담론 문서는 문서 간 유사도 분석, Word2Vec, 토픽 모델링(Topic Modeling), 네트워크 분석(Network Analysis) 등의 기법으로 분석한다. 문서 간 유사도 분석은 Bag-of-Words<sup>20)</sup>와 클러스터링 방법을 사용한다. 노동신문의 문서 간 유사도는 2005년 1분기부터 2016년 2분기까지 각 분기별 비교를 통해서 서로 유사한 단어를 사용한 시기들을 동일한 군집으로 구분한다.<sup>21)</sup>

<sup>20)</sup> Zellig Sabbettai Harris, "Distributional Structure," *Word*, vol. 10, no. 2-3 (1954), pp. 146~162.

<sup>21)</sup> 문서 간 유사도 분석은 KoNLPy를 사용하여 문장 내에서 의미 형태소인 명사를

문서 간 유사도 분석을 위해서 생성한 문서 벡터는 46개(2005년 1분기부터 2016년 2분기까지)이다. <그림 I-1>은 각각의 상관계수를 계산하여 시각화 한 결과이다. <그림 I-1>에서 빨간색에 가까울수록 상관관계가 1에 가깝다. 상관관계가 1에 가깝다는 것은 사용된 단어의 비율이 서로 비슷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I-1** 문서 간 상관관계 시각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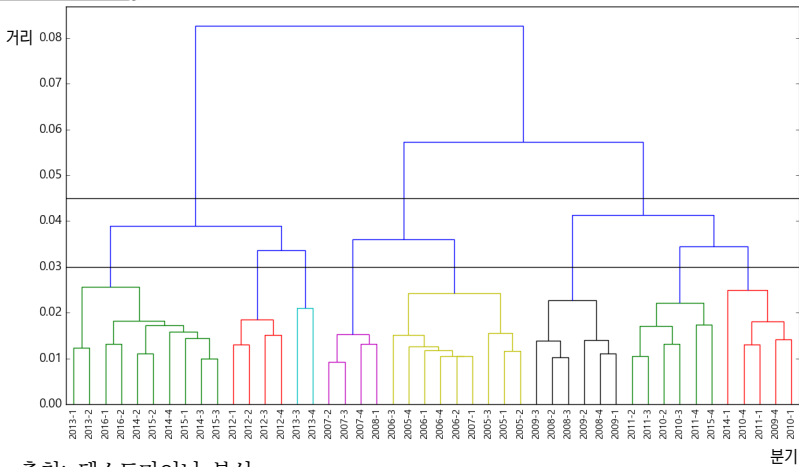
출처: 텍스트마이닝 분석.

사용했다. 박은정·조성준, “KoNLPy: 쉽고 간결한 한국어 정보처리 파이썬 패키지,” 『제26회 한글 및 한국어 정보처리 학술대회 논문집』, (2014). 이 연구에서 2005년 1분기부터 2016년 2분기까지 노동신문에서 추출한 명사는 38,627개이다.

- I
- II
- III
- IV
- V

〈그림 I-1〉 문서 간 유사도 시각화와 비슷하게 문서 벡터의 유사도를 계산하는 방법은 계층적 군집화 방법이다. 〈그림 I-2〉는 계층적 군집화를 시각화하였다. 〈그림 I-2〉에서 y축의 거리 값이 낮아질수록 문서 간 유사도가 더 높아진다. 예컨대, y값이 가장 낮은 2007년 2분기와 2007년 3분기는 문서 간 유사도가 가장 높다. 문서 간 유사도가 높은 2007년 2분기와 2007년 3분기를 묶어 A군집으로 정하고, 2007년 4분기와 2008년 1분기를 묶어 B군집이라고 정하면, A군집과 B군집의 문서 간 유사도가 가장 높다.

**그림 I-2** 계층적 군집화



또 미코로프(Tomas Mikolov)<sup>22)</sup>가 제안한 Word2Vec이라는 최신의 기법을 사용하여 노동신문에서 사용된 단어의 문맥적 의미를 파악한다. 토픽 모델링은 블레이(David M. Blei) 외(2003)가 개발한

<sup>22)</sup> Tomas Mikolov, *et al.*, "Efficient Estimation of Word Representations in Vector Space," arXiv preprint arXiv:1301.3781 (2013).

LDA(Latent Dirichlet Allocation)를 이용해서 각 시기별 토픽 모델링을 진행하고 각 시기별 토픽 분포의 차이점을 분석한다.<sup>23)</sup> 예컨대 2012년~2016년 2분기까지 노동신문에 대해 토픽 10개를 지정한 후 LDA를 사용한 결과는 다음 <표 I-2>와 같다.

**표 I-2** 노동신문 10개 토픽(2012년~2016년 2분기)

토픽1	토픽2	토픽3	토픽4	토픽5	토픽6	토픽7	토픽8	토픽9	토픽10
전쟁	혁명	전쟁	박근혜	패당	선언	일본	평화	성명	일본
사건	수령	미제	인권	대결	공동	투쟁	조선반도	미제	사회
역도	승리	침략	집권	리명박	거래	규탄	문제	다음	대한
리명박	건설	도발	패당	도발	자주	단체	북남관계	평화	사람
해방	높이	조선반도	대한	공화국	수령	대한	공화국	세계	범죄
미제	사회주의	군사	파쇼	전쟁	애국	요구	정책	침략	공화국
승리	김정은	합동	새누리당	북남관계	력사	주장	대한	민주주의	세계
대한	력사	군사연습	세력	역적	투쟁	정부	개선	조선반도	문제
수령	대한	타격	리명박	대한	운동	집회	대결	책동	인권
부정부패	령도	지역	사건	동족	위업	정보원	전쟁	인민공화국	행위

출처: 텍스트마이닝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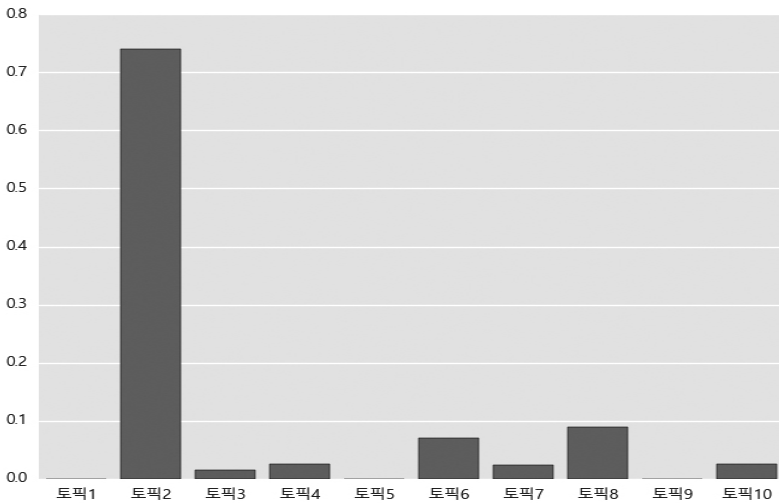
<sup>23)</sup> David M. Blei, Andrew Y. Ng, and Michael I. Jordan, "Latent Dirichlet Allocation," *Journal of Machine Learning Research*, vol. 3 (January 2003), pp. 993~1022.

〈표 I-2〉는 각 토픽에서 생성될 확률이 높은 단어를 10개씩 정렬한 것이다. 각각의 토픽은 특정한 주제를 다루는 말뭉치이다. 토픽3은 한미군사훈련에 관한 말뭉치이고, 토픽8은 북남관계에 관한 말뭉치이다. 토픽1·3·4·5는 전쟁·대결·리명박·박근혜·패당·파쇼·도발·전쟁 등의 단어가 사용됐기 때문에 대결적이고, 토픽6·8은 공동·선언·평화·북남관계·개선 등의 단어가 사용됐기 때문에 유화적이다.

LDA는 각 문서별 토픽 분포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예컨대 〈표 I-3〉은 2014년 신년사의 토픽 분포를 분석한 결과이다.

**표 I-3** 2014년 1월 1일의 토픽 분포

(단위: %)



출처: 텍스트마이닝 분석.

2014년 신년사는 토픽2 수령우상화에 관한 내용이 약 70%를 차지하고, 토픽8 북남관계 개선에 대한 내용이 10% 정도를 차지하고, 토픽1·5·9는 거의 언급되지 않았다. 2014년 신년사는 수령우상화와 사회주의 승리 등에 관한 내용을 주로 다뤘고, 남북관계 개선에 관한 내용을





이 연구의 범위는 김정은 정권의 대남전략·대남정책·통일담론으로 한다. 시기적 범위는 2011년 12월 17일 김정일 사망 이후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단 김정은 정권의 대남전략 분석은 시기적으로 김일성·김정일 정권에서 대남전략이 형성된 과정을 분석한다.

### 3. 선행연구 검토

북한의 대남정책 연구는 외교정책론을 차용해서 북한의 행동을 설명한다. 외교정책분석의 중요한 두 가지 특징은 하나의 분석수준 이상에서 나오는 변수를 검토하고, 외교정책결정의 설명을 다요인적이라고 본다. 미시적 수준부터 거시적 수준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설명변수들이 외교정책결정에 크고 작은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sup>24)</sup> 그런데 외교정책론은 통합적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왜냐하면 분석수준은 발전 정도가 서로 다르고, 적용범위는 하위 분석 수준들 간 교차이론화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종속변수는 개념화가 불충분하고, 방법론적 기술이 이론의 발전을 따라 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sup>25)</sup>

외교정책론은 지도자의 개인적 특성, 외교정책결정 구조와 과정, 문화와 국가 정체성, 국내정치, 국가적 속성, 국제체제 등의 변수를 가지고 국가의 행동을 설명한다.<sup>26)</sup> 북한 전문가들은 외교정책론을 차용해

<sup>24)</sup> 벨러리 허드슨 지음, 신옥희 외 옮김, 『외교정책론』 (서울: 을유문화사, 2009), p. 20; Joe D. Hagan, “Does Decision Making Matter?,” *International Studies Review*, vol. 3, no. 2 (2001), pp. 5~6.

<sup>25)</sup> 벨러리 허드슨 지음, 신옥희 외 옮김, 『외교정책론』, p. 314.

<sup>26)</sup> 로이드 젠슨 지음, 김기정 옮김, 『외교정책의 이해』 (서울: 평민사, 2010); 벨러리 허드슨 지음, 신옥희 외 옮김, 『외교정책론』 (서울: 을유문화사, 2009); 모리스 A. 이스트 외 지음, 최성권 옮김, 『비교외교정책론』 (서울: 한울아카데미, 2008); Margaret G. Herman, “How Decision Units Shape: Foreign Policy: A

서 대남정책을 분석한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는 북한의 1차 자료에 접근할 수 없다는 한계로 인해서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일부 연구만이 북한의 대남정책결정 구조와 과정이나 국내 정치 상황이 대남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sup>27)</sup>

북한의 대남정책결정 구조와 과정이 대남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는 수령을 중심으로 정책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연구와 군부·강경파의 중심적 역할을 주장한 연구로 구분할 수 있다. 수령 중심 대남정책결정 연구는 수령에게 모든 권한이 집중된 순응적 결정과정이기 때문에 대남정책 결정과정에서 군부와 강경파가 자신들의 이익을 표출하거나 관철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sup>28)</sup> 반면에 군부·강경파 주도 대남정책결정 연구는 군부와 강경파가 선군정치를 통해 대남정책 결정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면서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주장한다.<sup>29)</sup>

또 북한의 국내 불안과 대외 도발을 다룬 연구는 북한정권은 국가이익보다 정권이익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무력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한다. 북한의 정치 불안과 경제실패가 악화할수록 대남도발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주장한다.<sup>30)</sup> 다른 연구는 김정은

---

Theoretical Framework,” *International Studies Review*, vol. 3, no. 2 (2001); James N. Rosenau, *The Scientific Study of Foreign Policy* (London: Frances Pinter, 1980), pp. 370~393; Michael Brecher and Jonathan Wilkenfeld, *The Foreign Policy of Israel*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72).

<sup>27)</sup> 김진무, “북한의 대남 정책결정과정에서 군부의 역할,” pp. 87~116; 고유환, “북한의 대내 정치와 대남정책의 상관성 분석,” 『통일경제』, 제25호 (1997), pp. 42~52; 서대숙, “북한의 국내정치와 통일정책,” 김한교 외, 『한반도의 통일전망: 가능성과 한계』 (서울: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1986), pp. 57~72.

<sup>28)</sup> 김진무, “북한의 대남 정책결정과정에서 군부의 역할,” p. 115; 유호열, “북한외교정책의 결정구조와 과정,” 양성철·강성학 공편, 『북한외교정책』 (서울: 서울프레스, 1995), pp. 58~59.

<sup>29)</sup> 임재형, “북한외교정책결정과정의 특징과 군의 역할: 김정일 시대를 중심으로,” 『북한연구학회보』, 제6권 제1호 (2002), p. 59; 김열수, “북한의 무력도발 위협: 심리전인가, 실제인가?,” pp. 12~13.

I
II
III
IV
V

정권이 대남긴장을 조성하는 이유는 핵 요인, 정권 공고화 요인, 관료조직 요인, 독재자 요인, 대외관계 요인 등이라고 분석한다.<sup>31)</sup>

대부분의 연구는 국제정치이론이나 외교정책론을 활용해서 북한의 대남정책이나 행태를 설명한다. 이러한 연구는 국제정치이론이나 외교정책론에서 제시한 변수들을 북한 국내정치 요인과 국제체제 요인으로 크게 구분하고, 남북관계 요인을 추가해서 분석한다.<sup>32)</sup> 북한 국내정치 요인, 국제체제 요인, 남북관계 요인 등 대내외 환경요인이 대남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는 북한의 대남 행태를 설명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이 과정에서 도출한 가설적 주장을 제시한다.<sup>33)</sup> 이러한 연구는 대내외 환경요인이 북한정권에게 유리할 때는 대체로 대남 강경정책을 선택하고, 불리할 때는 대남 온건정책을 채택하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했다.<sup>34)</sup> 그동안 북한정권은 정권의 취약성을 극복하기 위해 남북한 긴장완화 조치를 취하기도 하고, 김정은 후계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강·온의 이중정책을 실행하기도 한다고 주장한다.<sup>35)</sup>

북한의 대남정책과 행태는 3가지 영역에 포함된 변수들의 영향을

30) 정성철, 『국내불안과 대외도발: 북한에 대한 적용 가능성 탐색』 (서울: 통일연구원, 2013), pp. 70~71.

31) 박영자, 『김정은 정권의 대남 긴장조성: 2013년과 향후 전망』 (서울: 통일연구원, 2014), pp. 9~36.

32) 김계동, “9장. 북한의 외교정책,” 김계동 외, 『현대외교정책론』 (서울: 명인문화사, 2007), pp. 347~353; 김계동, 『북한의 외교정책: 비랑에 선 줄타기외교의 선택』 (서울: 백산서당, 2003), pp. 13~15; 이기중, “북한의 대남정책 결정요인과 전망,” 『국제정치논총』, 제37집 2호 (1997), pp. 18~192.

33) 김연수, “북한의 대내·대남정책 평가: ‘후계체승의 정치와 정통성 문제’를 중심으로,” 『신아세아』, 63호 여름호 (2010), pp. 96~129; 조운영, “남북한 관계의 변화와 국내정치적 결정요인과의 연계성,” 현대북한연구회 엮음, 『김정일의 북한, 어디로 가는가?』 (서울: 한올아카데미, 2009), pp. 140~179; 이기중, 위의 글, pp. 180~207.

34) 이기중, 위의 글, p. 205.

35) 오경성, “북한정권의 본질과 대남도발,” 『북한 체제지속 여부와 대북정책 과제』 (세종연구소 주최 2011 대북정책심포지엄 자료집, 2011.6.28.), p. 25.

받지만 어느 한 가지나 두 가지 영역에 포함된 변수들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경우가 있다. 북한전문가들은 북한의 대남정책이나 행태를 국내정치적 어려움을 타개하려는 행동이거나, 국제체제의 제약 하에서 취해진 행동이거나, 남한의 대북정책에 대응해서 남북관계의 주도권을 장악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예컨대 1968년 박정희 대통령을 암살하기 위해서 31명의 특수부대원을 내려 보낸 청와대기습침투사건은 주로 북한 국내정치 요인의 영향을 받았다. 이 사건은 북한의 대남무력 통일노선과 군부의 강경 모험주의 때문에 발생했다.

「남북기본합의서」는 국제체제 요인의 영향을 주로 받았고, 노태우 정부의 적극적 대북접근에도 영향을 받았다. 동구 사회주의권이 붕괴하면서 북한은 정권이 붕괴할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을 느꼈다. 북한정권은 체제붕괴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남북대화에 나섰다. 그러나 한국 정부가 북한정권을 상대로 강한 대북압박정책을 폈다면, 남북대화는 성사되지 않았을 것이다. 북한이 사회주의 붕괴로 인해 체제 붕괴 위협을 느끼는 상황에서 노태우 정부가 북방정책을 실행하면서 남북대화를 제안했기 때문에 1992년에 남북기본합의서를 채택할 수 있었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정부 시기 북한의 대남정책은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에 영향을 받았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정부가 햇볕정책을 추진하면서 북한의 핵개발과 군사도발에 조차 유화적 태도를 취했기 때문에 남북정상회담이 이루어졌고, 남북교류협력이 활성화되었다.<sup>36)</sup> 물론 이 시기에 북한은 경제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남한의 경제지원을 받아야할 국내정치적 요구를 가지고 있었다.

대부분의 연구는 자료의 부족으로 인해서 북한의 대남정책을 이론화

<sup>36)</sup> 전미영, “북한 대남정책 연구의 쟁점,” 현대북한연구회 엮음, 곽승지 외 지음, 『현대 북한연구의 쟁점2』 (서울: 한울아카데미, 2007), pp. 126~132; 이기중, “북한의 대남정책 결정요인과 전망,” pp. 182~192.

I
II
III
IV
V

하는데 실패한다. 왜냐하면 지도자의 개인적 특성, 외교정책결정 구조와 과정 등에 관한 1차 자료가 거의 없고, 남북관계 이벤트 데이터도 구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남정책 연구는 1차 자료의 부족으로 인한 분석수준 간 발전 정도의 차이가 심하고, 하위 분석 수준들 간 교차이론화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남북관계에 관한 이벤트 데이터조차 없기 때문에 방법론적 기술도 거의 발전하지 않았다. 대남정책 연구는 이론화와 방법론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남북관계 이벤트 데이터를 구축해야 한다.

이 연구도 김정은 정권의 대남정책은 북한 국내정치 요인, 국제체제 요인, 남북관계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는 전제아래 분석한다. 즉, 김정은 정권의 대남정책은 하나의 분석수준 이상에서 나오는 변수들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다요인 설명을 제시해야 한다. 이 연구는 북한의 대남정책에 대한 이론화가 아니라 김정은 정권의 대남정책 특징을 설명하는데 초점을 맞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분석은 전문연구자가 자료의 독해를 통해 입력한 자료를 처리·정리·분석하는 전 과정이 베일에 가려져 있다. 이 연구는 정성적 연구방법의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텍스트마이닝을 이용해서 방대한 노동신문을 분석함으로써 연구의 투명성과 재현 가능성을 높일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김정은 정권의 대남정책을 먼저 2개 군집으로, 이를 다시 5개 군집으로 구분하고, 각 군집별 북한의 대남정책 목표와 대남 요구사항, 주요 현안을 다룬다. 통일담론은 2개 군집으로 구분하고 각 군집별 특성과 내용적 특성을 분석한다.

이 연구는 정책적·학문적으로 유용하다. 그동안 북한전문가들은 북한의 대남정책을 이론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노력했다. 왜냐하면 북한의 대남정책은 국가의 행동에 대한 과학적 설명을 요구하는 연구주제일 뿐만 아니라 한국의 안보와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 그리고 남북관계

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정책연구주제이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김정은 정권의 대남정책·통일담론에서 나타난 특징을 파악하고, 이를 기초로 향후 전망을 제시함으로써 대북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그동안 김정은 정권의 대남전략과 대북정책·통일담론을 지속과 변화의 측면에서 분석한 연구는 거의 없다. 이 연구는 김정은 정권 집권 5년의 대북정책·통일담론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 연구는 북한학계 오랜 논쟁 주제인 북한의 대남전략이 변했는가에 대한 하나의 대답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의 대남전략 변화여부는 학문적으로도 중요한 주제다. 이 연구를 통해서 김정은 정권의 대남전략에 대한 학문적 논쟁이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II. 대남전략과 대남정책의 지속과 변화

오경섭(통일연구원)





김정은 정권은 김일성·김정일 시대를 거치면서 정립한 민족해방 민주주의혁명이라는 대남전략의 목표를 고수하는가? 이 장은 이 질문에 대답함으로써 김정은 정권의 대남전략 성격을 규명한다. 이 연구의 핵심 주장은 김정은 정권은 세습정권의 정당화를 위해서 민족해방 민주주의혁명이라는 대남전략의 목표를 고수한다는 것이다. 즉, 대남전략의 목표는 김정은 정권의 권력세습과 통치를 정당화하는 통치이데올로기이기 때문에 김정은 정권은 대남전략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느냐의 여부에 관계없이 이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이 장은 3절로 구성한다. 1절은 김정은 정권이 민족해방 민주주의혁명이라는 대남전략의 목표를 고수한다고 보는 근거를 제시할 것이다. 2절은 김정은 정권이 세습정권의 정당화를 위해서 민족해방 민주주의혁명을 고수한다는 것을 밝힐 것이다. 3절은 김정은 정권에서 실제로 추구하는 대남정책의 목표와 대남요구사항을 분석할 것이다.

## 1. 대남전략의 목표: 민족해방 민주주의혁명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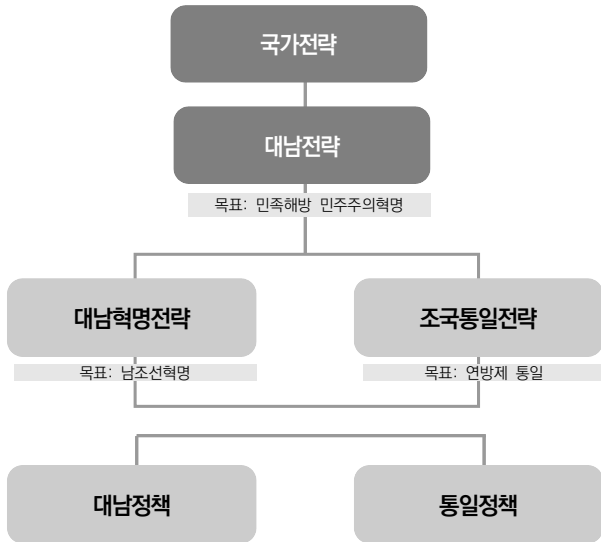
김정은 정권의 대남정책·통일정책의 특징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대남전략을 이해해야 한다. 왜냐하면 김정은 정권은 대남전략 하에서 대남정책·통일정책을 실행하기 때문이다. 북한의 대남전략과 대남정책·통일정책은 다음 <그림 II-1>과 같다. 북한의 대남전략 목표는 민족해방 민주주의혁명이다. 대남전략의 목표는 당면목적과 최종목적으로 구분된다.<sup>37)</sup> 당면목적은 첫 번째 단계로 북한을 사회주의 강성대국으로 건설하고, 남한을 미제국주의의 식민지에서 해방하고 남한정권을 무너뜨리는 민족해방 민주주의혁명을 수행하는 것이다. 다음 단계인 최종목

<sup>37)</sup> 김동식, 『북한 대남전략의 실체』, pp. 62~63.

적은 연방제 통일을 거쳐서 북한 중심의 흡수통일을 실현하는 것이고,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는 것이다.

대남전략은 남조선혁명을 목표로 한 대남혁명전략과 연방제통일을 목표로 한 조국통일전략으로 구성된다. 대남혁명전략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은 3대혁명역량(북한의 혁명역량, 남한의 혁명역량, 국제적 혁명역량)이다. 조국통일전략을 달성하기 위한 방침은 1997년 8월 4일 김정일이 조국통일 3대헌장으로 제시되었다.<sup>38)</sup> 조국통일 3대헌장은 조국통일3대원칙(자주·통일·민족대단결), 전 민족 대단결 10대강령,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을 가리킨다. 북한정권은 대남전략을 실현하기 위해서 대남정책과 통일정책을 실행한다.

**그림 II-1** >> 북한의 대남전략과 대남정책·통일정책



출처: 김동식, 『북한 대남전략의 실제』 (서울: 기파랑, 2013), p. 63 참조 작성.

<sup>38)</sup> 김정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조국통일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자,” 『김정일선진14』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0), p. 344.

일부 전문가들은 대내외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북한이 민족해방 민주주의혁명을 수행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이 없다고 본다. 김대중·노무현정부에서 남북관계의 발전도 북한이 민족해방 민주주의혁명을 포기했다는 주장에 힘을 실어주었다. 김대중·노무현정부는 2차례의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했고, 정치·경제·국방 부문에서 당국자회담을 진행했다. 금강산관광, 개성공단 가동 등 남북한의 교류협력 사업도 활발했다. 김대중·노무현정부가 대북유화정책을 추진한 후에 북한도 평화공존정책으로 전환했다고 주장한다. 북한은 남조선혁명론, 연방제통일 등 공세적 대남전략을 포기했고, 체제유지를 위한 방어적인 평화공존 정책을 추구한다는 것이다.<sup>39)</sup>

변화론자들은 북한이 조선로동당 규약과 사회주의 헌법에서 한반도 공산화를 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공산화라는 대남전략 목표를 포기했다고 주장한다. 한 전문가는 주체사상, 1980년 「조선로동당규약」(이하 당규약), 1998년 사회주의헌법 등에 명시된 한반도 공산화는 신뢰할 수 없다고 말한다. 북한의 대남혁명논리는 1960년대에 만들어졌고, 당규약은 1980년 10월 남한의 군사정권 당시 만들어진 이후 당대회를 개최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를 수정할 기회가 없었다는 것이다. 북한이 당규약에서 대남전략을 수정하지 않았다고 해서 북한이 변화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은 “과거 문헌에 대한 지나친 확대해석이거나, 또는 시차에 따른 문헌의 가치를 해석하지 않는 오류”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sup>40)</sup>

<sup>39)</sup> 김근식, “김정은 시대 북한의 대외전략 변화와 대남정책,” 『한국과 국제정치』, 제29권 제1호 (2013), p. 215; 백학순, “대남전략,”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 엮음, 『북한의 국가전략』 (서울: 한울아카데미, 2003), p. 208; 이종석, 『분단시대의 통일학』 (서울: 한울아카데미, 1998), p. 86.

<sup>40)</sup> 전희관, “‘핵보유’ 시대 북한의 대남정책 변화와 우리 사회의 논쟁,” 『인문사회과학연구』, 제16집 (2007), p. 222.

I
II
III
IV
V

그러나 변화론자들은 대부분 실증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다. 일부 연구자들이 남북한의 경제력 격차 확대, 김대중·노무현정부 시기 2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남북한 교류협력 확대 등을 근거로 북한의 대남 전략이 변했다고 주장할 뿐이다. 남북한의 경제력 격차가 크기 때문에 북한은 한반도 공산화를 실현할 능력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북한이 당 규약에 민족해방 민주주의혁명을 명시한 이유를 설명하지 못한다.

김정은 정권은 김일성·김정일을 거쳐 확립한 민족해방 민주주의혁명이라는 대남전략 목표를 포기하지 않았다. 김정은 정권에서 수정된 당규약은 민족해방 민주주의혁명을 유지했다. 2010년 9월 28일 제3차 당대표자회에서는 당규약에 민족해방 민주주의혁명을 명시했고,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 노선, 통일전선전술, 자주·민주·통일 투쟁노선 등을 제시했다.

조선로동당의 당면목적은 공화국북반부에서 사회주의 강성대국을 건설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민주주의 혁명의 과업을 수행하는데 있으며 최종 목적은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는데 있다. (중략) 조선로동당은 전조선의 애국적 민주력량과의 통일전선을 강화한다. 조선로동당은 남조선에서 미제의 침략무력을 몰아내고 온갖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끝장내며 일본군국주의의 재침책동을 짓부시며 사회의 민주화와 생존의 권리를 위한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하며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조국을 통일하고 나라와 민족의 통일적발전을 이룩하기 위하여 투쟁한다.<sup>41)</sup>

2016년 5월 7일~10일 제7차 당대회에서도 민족해방 민주주의혁명에 입각한 대남전략을 고수했다. 제7차 당대회 사업총화보고에서도

---

41) 「조선로동당 규약」, 2010.9.28.

조국통일 3대원칙,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 전 민족 대단결 10대강령 등 김일성·김정일의 조국통일 노선을 고수했고, 민족자주와 민족대단결, 평화보장과 연방제 실현 등 당의 투쟁방침을 유지했다. 미국과 남한을 적으로 설정한 전통적 정세인식도 수정하지 않았다.<sup>42)</sup>

2016년 개정 「사회주의 헌법」 제9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북반부에서 인민정권을 강화하고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한다.”고 규정한다.<sup>43)</sup> 김정은 정권은 두 개의 한국에 입각한 평화공존이 아니라 조국통일을 헌법에 명시했다.

또 북한은 <그림 II-2>와 같이 민족해방 민주주의혁명을 실행하기 위한 조직체계를 운영하고 있고, 대남지하공작사업도 진행한다. 대남공작은 2009년 초 당 작전부, 35호실, 인민무력부 정찰국을 통합해서 만든 정찰총국에서 담당한다. 작전부의 임무는 남한이나 해외에 파견되는 공작원을 안내해서 안전하게 침투·복귀시키고, 필요에 따라 무전기와 무기 등 공작용 장비 운반이나 요인 테러 및 납치 등 특수임무를 수행한다. 35호실은 해외에서 북한의 대외·대남전략 수립에 필요한 정보수집, 마약밀매·위폐교환 등 통치자금 조성, 요인납치 및 테러 등의 특수임무를 수행한다.<sup>44)</sup>

42) 김정은, “제7차대회에서 한 당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 『로동신문』, 2016.5.8.

4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 (2016.6).

44) 김동식, 『북한 대남전략의 실체』 (서울: 기파랑, 2013), pp. 214~215.

그림 II-2 대남전략 실행 조직체계



출처: 북한 당·정·외곽기구도(www.nkinfo.unikorea.go.kr)를 참고로 필자 작성.

또 북한은 남한 내에 남조선혁명을 목표로 한 지하당을 구축·지도하는 대남지하공작을 진행하고 있다.<sup>45)</sup> 북한은 2000년대 이후에도 남한 내에 북한식 사회주의 실현을 목표로 활동하는 지하조직을 조직·지도했다. 남한에서는 조선노동당의 지도를 받고 활동하는 지하당 사건이 수차례 발생했다. 예컨대 일심회, 왕재산, 통합진보당 사건 등이 대표적이다. 일심회는 2006년 10월 24일 적발되었고, 225국의 지령을 받고 활동한 간첩단 왕재산은 2011년 7월 8일 적발되었다. 통합진보당은

<sup>45)</sup> 한기홍, 『진보의 그늘』 (서울: 시대정신, 2012), p.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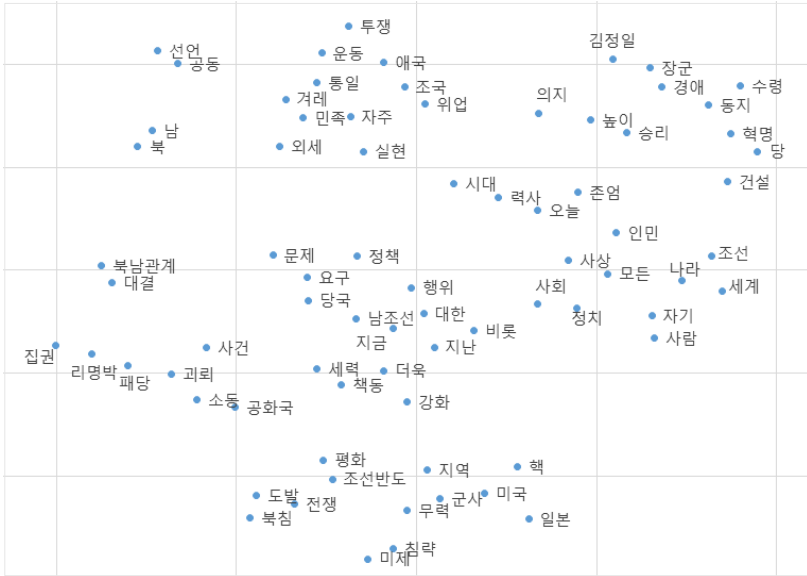
2014년 12월 19일 반국가 단체인 북한의 대남혁명전략에 충실한 조직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따라 해산되었다. 최근 북한은 2016년 6월 24일~10월 31일까지 모두 9차례에 걸쳐서 대남공작원에게 지령을 하달하는 난수방송을 내보냈다.<sup>46)</sup>

2011년 12월 17일 김정일 사망 이후 김정은 집권 5년 동안 조선중앙통신·노동신문에 보도된 남북관계 관련 기사를 분석한 결과도 김정은 정권이 민족해방 민주주의혁명 노선을 고수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다음 <그림 II-3> 비슷한 문맥에서 사용된 단어는 Word2Vec 기법으로 분석했다. 분석 결과, 김정은 정권은 미국과 남한을 적으로 설정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대남정책 기사는 미국을 군사·무력·침략·미제·전쟁·도발·북침 등의 단어와 함께 사용한다. 이것은 미국을 군사적 침략 세력, 전쟁 도발 세력으로 규정하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북남관계는 대결, 리명박은 패당·괴뢰·소동, 남조선은 세력·책동 등의 단어와 함께 사용했다. 이것은 남한정권을 괴뢰로 보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sup>46)</sup> 김효정, “北, 닷새 만에 또 달라진 숫자로 ‘난수방송’,” 『연합뉴스』, 2016.10.14.

그림 II-3 ▶ 비슷한 문맥에서 사용된 단어(Word2Vec)



출처: 텍스트마이닝 분석.

이명박 정부는 ‘미제의 침략전쟁책동의 돌격대, 하수인,’ ‘미국의 식민지전쟁하수인’이고, ‘남조선이 미국의 철저한 식민지’라고 주장했다.<sup>47)</sup> 2015년 조평통은 대변인 기자문답에서 “남조선당국이 주종관계, 수직관계에 놓여있는 미국과의 비정상적인 관계를 바로잡지 않고서는 북남관계에서의 근본적인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엄연한 현실”이라고 주장했다.<sup>48)</sup>

2016년 제7차 당대회에서는 민족해방 민주주의혁명 노선을 재확인했다. 제7차 당대회 사업총화보고에서 “미제국주의자들은 특히 자주의

47) “「조평통」 대변인 담화,” 『조선중앙통신』, 2012.2.4.; “정전협정에 대해 말할 자격이 없다,” 『로동신문』, 2012.3.13.

48) “「조평통」 대변인, 남북관계 관련 중통기자 질의 대답,” 『조선중앙통신』, 2015.2.4.

기치, 사회주의기치를 높이 들고 반제반미투쟁의 전초선을 지켜선 우리 공화국을 고립압살하기 위하여 악랄하게 책동”했고, “조선반도에는 미제와 괴뢰역적패당의 피비린내나는 침략전쟁광기로 하여 최악의 핵전쟁발발국면이 조성”되었다고 주장했다.<sup>49)</sup>

일부 북한전문가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북한이 민족해방 민주주의혁명을 포기했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북한정권이 민족해방 민주주의혁명을 더 이상 추구하지 않는다고 선언하고, 당규약과 사회주의헌법 등에서 민족해방 민주주의혁명, 통일전선전술, 자주·민주·통일 투쟁노선 등을 삭제해야 한다. 남한을 적으로 설정한 대남전략 추진체계도 개편하고, 대남지하공작사업도 평화공존의 목적에 맞게 손질해야 한다. 이러한 조치를 취하기 전에는 북한이 전통적인 대남전략 목표를 수정했다고 볼 수 없다. 북한은 대남전략 목표를 실현하기에 유리한 대내외적 환경이 조성되면, 민족해방 민주주의혁명을 행동에 옮길 것이다.

## 2. 대남전략 목표 유지원인: 김정은 세습정권의 정당화

김정은 정권은 민족해방 민주주의혁명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김정은 정권의 핵심엘리트들이 민족해방 민주주의혁명을 실현할 수 있다고 믿고 있는지는 불확실하다. 핵심엘리트들은 남북한의 역관계와 대외관계를 고려할 때, 당장 민족해방 민주주의혁명을 실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 대남전략 변화론자들의 주장처럼 김정일 정권의 대남전략은 체제와 정권 생존에 치중하는 수세적 목표로 변했

<sup>49)</sup> 김정은, “제7차대회에서 한 당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 『로동신문』, 2016.5.8.; “리명수대표의 토론,” 『로동신문』, 2016.5.8.

I
II
III
IV
V

을 가능성이 높다.<sup>50)</sup> 1990년대 이후 김정일 정권의 목표는 체제와 정권의 생존이었다.<sup>51)</sup> 이러한 사정은 김정은 정권에서 달라지지 않았다. 김정은 정권의 핵심엘리트들조차 북한의 국력과 외부적 환경을 고려할 때, 당장 민족해방 민주주의혁명을 실현할 수 없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

김정은 정권은 경제위기, 대외적 고립, 대북 경제제재 등으로 인해서 3대혁명역량이 퇴조했다. 북한의 혁명역량은 남조선혁명은 고사하고, 체제와 정권의 생존을 염려해야 할 정도였다. 북한체제는 1990년대 이후 생존의 위기에 처했다.<sup>52)</sup> 1990년대 초반 동유럽의 탈공산화와 소련연방의 붕괴로 인해 냉전이 해체되었고, 소련이 북한에게 제공하던 군사적 보호막이 사라졌고, 경제적 지원도 중단됐기 때문이다.

경제위기는 매우 심각했다. 소련이 대북지원을 중단하면서 북한의 전체 교역량에서 대소 교역량은 거의 20% 수준으로 줄었고, 그 결과 1990년부터 1998년까지 북한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sup>53)</sup> 1994년~1998년 사이에 대기근이 발생하면서 약 100만 명의 아사자가 발생했고, 공장 가동률은 20%~30%에 불과했다. 2000년대 이후 북한경제는 시장화로 인해서 회복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남북한 경제력 격차는 현저하게 벌어졌다. 2015년 남북한 경제력 격차는 1인당 GNI는 139만 3천 원과 3,093만 5천 원으로 22.2대 1이고, 명목 GNI는 1,565조 8천억 원과 34조 5천억 원으로 45대 1이다.<sup>54)</sup> 1990년대 이후 북한이 남한을 상대로 민족해방 민주주의혁

50) 백성호, “김일성 사후 북한 외교노선의 변화와 대외관계의 특징: 1995년부터 2004년까지 ‘로동신문’의 사설분석을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제45집 4호 (2005), pp. 170~171.

51) 오경섭, 『북한의 위기와 선군정치』, pp. 42~49.

52) 김진웅, 『냉전의 역사, 1945~1991』 (서울: 비봉출판사, 1999), pp. 280~282.

53) 오경섭, 『북한의 위기와 선군정치』, pp. 139~142.

명을 실현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남북한의 군사력 격차도 존재한다. 한미동맹의 군사적 능력은 북한에 비해 압도적으로 강하다. 북한의 군사력이 한미동맹의 군사력을 능가하게 될 가능성도 낮다. 주한미군이 남한에 주둔하고, 한미동맹이 굳건한 상황에서는 북한이 무력통일을 실행에 옮길 가능성도 낮다. 민족해방 민주주의혁명을 주장하는 북한의 핵심엘리트들도 한미동맹이 존재하는 한 무력통일을 실행할 수 없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

남한의 혁명역량도 크게 약화되었다. 남한은 1987년 민주화 이후 반정부 민주화운동세력이 크게 쇠퇴했다. 반정부운동이 쇠퇴하는 상황에서 북한의 지령을 받고 활동하던 지하당 활동도 위축되었다. 한국에서 활동한 최대의 지하당이었던 민족민주혁명당은 1999년 해산되었다. 2014년 12월 19일에는 민족민주혁명당의 잔존세력이었던 경기남부위원회가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던 통합진보당이 해산되면서 남한의 혁명역량은 결정적 타격을 입었다. 남한에서 북한과 연계된 지하당은 큰 타격을 받았고, 친북 운동세력도 크게 약화되었다.

국제적 혁명역량은 거의 사라졌다. 1990년대 초 사회주의권이 몰락하면서 국제적 혁명역량은 사실상 무너졌다. 북한과 연계된 가장 강력한 조직이었던 조총련마저도 심각하게 타격을 받았다. 더구나 북한은 핵개발로 인해서 대북 경제제재를 받고 있고, 인권문제로 국제사회의 압박을 당하는 처지다. 북한은 국제사회로부터 완전하게 고립된 형국이고, 국제사회에서 북한을 지원할 수 있는 혁명역량도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북한은 1990년대 이후 3대혁명역량이 심각하게 쇠락했고, 남북관계에서 수세적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김정일 정권은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1990년대 초중반 본격적으로 핵개발에 착수하면서 선군

<sup>54)</sup> 통계청 북한통계, <<http://kosis.kr/bukhan/index.jsp>>.

I
II
III
IV
V

정치를 실행했다. 북한은 공식문헌을 통해서 1990년대 초 사회주의국가들이 붕괴하는 상황에서 핵개발을 추진했고, 1990년대 중반 미제와 그 연합세력의 군사적 압력과 경제 봉쇄책동 앞에서 나라와 민족의 운명이 끊길 수 있는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선군정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sup>55)</sup>

그런데 김정은 정권은 왜 남북관계의 수세적 국면에서도 민족해방 민주주의혁명이라는 대남전략 목표를 폐기하지 않았을까? 김정은 정권이 민족해방 민주주의혁명을 폐기할 가능성은 있을까? 김정은 정권이 수령유일지배 정권을 유지하려할수록, 민족해방 민주주의혁명을 결코 폐기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민족해방 민주주의혁명은 김정은 정권의 통치를 정당화하는 통치이데올로기이기 때문이다. 김정은 정권은 민족해방 민주주의혁명을 실현해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우면서 인민들의 충성과 희생을 요구한다.

북한의 대남전략은 김일성·김정일 시대를 거쳐 형성되었다. 미국과 남한은 북한의 주적이다. 남한은 미제의 식민지이고, “미제와 이승만 괴뢰들은 남조선에 파쇼통치제도를 수립하고 민주주의자들과 애국주의자들을 테로와 탄압”한다고 규정한다.<sup>56)</sup> 이러한 주적 개념은 김일성·김정일·김정은 정권에서도 변함이 없다. 북한정권과 조선노동당의 핵심목표는 북한에서 사회주의혁명을 승리하고, 남한에서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 실현하는 것이었다.<sup>57)</sup> 김일성은 미제와 이승만 정권으로부터 남조선을 해방하고 조국통일을 실현해야 한다는 명분을 가지고

55)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당력사연구소, 『우리당의 선군정치』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6), p. 8.

56) 김일성, “제3차 대회: 당 중앙위원회 사업 총결 보고,” 『북한 ‘조선로동당’대회 주요 문헌집』 (서울: 돌베개, 1988), p. 87.

57) 스킨키 마사유키 지음, 유영구 옮김, 『金正日과 수령제 사회주의』 (서울: 중앙일보사, 1994), p. 42.

6·25 전쟁을 일으켰다. 그러나 무력통일 시도는 실패했다.

북한은 6·25 전쟁 이후에도 민족해방 민주주의혁명을 고수했다. 1961년 당대회에서는 미제와 군사독재정권 타도를 주장했다. 북한의 대남전략은 미제국주의를 투쟁대상으로 설정하고, 남조선혁명은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민족해방혁명이고, 봉건세력을 반대하는 민주주의혁명이라고 규정했다. 미제와 군사정권의 식민지 통치를 분쇄해야 남한에서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조국통일을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sup>58)</sup>

와다 하루키는 북한체제가 남조선혁명을 위해서라면 군사행동도 불사한다는 자세 속에서 구축된 유격대국가라고 규정했다.<sup>59)</sup> 북한정권은 1960년대부터 군사력 강화를 시작했다. 1962년 4대 군사노선을 제시했고, 1970년 제5차 당대회에서 미제와 남조선 괴뢰도당의 침략으로부터 조국과 인민을 지키기 위해 국방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남조선혁명은 “미제국주의 침략자들을 반대하는 민족해방혁명인 동시에 미제의 앞잡이들인 지주, 매판자본가, 반동 관료배들과 그들의 파쇼 통치를 반대하는 인민 민주주의 혁명”이고, “혁명의 기본 임무는 남조선에서 미제국주의 침략 세력을 내쫓고 그 식민지 통치를 없애며 군사 파쇼 독재를 뒤집어엎고 선진적인 사회제도를 세움으로써 민주주의적 발전”을 이룩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sup>60)</sup>

북한정권은 민족해방 민주주의혁명을 북한체제와 세습독재를 정당화하는 통치이데올로기로 활용한다. 미국과 남한이라는 주적의 존재는 북한정권과 조선노동당의 강압적 통치를 정당화한다. 북한체제가 미제

<sup>58)</sup> 김일성, “제4차 대회: 당 중앙위원회 사업 총화 보고,” 『북한 ‘조선로동당’ 대회 주요 문헌집』 (서울: 돌베개, 1988), p. 225.

<sup>59)</sup> 와다 하루키 지음, 서동만·남기정 옮김, 『북조선』 (서울: 돌베개, 2005), pp. 131, 311.

<sup>60)</sup> 김일성, “제5차 대회: 당 중앙위원회 사업 총화 보고,” 『북한 ‘조선로동당’ 대회 주요 문헌집』 (서울: 돌베개, 1988), pp. 311~315.

와 남한의 고립 압살 책동으로 인해 생존의 위협을 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인민들의 희생과 충성을 요구한다. 인민들이 수령에게 절대적으로 충성하고, 미제와 남한괴뢰정권을 타도하고 민족해방 민주주의혁명을 실현해야 생존의 위기에서 궁극적으로 벗어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김정은 정권도 민족해방 민주주의혁명을 통치이데올로기로 활용했다. 제7차 당대회 사업총화보고에서 조선노동당은 김일성·김정일의 사상과 영도에 충실한 사상적 순결체, 조직적 전일체를 구축해서 위기를 극복했다고 주장했다.<sup>61)</sup> 반면에 경제 파탄의 원인이 미제와 남한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정권의 책임을 회피했다. 만성적 경제 위기의 원인은 미제의 고립 압살 책동이고, 북한인민들은 미제에 굴복하지 않고 수령과 당에 대한 충성심을 가지고 고난의 행군을 진행함으로써 위기에서 벗어났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정은 정권이 민족해방 민주주의혁명을 포기한다면, 정권의 정당성이 뿌리째 흔들릴 수 있다. 우선, 미제와 남한이라는 외부의 적이 사라진다. 북한정권은 미제의 고립·압살책동에 맞서 체제를 수호하기 위해서 수령을 중심으로 단결하고, 반동적 자본주의 문화에 맞서 싸워야 하고, 경제 위기를 참고 견뎌야 한다고 주장했다. 외부의 적이 사라진 조건에서는 국제사회에 문을 걸어 잠그는 폐쇄 정책을 실행할 이유도 없고, 유일지배체제를 유지할 필요도 없고, 북한인민들에게 경제위기를 견뎌야한다고 요구할 명분도 사라진다.

경제위기로 인한 국가 실패의 책임은 고스란히 김정은 정권에게 전가된다. 내부의 정치적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외부의 위협을 활용하기도 어렵다. 그러므로 김정은 정권은 미제와 남한을 적으로 상정하고 제시한 민족해방 민주주의혁명이라는 대남전략의 목표를 포기하지 않

---

<sup>61)</sup> 김정은, “제7차대회에서 한 당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 『로동신문』, 2016.5.8.



을 것이고, 새로운 전략도 제시하지 않을 것이다.<sup>62)</sup> 김정은 정권은 남조선혁명의 성공여부에는 큰 관심을 보이지 않을 것이고, 정권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통치이데올로기로 활용하기 위해서 민족해방 민주주의혁명이라는 대남전략의 목표를 고수할 것이다. 물론 민족해방 민주주의혁명을 실행할 수 있는 대내외적 환경이 조성되면, 김정은 정권은 즉각 행동에 나설 것이다.

### 3. 대남정책 목표와 대남요구사항

김정은 정권이 사실상 민족해방 민주주의혁명을 추진할 힘과 능력이 부족한 조건에서 김정은 정권의 대남정책은 어떤 특징을 보일까? 전통적으로 북한은 남북한의 역량관계와 대내외 정세에 맞게 대남전략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을 유연하게 바꿨다.<sup>63)</sup> 앞서 살펴본 것처럼 북한은 다른 국가들처럼 자국의 힘과 대외적 환경이라는 한계 내에서 대남정책을 실행했기 때문에 1990년대 이후 민족해방 민주주의혁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았다. 민족해방 민주주의혁명은 세습정권의 정당화를 위한 통치이데올로기로 활용됐을 뿐이다.

김정은 정권은 국가전략 차원의 과제를 해결하는 데 대남정책의 목표를 조정·활용했다. 김정은 정권에서 대남정책의 목표와 과제는 김정은 권력 안정화 여건 조성, 핵 국가 인정, 대남 주도권 장악과 대북정책 전환 유도 등이었다. 대남정책은 이러한 3가지 목표를 달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sup>62)</sup> 오경섭,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 분석(3): 통일전략과 남북관계,” (통일연구원 Online Series CO 16-14, 2016.5.13.).

<sup>63)</sup> 김동식, 『북한 대남전략의 실제』, p. 162.

I
II
III
IV
V

## 가. 목표

### (1) 김정은 권력 안정화 여건 조성

북한의 국내정치 환경은 대남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없었고, 대남정책의 변화를 시도할 여력도 없었다.<sup>64)</sup> 김정은의 권력 안정화가 최우선 목표였기 때문이다. 김정은 정권은 권력 안정화에 정치적 자원을 집중했다. 김정일의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김정은을 당·국가의 최고 지도자로 선출하는 제도적 절차를 시작했다. 김정은은 2011년 12월 당 정치국 회의에서 최고사령관에, 2012년 4월 11일 제4차 당대표자 회의에서 당 제1비서 겸 당 중앙군사위원장에, 4월 13일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5차회의에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 추대되었다.

김정은은 공식적 권력승계를 마친 후 권력 장악을 시작했다. 권력엘리트를 복종시키기 위한 핵심 수단은 공포정치였다. 김원홍이 2012년 4월 국가안전보위부장에 임명되면서 핵심엘리트 처형을 시작했다. 김정은 정권은 김철 인민무력부 부부장(2012년 초), 리영호 총참모장 숙청(2012.7.), 김근섭 조직지도부 간부부 부부장 외 7명 공개처형(2013.7.), 리룡하·장수길 당 행정부 부부장 처형(2013.11.), 장성택 당행정부장 처형(2013.12.), 변인선 총참모부 작전국장 처형(2015년 초), 조영남 국가계획위 부위원장 처형(2015년 초), 현영철 인민무력부장 처형(2015.4.), 최영진 내각부총리 처형(2015.5.), 김용진 내각부총리 처형(2016.7.) 등 2015년 말 기준으로 100여 명의 간부들을 처형했다.<sup>65)</sup>

64) 박형중, “김정은 통치 1년과 신주류의 권력 공고화 프로젝트 추진,” (통일연구원 Online Series CO 12-43, 2012.12.11.).

65) 이상현, “北김정은 ‘공포정치’ 언제까지 계획되나…잇단 처형·혁명화,” 『연합뉴스』 2016.8.31.

대남사업은 대남전략과 정책의 변화를 추구하기 어려운 분위기였다. 대남사업부문 핵심실세들은 2009년 1월~2010년 6월 사이에 제거되었다. 국가안전보위부는 노동당 통일전선부와 조평통 서기국 핵심인사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최승철 통일전선부 부부장, 권호웅 조평통 서기국 1부국장, 박경철 조평통 서기국 부국장, 장우영 조평통 서기국 부장, 김광민 통전부 북경대표부 대표, 백문길 국가안전보위부 북남대화보위국 지도원 등 대남사업 부문 핵심간부들을 처형했다.

북한의 정치적 상황은 대남사업 담당자들이 남북관계에서 양보와 타협을 선택할 수 없는 분위기였다. 대남정책 담당자들은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것보다는 대남요구사항을 관철하는 데 주력했다. 당과 군은 김정은에 대한 충성심을 과시하기 위해서 체제와 정권의 안전에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강경하고 원칙적 입장을 고수했다. 한국 정부나 한국 내에서 일어나는 김정은 비판, 북한 변화 요구, 급변사태 언급 등에는 강력한 대남비난과 위협으로 대응했다. 대남정책은 경직될 수밖에 없었다.

김정은이 대남전략과 정책의 변화를 주도할 수도 없었다. 왜냐하면 김정은은 대남전략과 정책의 변화를 시도하기에는 경험이 너무 부족했기 때문이다. 북한권력 내부에 김정은을 설득하고, 당과 군의 엘리트들을 설득할 수 있는 간부들도 존재하지 않았다. 대남전략과 정책의 변경은 통치이데올로기의 수정을 의미했다. 이것은 목숨을 건 노선투쟁을 거쳐야 가능한 일이었다. 대남사업 담당자들은 김정일의 대남전략과 정책을 유지하는 것 이외에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 (2) 핵 국가 인정

핵개발은 1990년대 이후 북한의 핵심적 국가전략 목표였다. 김정일

정권은 2006·2009년 제1·2차 핵실험을 진행했고, 수차례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진행했다. 김정은 정권은 핵무기 고도화를 통해 실전배치를 앞당기기 위해서 모든 자원을 동원했다. 핵개발은 정권의 생존수단이었고, 정치적 업적이 없는 김정은이 엘리트와 인민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었다. 김정은 정권의 핵무기 개발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라는 대가를 치러야했지만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김정은 정권은 2012년 이후 3차례의 핵실험(제3·4·5차)과 수십 차례의 장거리미사일 발사시험을 진행했다.

미국 랜드연구소는 북한이 13~21기의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핵분열성 물질을 확보했고, 2020년 핵무기 50~100개를 보유할 것이고, 2020년~2025년 사이에 장거리, 이동식, 잠수함 발사 등 핵탄두 미사일을 실전배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sup>66)</sup> 이러한 상황에서 김정은 정권의 대남정책은 민족해방 민주주의혁명이라는 대남전략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핵개발이라는 국가 전략적 목표의 영향을 더 강하게 받는다. 즉, 대남정책은 핵개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수단이다.

북한은 핵무기 보유를 기정사실화하면서 한국 정부의 북핵 반대를 거부하는 대남정책을 실행하고 있다. 북한은 핵무기 보유를 법제화했다. 2012년 4월 「사회주의 헌법」에는 ‘핵보유국’임을 명기했고, 2013년 4월 1일 최고인민회의에서 “자위적 핵보유국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할 데 대한 법”을 제정해서 핵무기 사용 원칙을 밝혔고, 2016년 제7차 당대회에서 핵보유국임을 재확인했다.

북한의 대남정책 목표는 한국 정부에게 핵무기 보유를 사실상 묵인 받는 것이다. 북한이 핵무기 보유를 묵인 받는 방법은 간단하다. 한국

---

<sup>66)</sup> “A Nuclear North Korea,” *Informing Incoming Government Leaders*, Rand Corporation, <[www.rand.org/research/primers/nuclear-north-korea.html](http://www.rand.org/research/primers/nuclear-north-korea.html)>.

정부가 일정 기간 동안 대북제재를 취한 후에 북핵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 북핵 문제와 남북관계를 분리대응하면서 남북대화에 나서고 남북관계를 개선하면 사실상 핵보유를 묵인 받는 것이나 다름없다. 북한은 한국 정부의 북핵 반대를 강하게 거부했다. 김정은 정권은 미국의 핵 위협에 맞선 자위적 조치로 핵보유를 추진한다고 주장했다. 북핵은 미국의 핵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수단이고 동족을 공갈하고 해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한국 정부는 외세의 핵은 용인하고 동족의 핵은 부인하는 이중적 행태를 중단하고, 민족의 자위적 핵무력에 대한 시비를 멈추라고 요구했다.<sup>67)</sup>

김정은 정권은 정부 대변인 성명에서 제4차 핵실험은 조선반도에 영구적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한반도 전역의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한 필수불가결의 전략적 선택, 즉 자위적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김정은 정권은 조선반도 전역의 비핵화를 주장하면서 남핵 폐기와 남조선 주변의 비핵화를 주장했다. 정부 대변인 성명은 남조선 내 미국의 핵무기 공개, 남조선 모든 핵무기와 그 기지들을 철폐하고 세계 앞에 검증, 미국이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 핵타격수단 전개 중단, 북한에 대한 핵전쟁 위협 중단과 핵불사용 약속, 남조선 핵사용권 쥔 미군 철수 등을 요구했다.<sup>68)</sup>

그러나 한국 정부의 북핵 묵인을 유도하려는 북한의 의도는 실패했다. 박근혜정부는 북핵 폐기를 목표로 유엔 차원의 대북제재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면서 강력한 대북 경제제재를 실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정은 정권은 한국 정부의 대북제재와 핵 폐기 요구에 대해서 대남비난과 위협 발언을 쏟아냈다.

67) “北 국방위, 우리 당국에 ‘중대제안,’” 『조선중앙통신』, 2014.1.16.; “북남관계 개선의 활로를 열어나가는데 한사람 같이 떨어져나서자,” 『조선중앙통신』, 2014.1.24.

68) “北 정부 대변인 성명,” 『조선중앙통신』, 2016.7.6.

### (3) 대남 주도권 장악과 대북정책 전환 유도

김정은 정권은 대남 주도권을 장악하고,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 전환을 유도하는 정책을 추진했다. 한국 정부가 대북유화정책을 실행해야 북한정권에 유리한 남북관계의 환경을 조성하고 경제적 실리를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12년 한국의 대선국면에서 대남정책의 목표는 새누리당 재집권을 저지하고, 차기 정부의 대북정책 전환을 유도하는 것이었다. 김정은 정권은 새누리당과 이명박 정부를 비난하면서 차기 정부의 대북정책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을 진행했다. 집권 5년차인 이명박 정부와의 대화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명박 정부를 상대로 남북관계의 주도권을 잡을 수 없고, 정치적·경제적 실리도 얻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북한은 이명박 정부 5년차인 2012년 이후 신정부의 대북유화정책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난했다. 박근혜정부 출범을 앞둔 2013년 국방위원회 대변인 담화와 조평통 대변인 성명에서는 “오늘 북남관계는 지난 5년처럼 또다시 대결과 전쟁이나, 아니면 대화와 평화나 하는 엄숙한 기로에 놓여있다.”고 주장했고, 이명박 정부가 남북관계를 파국에 몰아넣어 다음 정권까지 대결정책으로 몰고 가기 위해서 동족대결정책을 실행한다고 비난했다.<sup>69)</sup>

박근혜정부 출범 전에는 대북유화정책으로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서 6·15 남북공동선언과 10·4 선언 등 남북공동선언을 이행하고, 6·15 정신으로 전환해야 남북관계를 개선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sup>70)</sup> 그러나

<sup>69)</sup> “새해벽두부터 별리는 동족대결소동에 각성을 높여야한다.” 『조선중앙통신』, 2013.1.2.; “동족대결과 전쟁을 추구하는 자들은 파멸을 면치 못한다.” 『조선중앙통신』, 2013.1.3.; “민족을 배반하고 동족을 반대하는 역적무리는 비참한 종말을 면치 못한다.” 『조선중앙통신』, 2013.1.5.

<sup>70)</sup> “대결상태 해소는 조국통일을 위한 선결 과제.” 『로동신문』, 2013.1.9.; “좀 두고보자.” 『조선신보』, 2013.1.9.; “우리민족끼리가 유일한 출로.” 『조선신보』, 2013.1.28.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에는 남북관계의 주도권을 쥐고 한국 정부의 대북유화정책을 유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박근혜정부는 북한의 대남요구사항을 거부했다. 김정은 정권은 남북관계 파탄의 책임을 박근혜 정부에게 떠넘기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역적무리라고 규정했고, 온갖 욕설과 비속어를 사용해서 대통령을 실명으로 비난했다.<sup>71)</sup>

북한의 대남정책 목표는 남북 고위급 접촉(2014.2.12.), 남북 군사당국자 접촉(2014.10.15.), 남북당국회담(2015.12.12.) 등에서 제시한 대남요구사항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표 II-1>에서 보는 것처럼 김정은 정권은 비방 중상 중단, 한미합동 군사훈련 중단, 대북전단 살포 중단, 금강산관광 재개 등을 요구했다.

표 II-1 남북 접촉·회담에서 대남요구사항

	남북 고위급 접촉	남북 군사당국자 접촉	남북당국회담
회담 시기	2014년 2월 12일	2014년 10월 15일	2015년 12월 12일
대남 요구사항	- 상호 비방·중상 중단 - 군사적 적대행위 중단 - 이산가족 상봉행사 이후로 한미군사훈련 연기	- 서해 경비계선 내 한국군 함정의 진입금지 - 민간 차원의 대북전단 살포 중단 - 언론을 포함한 비방·중상 중지	- 금강산관광 재개와 이산가족 상봉 동시추진·동시이행 요구

출처: 남북회담본부, “남북 고위급 접촉(2.12) 결과”; 남북회담본부, “남북 군사당국자 접촉” 개최 브리핑; 남북회담본부, “당국회담 실무접촉 결과 브리핑 자료.”

남북 고위급 접촉에서 대남요구사항은 상호 비방·중상 중단, 군사적 적대행위 중단, 이산가족 상봉행사 이후로 한미군사훈련 연기 등이었다. 북한은 한미군사훈련을 중단시키지는 못하더라도 이산가족 상봉행사 이후로 연기하는 것을 관철함으로써 남북한 간 협상 의제로 만들

<sup>71)</sup> “조평통”,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질문장, 『조선중앙통신』, 2014.4.23.; “北 국방위원회 정책국 대변인 담화”, 『조선중앙통신』, 2014.9.27.

려는 목표를 설정했다.<sup>72)</sup> 남북 군사당국자 접촉에서 대남요구사항은 북한이 주장하는 서해 경비계선 내 한국군 함정의 진입금지, 민간 차원의 대북전단 살포 중단, 언론을 포함한 비방·중상 중지 등이었다.<sup>73)</sup> 남북당국회담에서 대남요구사항은 금강산관광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하면서 이산가족 문제와 연계시켜서 동시추진·동시이행을 요구했다.<sup>74)</sup> 북한은 DMZ 지뢰도발 이후 사회문화교류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박근혜정부의 대북유화정책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금강산관광 재개를 요구했다.

#### (4) 민족해방 민주주의혁명의 관성적 추진

김정은 정권은 김정일의 대남전략을 그대로 계승했다. 그러나 민족해방 민주주의혁명은 적극적으로 추진되지 않았다. 김정은 정권은 관성적으로 민족해방 민주주의혁명에 입각한 대남정책을 실행했을 뿐이다. 북한의 적은 미국과 한국이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특히 자주의 기치, 사회주의기치를 높이 들고 반제반미투쟁의 전초선을 지켜선 우리 공화국을 고립압살하기 위하여 악랄하게 책동”하고, “남조선당국은 미국의 포악무도한 반공화국적대행위에 추종하여 조선반도정세를 극도로 긴장시키고있으며 북남관계를 전례없는 파국”에 몰아넣었다고 비난했다.<sup>75)</sup>

김정은 정권은 한미합동 군사훈련을 비난하면서 미국과 괴뢰호전세력은 조선반도긴장격화의 주범, 북남관계 파탄의 장본인, 전쟁의 원흉

72) 남북회담본부, “「남북 고위급 접촉」(2.12) 결과,” <www.dialogue.unikorea.go.kr>.

73) 남북회담본부, “남북 군사당국자 접촉 「개최 브리핑」,” <www.dialogue.unikorea.go.kr>.

74) 남북회담본부, “당국회담 실무접촉 결과 브리핑 자료,” <www.dialogue.unikorea.go.kr>.

75) 김정은, “제7차대회에서 한 당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 『로동신문』, 2016.5.8.



이라고 주장했다. 김정은 정권은 집권 5년 동안 반미·반정부투쟁을 선동했다. 이명박·박근혜정부가 국내 정치 현안으로 인해서 정치적 반대에 부딪칠 때, 대남성명을 통해서 대남 비난공세를 펼치고, 반미·반정부투쟁에 나설 것을 선동했다.

## 나. 대남요구사항

김정은 정권은 조선중앙통신·노동신문 기사를 통해서 대남정책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대남요구사항을 제시한다. 조선중앙통신·노동신문 기사에서 제시한 대남요구사항은 5개로 유형화할 수 있다. 각각의 유형은 대남정책의 목표에 따른 구체적 대남요구사항을 담고 있다. 조선중앙통신·노동신문 기사유형은 <표 II-2>와 같다.

**표 II-2** 조선중앙통신·노동신문 기사 유형<sup>76)</sup>

종류	대남요구사항	대남 성명 통한 대남요구사항
1유형	북한체제·지도자 비방 중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고존엄 모독 중단</li> <li>- 민족의 대국상에 저지른 대역죄 사죄</li> <li>- 북 지도부 주민 분리대응 중단</li> <li>- 반공화국심리모략전 중단</li> <li>- 반공화국인권모략광대극 중단</li> <li>- 급변사태와 체제전복 유도 중단</li> </ul>
2유형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 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남대화제안 거부</li> <li>- 금강산관광 재개 거부</li> <li>- 남북협력사업 중단</li> <li>- 6·15 공동선언, 10·4 선언 전면이행</li> <li>- 비핵·개방·3000 폐기</li> <li>- 천안호 사건과 연평도포격전 비난 중단</li> </ul>

<sup>76)</sup> 필자는 2011년 12월 17일 김정일 사망 이후 김정은 집권 5년 동안 조선중앙통신·노동신문에 보도된 남북관계 관련 기사를 분석해서 5가지로 유형화했다.

종류	대남요구사항	대남 성명 통한 대남요구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남교류협력을 민족 평화번영·공리공영 위해 재개</li> <li>- 개성공업지구 활성화</li> <li>- 금강산관광 재개</li> </ul>
3유형	한미합동 군사훈련 중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키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 중단</li> <li>- 《태극》훈련 중단</li> <li>- 《을지프리덤가디언》합동군사연습 중단</li> <li>- 연평도·백령도 일대 대규모 북침전쟁연습 중단</li> <li>- 대규모 합동군사연습 전면 중지</li> <li>-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li> </ul>
4유형	핵보유 정당화와 한국 정부의 묵인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핵 폐기 요구 중단</li> <li>- 미국의 확장된 핵억제력 거부 및 남핵 폐기 선행</li> <li>- 핵재난 방지 위한 현실적 조치</li> <li>- 남조선당국이 미국의 핵타격수단들을 조선반도와 그 주변지역에 끌어들이는 행위 중단</li> <li>- 남조선당국은 민족의 자위적핵무력에 대한 시비 중단</li> </ul>
5유형	남한 내 반미·반정부 투쟁 선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조선 진보세력 탄압 중단</li> <li>- 《보안법》 등 반민족적, 반통일적 악법 철폐</li> <li>- 엄정한 정권심판으로 민족화해정부 출범</li> </ul>

참고: 『조선중앙통신』, 『로동신문』, (2011.12.17.~2016.6.30.) 남북관계 관련 기사 분석을 토대로 작성.

김정은 정권은 집권 5년 동안 정부·조평통·국방위 등의 성명을 통해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거의 동일한 대남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예컨대, <표 II-3>·<표 II-4>·<표 II-5>·<표 II-6>에서 보는 것처럼, 2012년과 2014년 조선중앙통신 기사 중에서 대표적인 기사를 분석해 보면, 조평통 서기국 백서와 국방위원회 정책국 공개질문장, 남조선당국과 여러 정당, 사회단체들, 각 계층 인민들에게 보내는 공개서한과 조평통 진상공개장·공개질문장 등을 통해서 5개 유형의 대남요구사항을 제시했다.

**표 II-3** >> 조평통 서기국 백서(2012.1.12.)

유형	대남요구사항
1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의 변화유도 중단</li> <li>- 급변사태 언급 중단</li> <li>- 북 지도부 주민 분리대응 중단</li> <li>- 대북심리전 중단</li> <li>- 반공화국인권모략광대극 중단</li> <li>- 최고존엄 모독 중단</li> </ul>
2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남대화제안 거부</li> <li>- 금강산관광 재개 거부</li> <li>- 남북협력사업 중단</li> </ul>
3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키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 중단</li> <li>- 《태극》훈련 중단</li> <li>- 《을지프리덤가디언》합동군사연습 중단</li> <li>- 연평도·백령도 일대 대규모 북침전쟁연습</li> </ul>
4유형	- 없음
5유형	- 남조선 진보세력 탄압 중단

출처: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백서,” 『조선중앙통신』, 2012.1.12.

**표 II-4** >> 국방위원회 정책국 공개질문장(2012.2.1.)

유형	대남요구사항
1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족의 대국상에 저지른 대역죄 사죄</li> <li>- 최고존엄 건드리고 제도와 일심단결 흔들어보려는 행동 중단</li> <li>- 반공화국심리모략전 중단</li> <li>- 급변사태와 체제전복 유도 중단</li> </ul>
2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6·15 공동선언, 10·4 선언 전면 이행</li> <li>- 원칙론 폐기</li> <li>- 비핵·개방·3000 폐기</li> <li>- 천안호 사건과 연평도포격전 비난 중단</li> <li>- 북남교류협력을 민족의 평화번영과 공리공영의 방향에서 재개</li> <li>- 개성공업지구 활성화</li> <li>- 금강산관광 재개</li> </ul>

I  
II  
III  
IV  
V

유형	대남요구사항
3유형	- 대규모 합동군사연습 전면 중지 - 《키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 중단 -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
4유형	- 핵포기와 관련한 진정성 확인 요구 부당 - 북핵 폐기 요구 중단 - 미국의 확장된 핵억제력 거부 및 남핵 폐기 선행
5유형	- 《보안법》 등 반민족적, 반통일적 악법 철폐 - 엄정한 정권심판으로 민족화해정부 출범

출처: “北 국방위 정책국, 南당국에 공개질문장 발표,” 『조선중앙통신』, 2012.2.1.

**표 II-5** ▶ 남조선당국과 여러 정당, 사회단체들, 각 계층  
인민들에게 보내는 공개서한(2014.1.16.)

유형	대남요구사항
1유형	- 뼈라 살포 중단 - 대북심리전 중단
2유형	- 이산가족 상봉행사 - 금강산관광 재개 - 북남협력과 교류 활성화
3유형	- 한미합동 군사훈련 전면 중단 - 서해 5개섬 열점수역 등 모든 군사적 적대행위 중단
4유형	- 핵재난 방지 위한 현실적 조치 - 남조선당국이 미국의 핵타격수단들을 조선반도와 그 주변지역에 끌어들이는 행위 중단 - 남조선당국은 민족의 자위적핵무력에 대한 시비 중단
5유형	- 없음

출처: “북남관계 개선의 활로를 열어나가는데 한사람 같이 떨쳐나서자,” 『조선중앙통신』, 2014.1.24.

표 II-6

조평통 진상공개장과 공개질문장(2014.4.23.)

유형	대남요구사항
1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고준엄과 체제 모독 중단</li> <li>- 북 체제불안정 주장 중단</li> <li>- 반공화국모략선전과 인권소동 중단</li> <li>- 대북베라 살포 중단</li> <li>- 대북심리전 중단</li> </ul>
2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북관계 개선 노력</li> <li>- 체제대결 중단과 흡수통일 포기</li> <li>- 급변사태 등 동족대결정책 포기</li> <li>- 5·24 조치 해제</li> <li>- 서해평화협력지대 설치</li> <li>- 7·4 공동성명, 6·15 공동선언, 10·4 선언 이행</li> </ul>
3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침전쟁연습 중단</li> <li>- 한미합동 군사훈련 중단</li> <li>- 미국 핵무기와 침략군대 철수</li> </ul>
4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핵·미사일 반대 중단</li> <li>- 핵·경제 병진노선 비난 중단</li> <li>- 선 핵포기 요구 철회</li> </ul>
5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보안법 폐지</li> </ul>

출처: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진상공개장,” 『조선중앙통신』, 2014.4.14.; “조평통,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질문장,” 『조선중앙통신』, 2014.4.23.

조선중앙통신·노동신문 기사에서 나타난 대남요구사항의 유형은 제1유형 북한체제·지도자 비방 중단, 제2유형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 전환, 제3유형 한미합동 군사훈련 중단, 제4유형 핵보유 정당화와 핵보유 국가 인정, 제5유형 남한 내 반미·반정부 투쟁 선동 등이다. 제1·3유형은 김정은 권력 안정화 여건 조성, 제2유형은 대남 주도권 장악과 대북정책 전환유도, 제4유형은 핵보유 국가 인정, 제5유형은 민족해방 민주주의혁명의 관성적 추진을 목표로 한다.

제1유형은 북한체제·지도자 비방 중단을 요구하는 기사다. 권력승계 이후 김정은 정권의 핵심목표는 정권 안정화였다. 북한은 한국 정부

I  
II  
III  
IV  
V

의 김정은과 북한체제 비판에 강하게 반발했고 비타협적으로 대응했다. 한국 정부의 김정은과 북한체제 비판을 방치할 경우, 김정은 정권에 대한 엘리트들의 태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북한은 한국 정부에게 김정은 비난 중단, 체제 변화 시도 중단, 삐라 살포 중단, 대북심리전 중단 등을 요구했다. 조평통은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북한 변화 유도, 급변사태, 대북심리전 등 극악한 동족 대결과 반공화국 모략소동을 벌였고, 민족의 대국상 앞에 대역죄를 짓고, 최고존엄을 모독했다고 비난했다.<sup>77)</sup>

제2유형은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 전환을 요구하는 기사다. 북한은 대남주도권을 쥐고 경제 지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국의 대북정책 전환을 요구했다. 북한은 한국의 대북정책을 대결정책으로 규정하면서 이명박·박근혜 대통령과 외교안보 분야 고위공직자를 비난했다. 또 한국 정부가 6·15 남북공동선언, 10·4 선언 이행, 5·24 조치 해제, 금강산관광 재개 등의 조치를 취하고, 대결정책을 대북유화정책으로 전환해서 남북교류협력을 활성화하라고 요구했다.<sup>78)</sup>

제3유형은 한미합동 군사훈련을 비난하는 기사다. 북한은 연례적으로 실행하는 한미합동 군사훈련을 북침전쟁 도발책동으로 규정하면서 강력하게 반발했다. 북한은 한미합동 군사훈련 중단과 평화협정 체결을 요구했고, 한미 양국의 군사적 위협을 부각시키면서 핵개발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활용했다. 김정은 정권은 매년 한미합동 군사훈련에 맞춰서 훈련중단을 요구하는 기사를 내보냈다. 한미합동 군사훈련은 전쟁연습책동으로 규정하면서 비난했다.<sup>79)</sup>

77)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백서,” 『조선중앙통신』, 2012.1.12.; “우리의 최고존엄을 모독한자들은 천벌을 면할 수 없다,” 『조선중앙통신』, 2012.1.17.; “조선인민군 전선부대들의 공개 통고,” 『조선중앙통신』, 2015.3.22.

78) “北 국방위원회 정책국 대변인 담화,” 『조선중앙통신』, 2015.3.24.

79) “北 「조평통」 대변인 담화,” 『조선중앙통신』, 2012.2.4.; 우리의 경고를 오판하지

제4유형은 북한의 핵보유 정당화와 한국 정부의 묵인을 요구하는 기사다. 북한은 자국을 ‘책임있는 핵보유국’으로 규정하면서 주권국가의 합법적 권리라고 주장한다. 김정은 정권은 북한의 핵은 미국의 핵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자위적 수단이고, 동족을 위협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북한은 핵개발 중단이나 핵포기를 하지 않는다고 선언했고, 한국 정부가 북핵을 묵인해야 남북관계를 개선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sup>80)</sup>

제5유형은 반미·반정부 투쟁 선동 기사다. 북한은 여전히 민족해방 민주주의혁명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정부를 정치적 궁지에 몰아넣기 위해서 한국의 내정에 간섭하면서 반미·반정부 투쟁을 선동한다. 북한은 남한에서 통일전선전술 실행, 한국의 국내정치 간섭, 반정부 투쟁 선동, 국가보안법 폐지, 남남갈등 유발 등을 실행했다. 김정은 정권은 반역정권 타도를 주장하면서 남한국민들이 이명박·박근혜 정권 타도에 나설 것을 공공연하게 선동했다.<sup>81)</sup>

말라,” 『조선중앙통신』, 2016.3.9.

80) “北 국방위, 우리 당국에 ‘중대제안,’” 『조선중앙통신』, 2014.1.16.; “북남관계 개선의 활로를 열어나가는 데 한사람 같이 떨쳐나서자,” 『조선중앙통신』, 2014.1.24.;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성명,” 『조선중앙통신』, 2013.1.25.; “『조평통』 서기국보도 제1019호,” 『조선중앙통신』, 2013.2.2.; “동족대결 정권이 남긴 교훈, 되풀이되지 말아야 할 ‘잃어버린 5년,’” 『조선신보』, 2013.2.27.; “북 국방위 인민무력부 대변인 담화,” 『조선중앙통신』, 2013.3.13.; “『조평통』 대변인 담화,” 『조선중앙통신』, 2013.4.1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성명,” 『조선중앙통신』, 2016.1.6.; “『조평통』성명,” 『조선중앙통신』, 2016.2.11.; “한시바삐 역사의 오물통에 처넣어야 할 특등재앙거리,” 『조선중앙통신』, 2016.2.20.

81) “반역정권타도, 이것이 지난 4년간의 총화이다,” 『조선중앙통신』, 2012.2.25.; “동족대결의 악몽을 되살리려는 행위,” 『조선중앙통신』, 2013.1.1.; “『농근맹』 대변인 담화,” 『조선중앙통신』, 2015.4.6.; “조선중앙통신사 고발장,” 『조선중앙통신』, 2016.2.1.; “박근혜당의 반인민적악정으로 무참히 수장된 나이 어린 명훈들의 피맺힌 원한을 풀자,” 『조선중앙통신』, 2016.4.9.;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보도 제1069호,” 『조선중앙통신』, 2014.7.24.;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백서,” 『조선중앙통신』, 2016.5.2.

## 다. 대남요구사항과 남북관계

북한의 대남요구사항은 남북관계에 직접적 영향을 미쳤다. 북한정권은 남북관계에서 자신들의 대남요구사항을 관철하려고 한다. 한국 정부가 대남요구사항에 수용적 태도를 취할 때, 남북관계는 개선되었다. 그러나 대남요구사항을 거부할 때, 남북관계는 악화되었다. 특히 북한의 핵능력이 발전하면서 북핵에 대한 한국 정부의 태도는 남북관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김대중·노무현정부는 북한의 대남요구사항을 대부분 수용하는 태도를 취했다. 양 정부는 북한의 핵개발에 대해서 적극적인 제재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김대중 정부는 북핵 불용을 주장했다. 그러나 김대중 전 대통령은 2000년 인터뷰에서 “김정일은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겠다는 합의를 지키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sup>82)</sup>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6년 10월 제1차 핵실험 후에 “(핵 보유가 억제수단이라는) 북한의 주장이 일리 있는 측면이 있다.”고 언급하면서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한반도를 선제공격할 것인가 하는 이런 문제를 냉정하게 짚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sup>83)</sup> 노무현정부는 북한이 제1차 핵실험을 실시한 이후에도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는 무관하게 대북 경제지원을 늘렸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7년 10월 3일 제2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래서 나는 지난 5년 동안 내내 북핵문제를 둘러싼 북측의 6자회담에서의 입장을 가지고 미국과 싸워왔고, 국제무대에 나

<sup>82)</sup> 김동하, “北 대화 뒤서 核실험 증명됐는데… 초당적 협력 외면한 野,” 『문화일보』, 2016.09.13.

<sup>83)</sup> 이영중, “노무현 “북핵 일리있는 측면있다”…MB는 6자회담만 믿어,” 『중앙일보』, 2016.09.13.



가서 북측 입장을 변호해 왔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내가 행동하면서, 미국하고 딱 끊고 당신 잘못했다고 하지 못한 것은 미국이 회담장을 박차고 떠나 버리면, 북측도 좋은 일이 아니겠지만, 우리 남측으로 봐서도 좋지 않습니다.<sup>84)</sup>

노무현정부는 남북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을 의식해서 북한인 권결의안 표결 찬성 문제를 남북채널을 통해서 묻기로 하고, 북한의 부정적 반응을 받은 후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표결에 기권했다.<sup>85)</sup> 남북관계는 밀월관계였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김대중·노무현정부를 거치면서 합의에 도달한 남북한 간 거래조건의 변경을 시도했다. 이명박 정부는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을 수용하지 않았고, 북한의 대남요구사항을 선별적으로 수용했다. 남북한 간 거래조건 변경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핵심쟁점은 북핵문제였다. 이명박 정부는 비핵·개방·3000 정책을 통해서 북한의 비핵화와 개혁·개방을 요구했다.

2008년 7월 금강산관광객인 박왕자씨 피격사건이 발생하면서 금강산관광을 중단했다. 대북 경제지원은 2010년 천안함 폭침 이후 5·24 조치를 취하면서 전면 중단됐다. 2013년 제3차 핵실험은 남북관계를 거의 단절시켰다. 이명박 대통령은 2013년 2월 15일 청와대에서 ‘국민원로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북한과의 협상이나 대화로 핵을 포기시킬 수 없다.”면서 “(북한의) 정권이 바뀌고 무너지기 전에 핵을 포기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없다.”고 밝혔다.<sup>86)</sup>

박근혜정부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추진했으나 북한의 대남정책

84)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전문,” 『동아일보』, 2013.6.26., p. 43. <<http://news.donga.com/3/all/20130626/56124124/1>>.

85) 송민순, 『빙하는 움직인다』 (서울: 창비, 2016), pp. 446~454.

86) “李대통령 “北정권, 협상-대화로는 핵포기 못 시켜,” 『동아일보』, 2013.2.15.

목표와 대남요구사항을 수용하지 않았다. 북핵 폐기는 남북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 목표였다. 박근혜정부는 국제공조를 통한 대북제재를 추진했고, 5·24 조치를 고수함으로써 경제적 지원도 늘리지 않았고, 북한체제의 변화를 요구했다. 북한이 2016년 1월 4차 핵실험을 진행하면서 남북관계는 완전히 단절되었다. 박근혜정부는 개성공단을 폐쇄했고, 국제사회와 함께 강력한 대북제재를 추진했다.

조선중앙통신·노동신문 기사를 분석하면, 김정은 정권은 한국 정부를 상대로 김정은 권력 안정화 여건 조성, 핵 국가 인정, 대남 주도권 장악과 대북정책 전환 유도 등 대남정책 목표를 관철하고, 북한체제·지도자 비방 중단,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 전환, 한미합동 군사훈련 중단, 핵보유 정당화와 한국 정부의 북핵 묵인 유도, 남한 내 반미·반정부 투쟁 선동 등 대남요구사항을 관철하려한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그러나 박근혜정부는 제3차~제5차 핵실험을 단행하면서 핵개발을 추진하고, 남북한 간 신뢰를 저버린 북한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고, 대북제재를 강화했다. 남북관계는 경색되었다.

### Ⅲ. 군집별 대남정책의 특징

오경섭(통일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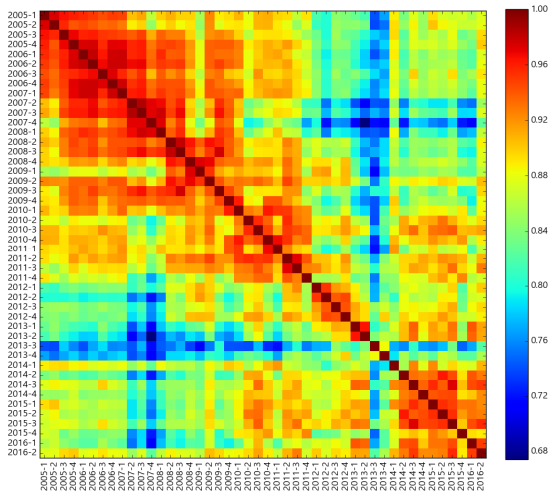


김정은 정권의 대남정책은 2012년 1분기~2016년 2분기까지 18개 분기(54개월)로 구분한다. 이 기간 동안 노동신문에서 대남정책 문서를 추출해서 텍스트마이닝으로 분기별 대남정책을 군집화하고, 군집별 대남정책의 특징을 분석한다. 이명박·박근혜정부가 김정은 권력 안정화 여건 조성, 핵 국가 인정, 대남 주도권 장악과 대북정책 전환 유도 등 대남정책 목표를 거부하면서 김정은 정권의 대남정책은 16개 분기(48개월)가 대결국면이었고, 2개 분기(6개월)만 유화국면이었다.

## 1. 분기별 대남정책 군집화: 대결국면과 유화국면

〈그림 III-1〉 문서 간 유사도 시각화와 〈그림 III-2〉 분기별 대남정책의 계층적 군집화를 이용해서 김정은 정권의 분기별 대남정책을 유사한 특성을 가진 서로 다른 군집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림 III-1 문서 간 유사도 시각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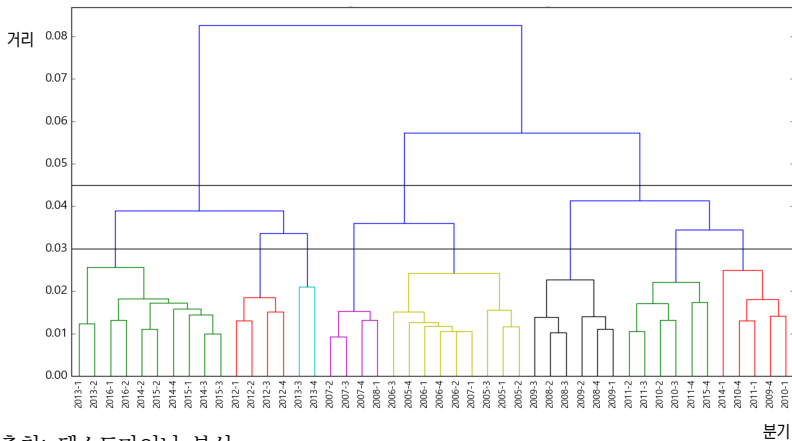


출처: 텍스트마이닝 분석.

우선 <그림 III-1> 문서 간 유사도 시각화는 12년 동안 사용된 명사의 개수가 38,627개였다. 각 연도를 분기별로 나누면 총 48개의 문서가 생성된다. 이들의 상관관계를 시각화하면 <그림 III-1>과 같다. 빨간색에 가까울수록 서로 유사한 단어들을 사용했다는 의미이다. 대략적으로 노무현정부 시기인 2005년 1분기~2008년 1분기까지는 서로 유사한 패턴을 보인다. 그러나 2012년 이후 이명박·박근혜정부에서는 사용하는 단어가 확연하게 달라진다. 북한의 대남정책이 크게 달라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III-2> 분기별 대남정책의 계층적 군집화는 김정은 정권에서 분기별 대남정책을 유사한 특성을 가진 서로 다른 군집으로 분류하는데 유용하다.

**그림 III-2** 분기별 대남정책의 계층적 군집화



출처: 텍스트마이닝 분석.

<그림 III-2> 분기별 대남정책 계층적 군집화에서 거리를 0.045로 절단하면 2개 군집(A·B군집)이 형성되고, 거리를 0.03으로 절단하면 5개 군집으로 구분된다. 거리를 0.03으로 절단할 경우, A군집은 a군집

(2013년 1~2분기, 2016년 1~2분기, 2014년 2분기와 2015년 2분기, 2014년 4분기, 2015년 1분기, 2014년 3분기와 2015년 3분기), b군집(2012년 1~4분기), c군집(2013년 3~4분기)으로 구분한다. B군집은 d군집(2015년 4분기), e군집(2014년 1분기)으로 구분한다.

A군집과 B군집은 서로 다른 특징을 갖는다. <표 III-1> 단어 빈도수 분석 통한 군집의 특징을 보면 각 시기별로 자주 등장하는 단어를 통해서 그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sup>87)</sup> A군집은 괴뢰·역적·도발 등 적대적인 단어의 빈도수가 높고, B군집은 평화·북남관계·개선 등 유화적 단어의 빈도수가 높다. A군집은 남북한이 서로 대립하는 대결국면이고, B군집은 남북한이 남북관계 개선을 모색하는 유화국면이다.

표 III-1 단어 빈도수 분석 통한 군집의 특징: 대남정책

(단위: 건)

A군집(대결국면)						B군집(유화국면)			
a군집		b군집		c군집		d군집		e군집	
단어	빈도수	단어	빈도수	단어	빈도수	단어	빈도수	단어	빈도수
우리	34,710	우리	13,387	우리	2,810	남조선	2,588	우리	3,919
남조선	23,054	남조선	8,911	남조선	2,274	우리	1,973	민족	2,668
미국	21,517	리명박	7,896	인민	2,172	미국	1,464	미국	2,632
민족	14,358	민족	7,459	조국	1,732	당국	953	통일	2,251
통일	13,923	통일	6,539	통일	1,644	인민	901	남조선	2,204
괴뢰	13,081	인민	6,528	조선	1,573	민족	859	평화	1,560
인민	11,743	패당	6,248	민족	1,529	통일	819	조국	1,329
조국	10,077	미국	6,116	미국	1,152	력사	797	북남관계	1,285
대한	9,548	괴뢰	4,671	대한	1,141	대한	756	대한	1,144
전쟁	9,285	전쟁	4,611	괴뢰	1,139	공화국	587	인민	1,131
공화국	9,009	역적	4,235	투쟁	1,041	북남관계	551	개선	1,129

87) 자세한 내용은 부록1 참조.

A군집(대결국면)						B군집(유화국면)			
a군집		b군집		c군집		d군집		e군집	
단어	빈도수	단어	빈도수	단어	빈도수	단어	빈도수	단어	빈도수
나라	7,764	조국	4,189	전쟁	1,019	전쟁	535	나라	1,125
조선	7,534	대한	4,102	나라	1,015	조선반도	519	전쟁	1,076
미제	6,056	동지	3,516	수령	980	투쟁	518	조선반도	1,047
대결	5,685	조선	3,349	승리	877	집권	504	투쟁	882
도발	5,652	대결	3,346	장군	862	평화	484	당국	835
평화	5,636	도발	3,288	동지	854	대결	481	거래	749
당국	5,630	나라	3,166	경애	826	조국	451	경애	735
혁명	5,599	공화국	3,085	혁명	780	나라	426	제안	721
세계	5,586	선언	3,021	세계	701	조선	420	자주	718
침략	5,580	장군	2,755	공화국	683	민중	420	조선	715
조선반도	5,432	책동	2,725	평화	678	개선	417	세계	709
박근혜	5,430	역도	2,679	력사	657	문제	411	공화국	697
책동	5,232	평화	2,556	정보원	626	교과서	403	위원회	662
력사	5,205	혁명	2,488	원수	618	책동	394	문제	655
북남관계	5,203	투쟁	2,481	책동	580	국정	392	군사	635
패당	5,122	공동	2,445	자주	550	도발	390	책동	588
수령	5,059	경애	2,199	해방	537	세력	362	군사연습	582

출처: 텍스트마이닝 분석.

김정은 정권의 분기별 대남정책을 군집화하면, <표 III-2>와 같이 대결국면인 A군집이 주를 이룬다. 2012년 1분기 이후 총 18개 분기에서 김정은 정권의 대남정책은 대결국면이 16개 분기(48개월)이고, 유화국면이 단 2개 분기(6개월)이다.<sup>88)</sup> 이 분석결과를 보면, 김정은 정권은 강경한 대남정책 기조를 유지했고, 남북관계는 대부분 대결국면이었다. 2개 분기의 유화국면도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 변화 즉, 대남요구 사항의 수용을 전제로 한 조건부 대화를 제시했다. 김정은 정권은

<sup>88)</sup> <그림 III-2>에서 2005년~2007년까지 노무현정부 시기는 유화국면에 해당한다.



한미합동 군사훈련 중단을 요구하고 박근혜정부를 비난하면서 남북관계 개선을 모색했다.

**표 III-2** 분기별 대결국면과 유화국면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분기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대남 태도	대결								유 화	대결								유 화	대결	

출처: 필자 작성.

그렇다면 김정은 정권에서 남북관계는 왜 유화국면이 2개 분기에 불과하고, 대결국면이 16개 분기로 주를 이뤘을까? <표 III-3> 계층적 군집과 주요 사건을 보면 대결국면과 유화국면에서 남북한 간에 발생한 주요 사건들을 확인할 수 있다. 대결국면인 A군집에서는 제3차·제4차 핵실험, 한미합동 군사훈련, NLL 충돌, DMZ 지뢰도발, 개성공단 사태, 고위급 접촉 무산, 이명박 정부 5년차 등의 주요 사건이 있었다.

이러한 사건들은 남북한 간 대립을 심화시켰다. 김정은 정권은 북한 체제·지도자 비방 중단, 한국의 대북정책 전환, 한미합동 군사훈련 중단, 북한의 핵보유 정당화와 한국 정부의 묵인 등을 요구했다. 한국 정부는 북핵 대북제재를 실행하면서 북한의 대남요구사항을 거의 수용하지 않았다. 북한은 핵 폐기를 거부했다. 남북관계는 북핵 문제의 제약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대결국면이 지속되었다.

표 III-3 계층적 군집과 주요 사건

거리(0.045)		거리(0.03)			
군집	특징	군집	분기	주요 사건	
A	대결	a	2013년 1~2분기	- 제3차 핵실험 - 남북한 긴장 고조 - 개성공단 가동중단 사태	
			2016년 1~2분기	- 제4차 핵실험	
			2014년 2분기, 2015년 2분기	- 각종 남북한 현안 비난	
			2014년 4분기	- NLL 충돌 - 대북전단 살포 중단 요구	
			2015년 1분기	- 한미합동 군사훈련 중단 - 대북전단 살포 중단 요구	
			2014년 3분기, 2015년 3분기	- 을지훈련 중단 - DMZ 지뢰도발	
B	유화	b	2012년 1~4분기	- 김정은 권력승계 - 이명박 정부 비난 - 박근혜 후보 비난	
			c	2013년 3~4분기	- 을지훈련 비난 - 이산가족 상봉행사 취소 - 대남비난
				d	2015년 4분기
e	2014년 1분기	- 신년사 이후 대화공세 - 남북고위급 접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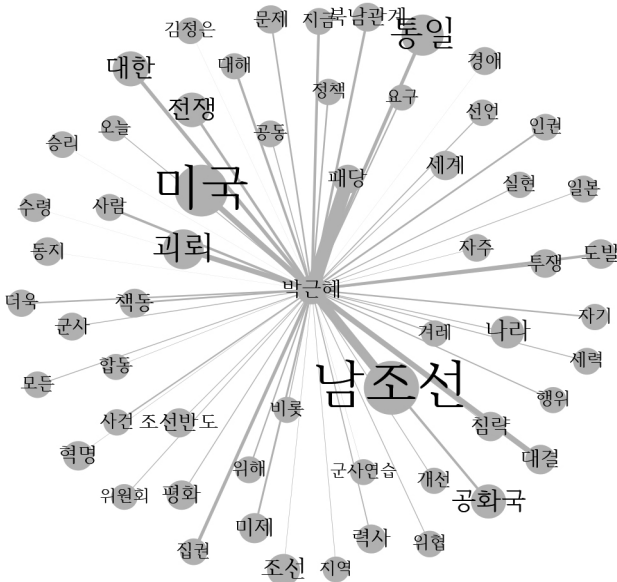
출처: 필자 작성.

유화국면인 B군집은 2014년 1분기에 신년사 후 대화공세 및 남북고위급 접촉, 2015년 4분기에 DMZ 지뢰도발 합의 등의 주요 사건이 있었다. 김정은이 2014년 신년사에서 남북대화를 제안한 후 대남사업 부서들은 대대적으로 대화공세를 전개했다. 그러나 남북고위급 접촉(2014.2.12.)이 한미합동 군사훈련에 대한 이견으로 인해서 성과를 거두지 못하면서 남북관계는 대결국면으로 돌아갔다. 2015년 4분기는

DMZ 지뢰도발 합의 이후 일시적으로 남북관계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북한이 2016년 1월 6일 제4차 핵실험을 감행하면서 다시 대결국면이 조성되었다.

A군집과 B군집의 차이는 <그림 III-3>·<그림 III-4> 박근혜의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박근혜와 함께 등장한 단어는 A군집에서 미국·괴뢰·패당·전쟁·대결 등의 단어와 많이 사용되었다. B군집에서는 리명박·새누리당이라는 단어와 많이 사용되었다. A군집은 B군집에 비해서 ‘박근혜’와 함께 대결적인 단어들이 많이 사용되었고, 이 시기가 대결국면이었다는 점을 보여준다. B군집은 리명박 정부의 대결정책을 비판하면서 남북관계 개선을 요구했기 때문에 ‘리명박’이라는 단어가 많이 사용된 것으로 분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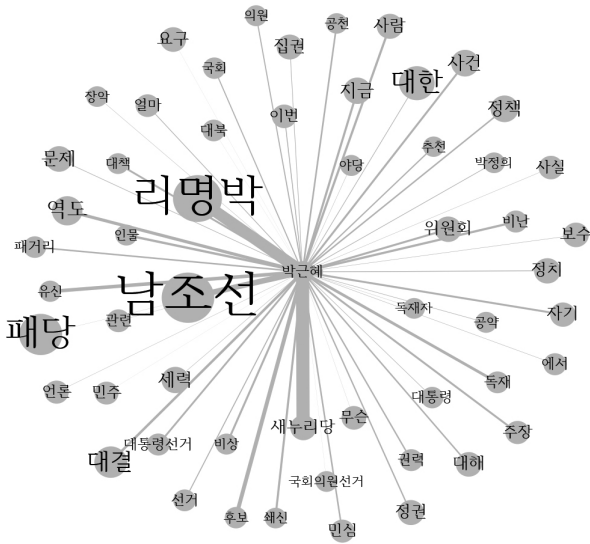
**그림 III-3** A군집에서 박근혜의 네트워크 분석



출처: 텍스트마이닝 분석.

I
II
III
IV
V

그림 III-4 B군집에서 박근혜의 네트워크 분석



출처: 텍스트마이닝 분석.

## 2. 군집별 대남정책 특징: 토픽 모델링을 이용한 분석

군집별 대남정책의 특징을 구명하기 위해서는 A군집과 B군집을 구성하는 하위 군집을 분석해야 한다. 하위군집은 A군집에서 a·b·c군집, B군집에서 d·e군집 등 5개 군집이다. 군집별 대남정책 특징은 토픽 모델링을 이용해서 각 군집에서 어떤 토픽이 왜 사용됐는지를 분석함으로써 특정 분기가 왜 대결국면인지, 왜 유화국면인지를 밝힐 것이다.

〈표 III-4〉 토픽 모델링은 총 10개의 토픽으로 구성된다. 10개 토픽은 서로 다른 주제이고, 많이 사용된 단어도 서로 다르다. 예컨대 토픽1은 이명박 정부 비판을 주제로 한 말뭉치다. 주로 사용된 단어는 전쟁·사건·역도·리명박·미제·부정부패·검찰 등이다. 토픽2는 김정은 우상화

를 주제로 한 말뭉치다. 주로 사용된 단어는 혁명·수령·승리·건설·사회주의·김정은 등이다. 토픽3은 한미합동 군사연습 비난을 주제로 한 말뭉치다. 주로 사용된 단어는 전쟁·미제·침략·도발·군사연습 등이다.

이 10개의 토픽이 군집별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분석하면, 분기별 대남정책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다. 10개 토픽 중에서 대결국면에 주로 사용된 토픽은 토픽3·4·5였고, 유화국면에 주로 사용된 토픽은 토픽6·8이었다. 이 중에서 가장 뚜렷한 차이가 드러나는 토픽은 토픽4와 토픽8이었다. 토픽4가 많이 사용된 군집은 대결국면이었고, 토픽8이 많이 사용된 군집은 유화국면이었다.

표 III-4 토픽 모델링

토픽1	토픽2	토픽3	토픽4	토픽5	토픽6	토픽7	토픽8	토픽9	토픽10
전쟁	혁명	전쟁	박근혜	패당	선언	일본	평화	성명	일본
사건	수령	미제	인권	대결	공동	투쟁	조선반도	미제	사회
역도	승리	침략	집권	리명박	거래	규탄	문제	다음	대한
리명박	건설	도발	패당	도발	자주	단체	북남관계	평화	사람
해방	높이	조선반도	대한	공화국	수령	대한	공화국	세계	범죄
미제	사회주의	군사	파쇼	전쟁	애국	요구	정책	침략	공화국
승리	김정은	합동	새누리당	북남관계	력사	주장	대한	민주주의	세계
대한	력사	군사연습	세력	역적	투쟁	정부	개선	조선반도	문제
수령	대한	타격	리명박	대한	운동	집회	대결	책동	인권
부정부패	령도	지역	사건	동족	위업	정보원	전쟁	인민공화국	행위

출처: 텍스트마이닝 분석.

표 III-5 토픽 주제

토픽	태도	주제	주로 사용된 단어
1	-	한국 정부 비난	전쟁·사건·역도·리명박·미제·부정부패·검찰
2	-	김정은 우상화와 사회주의 승리	혁명·수령·승리·건설·사회주의·김정은
3	대결	한미합동 군사연습 비난	전쟁·미제·침략·도발·군사연습
4	대결	박근혜정부 비난	박근혜·인권·집권·패당·파소
5	대결	한국의 적대정책 비난	패당·대결·리명박·도발·전쟁·역적·북침
6	유화	남북공동선언 이행 요구	선언·공동·거래·자주
7	-	반정부 투쟁 선동	일본·투쟁·규탄·단체·집회·민중
8	유화	남북관계 개선	평화·조선반도·북남관계·개선·대결
9	-	미국 비난과 평화 요구	성명·미제·평화·세계·침략·조선반도
10	-	한국사회 비난	일본·사회·범죄·세계·인권

출처: 텍스트마이닝 분석.

### 3. 대결국면(A군집)의 대남정책 특징

#### 가. a군집(10개 분기)

##### (1) 토픽 분석

a군집은 18개 분기(54개월) 중에서 <표 III-6> 분기별 주요 사건에서 보는 것처럼 10개 분기(30개월)로 가장 오랜 기간이다. a군집은 <표 III-6> 분기별 주요 사건과 같이 제3·제4차 핵실험, 한미합동 군사훈련, NLL 충돌, 대북전단 살포 중단, 남북고위급 접촉 무산, DMZ 지뢰도발 등의 사건이 발생했다. 이 시기에 북한의 대남정책은 대결정책이었다. 남북관계는 경색국면이었다.

표 III-6 a군집 주요 사건

분기	주요 사건
2013년 1~2분기	- 제3차 핵실험 - 남북한 긴장 고조 - 개성공단 가동중단 사태
2016년 1~2분기	- 제4차 핵실험
2014년 2분기, 2015년 2분기	- 각종 남북한 현안 비난
2014년 4분기	- NLL 충돌 - 대북전단 살포 중단 요구
2015년 1분기	- 한미합동 군사훈련 중단 - 대북전단 살포 중단 요구
2014년 3분기, 2015년 3분기	- 을지훈련 중단 - DMZ 지뢰도발

출처: 필자 작성.

〈그림 III-5〉 a군집 토픽 분포를 보면, 김정은 정권은 남북관계에서 대결적 태도를 취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a군집에서는 대결국면에서 사용된 토픽인 토픽3(한미합동 군사연습 비판, 0.16), 토픽4(박근혜정부 비판, 0.12), 토픽5(군사적 대결정책 비난, 0.12) 등이 골고루 높게 나타났다. 반면 유화국면에서 사용된 토픽인 토픽6(남북공동선언 이행 요구, 0.08), 토픽8(남북관계 개선, 0.08), 토픽9(평화체제 요구, 0.06) 등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a군집에서는 대결국면보다 유화국면에서 사용된 토픽이 1.5~2배 정도 높게 나타났다. a군집이 대결국면임에도 불구하고 유화국면에서 사용된 토픽들이 일정한 비율(0.06~0.08)을 차지했다. 김정은 정권이 강력한 대남비난을 쏟아내면서도 박근혜 정부가 대남요구사항을 수용하면 남북관계를 개선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던졌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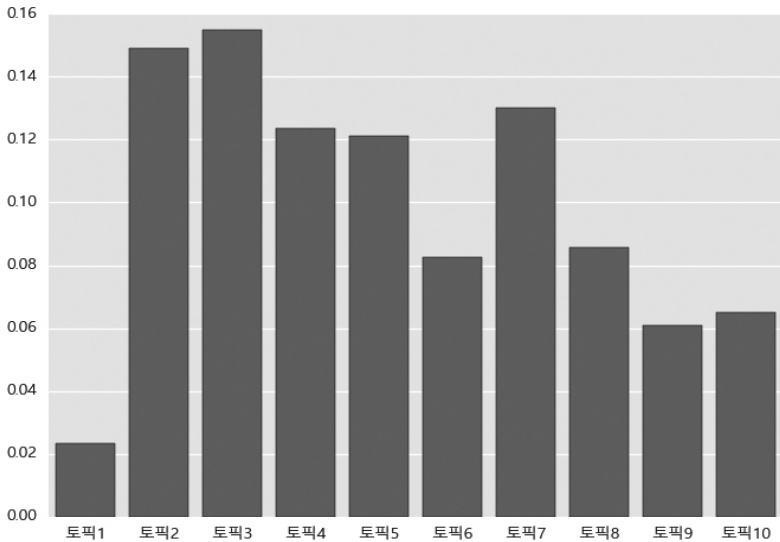
실제로 북한은 북한체제·지도자 비방 중단, 한국의 대북정책 전환,

I  
II  
III  
IV  
V

한미합동 군사연습 중단, 북한의 핵보유 정당화 등의 대남요구사항을 제시하면서 대결적 행태를 보였다. 동시에 박근혜정부에게 남북공동선언 이행, 남북관계 개선 등 대화메시지를 보냈다. 예컨대 김정은 정권은 2016년 신년사에서 북남대화과 관계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sup>89)</sup> 그러나 곧바로 제4차 핵실험을 단행함으로써 남북관계는 대결국면으로 전환했다. 이처럼 김정은 정권은 대결국면의 토픽과 유화국면의 토픽을 함께 사용했다.

그림 III-5 a군집 토픽 분포

(단위: %)



출처: 텍스트마이닝 분석.

<sup>89)</sup> “신년사,” 『조선중앙통신』, 2016.1.1.



## (2) 주요 현안 분석

### (가) 제3차 핵실험과 개성공단 사태(2013년 1~2분기)

2013년 1~2분기는 제3차 핵실험과 개성공단 가동중단 사태로 인해 서 대결국면이었다. 2013년 1분기에 제3차 핵실험은 남북관계를 냉각시켰다. 북한은 2013년 2월 12일 제3차 핵실험을 자위적 조치라고 천명하면서 이명박·박근혜정부의 핵 폐기 요구를 거부했다. 이명박 정부가 북핵 폐기를 요구하자 “만고역적 리명박이 대결병”으로 미쳤다고 비난했다.<sup>90)</sup>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북한의 핵실험은 민족의 생존과 미래에 대한 도전”이라면서 핵 폐기를 요구한 것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발했다. 박근혜정부가 북핵 폐기를 요구하면 남북관계를 개선할 수 없다고 위협했다.

김정은 정권은 공세적 태도를 취하면서 남북한의 긴장을 고조시켰다. 대북제재와 한미합동 군사훈련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정전협정이 백지화되었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키리졸브 합동군사연습을 북침전쟁 책동으로 규정하면서 조선정전협정은 백지화되었다고 주장했다.<sup>91)</sup> 3월 30일 발표된 정부·정당·단체 특별성명은 “이 시각부터 북남관계는 전 시상황에 들어가며 따라서 북남사이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은 전시에 준하여 처리될 것”이라고 밝혔다.<sup>92)</sup>

북한은 3월부터 4월 초까지 최고사령부·조평통·외무성 성명을 통해서 정전협정 백지화와 판문점대표부 활동 전면 중지를 선언했고, 청와대를 타격하고 서울을 불바다로 만든다고 위협했다. 남한에 대해서 핵공격을 할 수도 있고, 군사적 행동에 들어갈 수 있다고 위협했다.

90) “대결병자의 히스테리적 망발,” 『조선중앙통신』, 2013.2.16.

91) “정전협정에 대해 말할 자격이 없다,” 『로동신문』, 2013.3.13.

92) 최고사령부·조평통·외무성 성명, 『로동신문』·『조선중앙통신』 기사; “정부·정당·단체 특별성명,” 『조선중앙통신』, 2013.3.30.

북한은 남북 군통신을 단절하고, 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군통신연락소 북측 인원의 활동 중지를 선언하면서 전략로켓군 화력타격 임무수행 관련 작전회의에서 화력타격 계획을 비준하는 사진을 보도했고, 영변 핵시설과 5MW 흑연감속로를 재가동했다.

2013년 2분기에 북한은 일촉즉발의 전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평양주재 외국공관과 유엔 기구에 철수를 권고했고, 개성공단을 가동 중단하면서 대결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김정은 정권은 김관진 국방장관이 유사시에 개성공단에서 인질 구출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고 밝힘 것을 비난하면서 개성공단 가동을 중단시켰다. 북한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대변인은 3월 30일 개성공단을 외화수입원으로 단정하면서 우리의 존엄을 훼손하려한다면 공업지구를 차단·폐쇄해버리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sup>93)</sup> 김양건 통일전선부장은 4월 8일 종업원 전원 철수, 개성공단 잠정중단 및 존폐여부 검토 등을 골자로 한 담화를 발표했다.<sup>94)</sup>

한국 정부는 수차례에 걸쳐 대화를 제의했으나 북한은 최고존엄과 체제 인정, 핵개발 목인 등을 개성공단 정상화 문제와 연계하면서 대화를 거부했다. 4월 18일 조평통 대변인 담화에서는 최고존엄을 모독하고 북침전쟁연습을 진행하고 반공화국 제재를 실행하는 한 남북대화는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 통일부는 4월 25일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실무회담 개최를 제의하면서 당국 간 회담마저 거부한다면 중대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는 4월 26일 개성공단 잔류 인원을 전원 귀환시켰다. 북한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은 4월 27일 개성공단이 완전 폐쇄되는 책임은 전적으로 남측이 지게 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개성공단에 머물렀던 남측 인원은 5월 3일 모두 귀환했다. 북한

93)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대변인 담화,” 『조선중앙통신』, 2013.3.30.

94) “北 벼랑끝까지 간 벼랑끝 전술… 최고수위 위협,” 『동아일보』, 2013.4.9.

국방위 정책국은 5월 5일 남한이 대북적대행위와 군사적 도발을 중지해야 개성공단을 정상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대남태도는 5월 22~24일 최룡해 총정치국장 방중 이후 유화적으로 바뀌었다. 김정은 정권은 6월 6일 한국 정부에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회담을 제의했다. 남북 당국 간 실무접촉은 6월 9~10일까지 판문점에서 열렸다. 남북한은 6월 12~13일 서울에서 남북당국회담을 열고, 개성공단 정상화, 금강산관광 재개, 이산가족 상봉행사 등을 협의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6월 11일 열린 당국회담은 수석대표의 급문제로 인해 무산되었다.

#### (나) 제4차 핵실험(2016년 1~2분기)

2016년 1~2분기는 1월 6일 제4차 핵실험으로 인해서 남북관계가 파탄했다. 김정은은 제4차 핵실험을 자위적 권리라고 주장하면서 “미국을 핵공격으로 보복할 수 있을 정도로 핵무장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sup>95)</sup> 박근혜정부는 안보리 차원의 추가 제재조치를 포함한 강력한 대북제재를 실행한다고 밝혔고, 국회는 ‘북한의 제4차 핵실험 규탄 및 핵폐기 촉구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고, 국가안전보장회의는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다. 국방부는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미국과 사드 배치에 대한 공식 협의를 시작했다. 유엔안보리는 3월 2일 대북제재 결의 2270호를 채택했다.

북한은 한국 정부를 비난·위협했다. 조선중앙TV는 SLBM(Submarine-Launched Ballistic Missile) 사출 영상을 공개했고, 노동신문은 연일 신형무기 사진을 보도했다. 북한은 1월 13일 우리군의 대비태세 점검에 대해서 제2의 전쟁참화 움직임이라고 위협했고, 박근혜 대통령을

<sup>95)</sup> 통일부 홈페이지, “남북관계주요일지 (2016년 1월),” <www.unikorea.go.kr>.

I
II
III
IV
V

실명으로 비방하는 내용의 전단을 살포했다. 북한은 1월 14일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교체할 것을 주장하면서 미국의 선 핵포기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sup>96)</sup>

개성공단이 폐쇄되면서 남북관계는 거의 단절되었다. 통일부는 2월 10일 개성공단을 전면중단한다고 발표했고, 조평통은 2월 11일 개성공단을 폐쇄했다. 김정은 정권은 유엔안보리 대북제재에 강력하게 반발했다. 조선인민군은 성명에서 청와대와 반동통치기관들이 1차 타격 대상이고, 한미합동 군사훈련에 서울해방작전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남북관계를 파탄냈다고 비난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실명으로 비난했다. 북한은 한미동맹 차원의 작전계획 5015와 김정은 참수작전에 반발하면서 청와대·백악관을 잣가루로 만들고, 최고존엄 위협 시 가차 없이 징벌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북한 해외식당 근무 종업원 13명의 집단 탈북 사건은 남북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북한 적십자중앙위 대변인 담화(4.12·4.21)에서는 해외 식당 종업원 집단 탈북 사건을 집단 납치 행위라고 규정했고, 송환하지 않을 경우 청와대를 포함한 역적패당에 대한 복수전을 위협했다.

김정은 정권은 제7차 당대회(5.6~9)를 기점으로 남북관계의 근본적 개선을 주장하면서 파상적인 대화공세를 펼쳤다.<sup>97)</sup> 국방위원회·인민무력부·조평통은 5월 말 남북군사회담 개최를 제안했다. 북한의 남북관계 개선 요구는 박근혜정부가 대남요구사항을 수용하는 것을 전제로 한 관계 개선이었다. <표 III-7> 조평통 성명(2016.6.2.)과 전체 조선민족에게 보내는 호소문(2016.6.10.)을 보면, 김정은 정권의 대남요구사

96) 통일연구원, 『제13차 KINU 통일포럼: 북한 제7차 당대회 분야별 평가 및 향후 전망』, KINU 통일포럼 16-02 (서울: 통일연구원, 2016), p. 61.

97) 김정은, “제7차대회에서 한 당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 『노동신문』, 2016.5.8.; 통일부 홈페이지, “남북관계주요일지 (2016년 5월),” <www.unikorea.go.kr>.

항을 알 수 있다.

**표 III-7** >> 조평통 성명(2016.6.2.)과 전체 조선민족에게 보내는 호소문(2016.6.10.)

유형	대남요구사항
1유형	- 최고준엄 모독 중단 - 뼈라 살포 중단 - 최고수뇌부 참수작전 중단 - 북한 변화 주장 중단 - 제도통일·흡수통일 중단
2유형	- 북남군사당국회담 개최 - 군사분계선과 서해열점수역 등 군사적 충돌 원인 제거
3유형	- 조선반도 평화 안전 위협하는 전쟁연습 완전 중지
4유형	- 핵보유국 지위 인정 - 선비핵화, 후대화 전제조건 철회 - 대북제재 국제공조 중단
5유형	- 인민 생존권 인권 보장 - 경제파탄과 민생악화 해결 - 외세의 침략과 간섭책동 분쇄 - 남조선의 사대와 외세의존 척결 - 내외반통일세력 척결

출처: “조평통 성명,” 『조선중앙통신』, 2016.6.2.; “‘김정은 통일방침 관철 北 정부·정당·단체 연석회가 진행 및 ‘전체 조선민족에게 보내는 호소문’ 채택,” 『조선중앙통신』, 2016.6.10.

박근혜정부는 북한의 대남요구사항을 수용하지 않았고, 북핵 폐기를 요구하면서 대북제재를 강화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변화를 선택해야 남북관계를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정은 정권은 박근혜정부의 핵포기 요구를 거부했다. 오히려 김정은 정권은 5월 22일 원동연 서기국장 담화에서 남북 군사당국 협상을 제안하면서 핵 포기와 같은 부당한 전제조건을 내세우며 동족 대결에 매달리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주장했다.<sup>98)</sup> 조평통은 6월 2일 한국 정부가 남북군사회담 제의를 거부한 것에 대해서 무자비한 물리적 대응할 것이라고 위협했다.<sup>99)</sup>

I  
II  
III  
IV  
V

(다) 각종 남북한 현안 비난(2014년 2분기, 2015년 2분기)

2014년 2분기와 2015년 2분기에 김정은 정권은 각종 남북한 현안에 대한 대남비난공세를 진행하면서 대결적 행태를 보였다. 2014년 2분기에 김정은 정권은 북한 무인기 사건, 유엔 인권사무소 설치, 한미 정상회담 비난, 서해 해안포 사격, NLL 충돌,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민간단체 전단 살포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 대남비난을 진행했다. 남북한은 4월에 북한 무인기 사건으로 대립했다. 김정은 정권은 추락 무인기가 북한의 소행이라는 국방부의 발표(4.11)를 제2의 천안호 사건 날조라고 비난했다. 유엔인권사무소 설치에 체제대결의 선전포고로 간주한다면서 반발했다.

드레스덴 구상도 비난했다. 드레스덴 구상은 ‘흡수통일’ 논리이고, “북남관계의 현 상황에 대한 무지로부터 아무런 해결방도도 없이 위선과 기만으로 여론만 흐리게 한 반통일 녀뜨리”라고 비난했다.<sup>100)</sup> 한미 정상회담(4.25) 이후에도 대남비난을 강화했다. 한미 양국 정상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해서 국제적 압박을 강화하고, 북한인권문제에 대해서 공동으로 대응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도출했다. 김정은 정권은 한미정상회담은 ‘북남 전면대결을 선언한 극악무도한 선전포고’라고 비난했고, 박근혜 대통령을 ‘철부지 계집애’, ‘사대매국노’ 등의 용어를 사용하면서 원색적으로 비난했고, 남북관계에 대한 기대를 버렸다고 밝혔다.<sup>101)</sup> 남북한은 서해 NLL 상에서 군사적으로 충돌(5.20·22)했다. 북한은 서해 NLL 부근 해상에서 해상사격훈련을 실시(4.29)했고,

98) 통일부 홈페이지, “남북관계주요일지 (2016년 5월),” <www.unikorea.go.kr>.

99) 통일부 홈페이지, “남북관계주요일지 (2016년 5·6월),” <www.unikorea.go.kr>.

100) “국방위 대변인 담화,” 『조선중앙통신』, 2014.4.12.; “북남관계의 전도는 전적으로 박근혜의 태도여하에 달려있다,” 『조선중앙통신』, 2014.4.23.

101) “우리의 존엄과 체제, 병진조선에 감히 도전하는자들을 절대로 용납치 않을 것이다,” 『조선중앙통신』, 2014.4.27.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6.26·29)을 발사했다.

김정은 정권은 <표 III-8>과 같이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진상공개장이라는 형식으로 대남비난공세를 진행하면서도 대남요구사항을 제시했다. 국방위원회는 ‘남조선당국에 보내는 특별제안’을 통해서 자주 원칙, 평화통일 원칙, 우리민족끼리의 정신과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남북관계를 개선하자고 제안했다.<sup>102)</sup> 그러나 박근혜정부는 북핵 폐기, 대남정책 변화 등을 촉구하면서 대남요구사항을 수용하지 않았다. 남북관계는 대결국면을 지속했다.

**표 III-8** >> 조평통 진상공개장과 공개질문장(2014.4.14.·4.23.)

유형	대남요구사항
1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고준엄과 체제 모독 중단</li> <li>- 북 체제불안정 주장 중단</li> <li>- 반공화국모략선전과 인권소동 중단</li> <li>- 대북빠라 살포 중단</li> <li>- 대북심리전 중단</li> </ul>
2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북관계 개선 노력</li> <li>- 체제대결 중단과 흡수통일 포기</li> <li>- 급변사태 등 동족대결정책 포기</li> <li>- 5·24 조치 해제</li> <li>- 서해평화협력지대 설치</li> <li>- 7·4 공동성명, 6·15 공동선언, 10·4 선언 이행</li> </ul>
3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침전쟁연습 중단</li> <li>- 한미합동 군사훈련 중단</li> <li>- 미국 핵무기와 침략군대 철수</li> </ul>
4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핵·미사일 반대 중단</li> <li>- 핵·경제 병진노선 비난 중단</li> <li>- 선 핵포기 요구 철회</li> </ul>
5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보안법 폐지</li> </ul>

출처: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진상공개장,” 『조선중앙통신』, 2014.4.14.; “조평통,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질문장,” 『조선중앙통신』, 2014.4.23.

<sup>102)</sup> “北 국방위, 南 당국에 특별 제안,” 『조선중앙통신』, 2014.6.30.

I  
II  
III  
IV  
V

2015년 2분기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민간단체 대북전단 살포 비난, NLL 상 군사적 대립 등으로 인해 대결 분위기가 조성됐다. 남북한은 각종 현안을 둘러싸고 대립했다. 북한은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4.2·3, 6.14)했고, 전략잠수함 탄도탄 수중발사(5.9)에 성공했다고 보도했다.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발했다. 남북한 군 당국은 서해상에서 영해 침범 문제로 대립했고, 북한은 NLL 상에서 사격훈련(5.13~15)을 실시했다. 조평통(6.3)은 우리 정부의 대화제의를 비난하면서 대화 조건으로 공동선언 이행, 북침전쟁연습 중단 등을 요구했고, 정부 성명(6.15)에서 체제통일 불추구, 북침전쟁연습 중단, 도발행위 중단 등 남북관계 개선 분위기 조성, 남북공동선언 이행 등을 요구했다.<sup>103)</sup>

#### (라) NLL 충돌과 대북전단 살포 중단 요구(2014년 4분기)

2014년 4분기는 NLL 충돌, 대북전단 살포 중단 요구 등으로 인해 대결국면이 조성되었다. 2014년 10월 4~5일 황병서·최룡해·김양건 등 북한 고위급 대표단이 인천아시안게임 폐막식에 참석하기 위해 남한을 방문하면서 남북대화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그러나 10월 7일 NLL 상에서 남북한 함정 간 교전이 발생했다. 북한은 긴급단독접촉을 제의했다.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도 남북관계를 악화시켰다. 김정은 정권은 민간단체의 반공화국 삐라 살포행위를 비난하면서 인천아시안게임 이후 남북고위당국자 접촉에서 약속한 제2차 남북고위급 접촉도 무산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sup>104)</sup> 북한은 10월 10일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서

<sup>103)</sup> “北 정부 성명, 역사적인 6.15공동선언의 기치 따라 북남관계발전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나가야 한다,” 『조선중앙통신』, 2015.6.15.

<sup>104)</sup> “北 ‘조평통’ 서기국 보도 제1075호,” 『조선중앙통신』, 2014.10.9.; “〈중앙통신 노평〉, 삐라살포 망동의 조종자는 누구인가,” 『조선중앙통신』, 2014.10.11.; “남북 고위급접촉 북측대표단 대변인 담화,” 『조선중앙통신』, 2014.10.12.



총격도발을 감행했고, 한국군에서도 대응사격을 실시했다. 10월 15일 남북 군사당국자 접촉에서 북한은 자신들이 선포한 서해 경비계선 내 한국 함정의 진입금지, 민간 차원의 대북전단 살포 중단, 언론을 포함한 비방·중상 중지 등을 요구했다. 그러나 한국은 북한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다. 군사당국자 접촉은 서로의 견해 차이를 확인하고 끝났다.

북한은 보수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비난하면서 한국 정부가 뼈라 살포를 방임함으로써 2차 고위급접촉을 무산시키는 방향으로 나간다고 비난했다. 조평통(10.24·11.1)은 대북전단 살포가 남북관계를 악화시킨다면서 대북전단 살포를 중단하지 않으면 남북대화는 없다고 선언했다.<sup>105)</sup> 김정은 정권은 <표 III-9>와 같이 최고존엄·체제 중상모독 중단, 심리전 중단, 북침핵전쟁연습 중단 등을 요구했다. 그러나 박근혜정부는 북한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다.

**표 III-9** 국방위 정책국 대변인 성명(2014.11.15.)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공보(2014.12.20.)

유형	대남요구사항
1유형	- 최고존엄 중상모독 중단 - 체제 중상모독(핵경제 병진노선 비난, 인권 문제 등) 중단 - 반공화국심리모략전 중단 - 반공화국인권모략소동 중단 - 급변사태와 체제붕괴 시도 중단
2유형	- 북남합의 이행
3유형	- 북침핵전쟁연습 중단 - NLL 충돌 방지 협의
4유형	- 없음
5유형	- 없음

출처: “北 국방위원회 정책국 대변인 성명,” 『조선중앙통신』, 2014.11.15.;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공보,” 『조선중앙통신』, 2014.12.20.

<sup>105)</sup> “北 「조국통일연구원」 백서,” 『조선중앙통신』, 2014.10.24.; “「조평통」 성명,” 『조선중앙통신』, 2014.11.1.;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공보,” 『조선중앙통신』, 2014.12.20.; 통일부 홈페이지, “남북관계주요일지,” <www.unikorea.go.kr>.

I  
II  
III  
IV  
V

(마) 한미합동 군사훈련과 대북전단 살포 중단 요구(2015년 1분기)

2015년 1분기는 한미합동 군사훈련과 대북전단 살포 중단 요구 등으로 대결국면이 조성됐다. 김정은 정권은 신년사에서 대화와 협상 및 교류를 통한 남북관계 개선을 주장했다.<sup>106)</sup> 고위급접촉이나 최고위급 회담도 못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북한의 제안은 <표 III-10>에서 보는 것처럼 뼈라 살포 중단, 한미합동 군사훈련 중단, 제도 통일·체제대결 포기, 북핵 간섭 중단, 대북제재 중단 등을 전제로 한 조건부 대화론이었다. 한국 정부는 전제 조건 없는 대화를 주장했다.<sup>107)</sup> 남북관계는 교착되었다.

**표 III-10** 국방위 대변인담화·정책국성명(2015.1.7.·1.25.), 조평통 서기국보도(2015.1.29.)

유형	대남요구사항
1유형	- 대북뼈라 살포 중단 - DVD·USB 복측 살포 중단 - 제도통일·체제대결 포기
2유형	- 대화와 협상, 교류와 접촉으로 북남관계 대전환·대변혁 - 남북관계 개선과 발전 - 조선반도 긴장 완화와 평화적 환경 마련
3유형	- 북침핵전쟁연습 중단
4유형	- 대북제재 중단 - 미국의 핵무기과 미제 침략군 철수 - 북핵 간섭 중단
5유형	- 없음

출처: “北 ‘국방委’ 대변인 담화,” 『조선중앙통신』, 2015.1.7.; “北 ‘국방委’ 정책국 성명,” 『조선중앙통신』, 2015.1.25.; “『조평통』 서기국 보도 제1083호,” 『조선중앙통신』, 2015.1.29.

106) “신년사,” 『조선중앙통신』, 2015.1.1.

107) “北 「국방委」 정책국 성명,” 『조선중앙통신』, 2015.1.25.; 통일부 홈페이지, “남북 관계주요일지,” <www.unikorea.go.kr>.

남북한은 대북전단 살포 문제로 대립했다. 민간단체가 대북전단(1.5)을 살포하고, 천안함 폭침 5주기를 전후로 대북전단 살포(3.16)를 예고하면서 대결국면이 조성되었다. 북한은 3월 22일 조선인민군 전선 부대들의 공개통고를 통해서 한국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계획에 대해 무차별적인 기구소멸작전 진입과 무자비한 연속적 징벌 타격을 위협했다.<sup>108)</sup>

소니픽처스 해킹 사건도 남북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미국은 1월 2일 소니 해킹 관련 대북 제재조치를 담은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북한은 미국의 대북제재를 대북 적대시책동이라면서 대북제재 철회와 적대행위 중단을 요구했다. 미국이 북한의 성김 평양방문을 거부하면서 북미관계는 더 악화되었다. 북한 국방위는 “미국과는 더는 마주앉을 필요도, 상종할 용의도 없다.”고 밝혔다.<sup>109)</sup>

북한은 한미합동 군사훈련 중단을 요구했다. 인민군 총참모부는 대변인 성명(3.2)을 통해서 한미연합훈련을 북침핵전쟁연습으로 규정하면서 무자비한 불세례를 가할 것이고, “정의의 조국통일대전으로 대답”할 것이라고 위협했다.<sup>110)</sup> 조평통(3.3)은 남조선괴뢰와 미제침략자들이 북침전쟁연습을 진행하는 조건에서 남북 대화와 관계개선의 기회는 지나갔고 힘의 대결에 의한 최후의 결판만 남았다고 위협했다.<sup>111)</sup>

108) “조선인민군 전선부대들의 공개 통고,” 『조선중앙통신』, 2015.3.22.; 통일부 홈페이지, “남북관계주요일지,” <www.unikorea.go.kr>.

109) 통일부 홈페이지, “남북관계주요일지,” <www.unikorea.go.kr>.

110)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 『조선중앙통신』, 2015.3.2.; “北 ‘외무성’ 대변인 담화,” 『조선중앙통신』, 2015.3.2.

111) “「조평통」 성명,” 『조선중앙통신』, 2015.3.3.

(바) 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 중단(2014년 3분기)과 DMZ 지뢰도발  
(2015년 3분기)

2014년 3분기는 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 중단 문제로 대립했다. 북한은 공화국 정부성명(7.7)에서 북침전쟁연습 전면 중지, 6·15 선언과 10.4 선언 등 남북합의 존중·이행을 주장했다. 국방위 정책국 대변인 담화(7.21)에서는 미사일 발사를 합법적 자주권 행사라면서 한미군사 훈련 중단을 요구했다. 조평통·총참모부는 성명(7.31·8.17·18)을 통해서 을지프리덤가디언 중단을 요구하면서 청와대 화력타격과 선제타격을 위협했다.<sup>112)</sup> 북한은 7월 이후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수차례 발사(7.2·9·13, 9.1·6)했고, 한미합동 군사훈련 중단을 요구했다. 국방위와 조평통은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을 북침전쟁 연습이라고 비난하면서 “대화분위기와 평화적 환경 마련에 유익한 정책적 결단만이 허용될 때”라고 주장했다.<sup>113)</sup>

2015년 3분기는 북한의 DMZ 지뢰도발 사건(8.4)으로 인해 남북관계가 최악의 대결국면으로 진입했다. 북한군이 비무장지대에 매설한 지뢰가 폭발하면서 한국군 부사관 2명이 중상을 입었다. 군 합동조사단은 8월 10일 지뢰폭발 사고가 북한군의 소행이라고 발표했다. 한국 정부는 11년 만에 중동부 전선과 서부전선에서 대북심리전 방송을 재개했다. 북한은 지뢰도발을 전면부인하면서 모략극이라고 비난했다.

조선인민군 전선사령부는 공개경고장(8.15)에서 대북심리전 방송을 중단하지 않으면 무차별 타격할 것이라고 위협하면서 사태 수습을 위해 노력할 의사가 있다는 입장을 표명했고, 국방위는 대변인성명(8.15)에서 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sup>114)</sup> 북한군은 8월

112) 통일부 홈페이지, “남북관계주요일지,” <www.unikorea.go.kr>.

113)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 『조선중앙통신』, 2014.8.17.;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담화,” 『조선중앙통신』, 2014.8.29.

20일 대북확성기를 향해 고사포 1발과 직사포 3발을 발사했다.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20일 오후에 22일까지 48시간 내에 심리전방송을 중지하고 확성기를 철거하지 않으면 확전까지 예견한 강력한 군사행동을 개시한다고 위협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북한의 요구를 거부했다.

북한은 8월 21일 김양건 당비서와 김관진 안보실장 간 접촉을 제의했다. 남북한 접촉은 8월 22일~24일까지 김관진 국가안보실장과 홍용표 통일부장관, 황병서 총정치국장과 김양건 노동당 비서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남북한은 공동보도문을 통해서 남북당국회담 개최, 북한의 지뢰폭발 유감표명, 확성기 방송 중단, 북한 준전시상태 해제, 추석계기 이산가족 상봉행사 개최 및 적십자 실무접촉 9월 초 개최, 민간교류 활성화 등에 합의했다.<sup>115)</sup> 남북한은 9월 7일~8일 남북적십자 실무접촉을 개최했고, 이산가족 상봉행사는 10월 20일~26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 나. b군집(2012년 1~4분기)

### (1) 토픽 분석

b군집은 18개 분기 중에서 2012년 1~4분기까지 4개 분기(12개월)가 해당한다. b군집은 김정은 권력승계, 이명박 정부 비난, 대선 국면에서 박근혜 후보 비난 등의 사건이 있었다. 김정은 정권은 권력승계와 권력기반 구축에 주력했기 때문에 대남정책에 관심을 쏟을 여력이 별로 없었다. 또 집권 5년차인 이명박 정부와의 남북대화에 거의 관심이 없었고, 박근혜 후보를 비난함으로써 대선에 영향을 미쳐서 차기정부의 대북유화정책을 유도하는 데 집중했다.

<sup>114)</sup> “조선인민군 전선사령부 공개경고장,” 『조선중앙통신』, 2015.8.15.; “北 국방委 대변인 성명,” 『조선중앙통신』, 2015.8.15.

<sup>115)</sup> 통일부 홈페이지, “남북관계주요일지,” <www.unikorea.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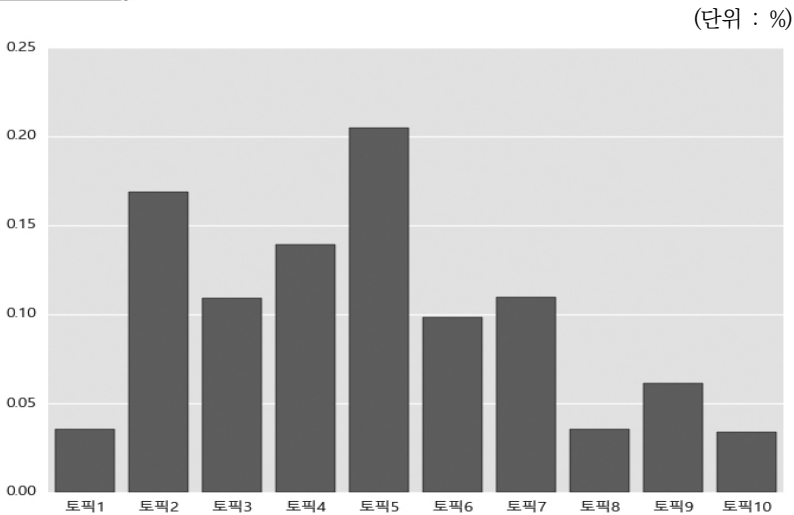
**표 III-11** b군집 주요 사건

분기	주요 사건
2012년 1~4분기	- 김정은 권력승계 - 이명박 정부 비난 - 박근혜 후보 비난

출처: 필자 작성.

〈그림 III-6〉 b군집 토픽 분포를 보면, 김정은 정권이 이명박 정부를 상대로 대결적 태도를 취했음을 알 수 있다. b군집은 대결국면에서 사용된 토픽인 토픽5(한국의 적대정책 비난, 0.20)가 매우 높게 나타났고, 토픽4(박근혜정부 비판, 0.14)와 토픽3(한미합동 군사연습 비판, 0.11)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유화국면에서 사용된 토픽인 토픽8(남북관계 개선, 0.04)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토픽6(남북공동선언 이행 요구, 0.10)은 상대적으로 높았다.

**그림 III-6** b군집 토픽 분포



출처: 텍스트마이닝 분석.

이 시기에 김정은 정권은 이명박 정부의 군사적 대결정책과 박근혜 후보의 대북정책을 비난했다. 대선국면에서는 차기정부의 대북정책을 유화정책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6·15 선언과 10·4 선언 등 남북공동선언 이행을 강하게 요구했다. 그러나 남북관계 개선은 적게 언급했다.

## (2) 주요 현안 분석

### (가) 이명박 정부 비난

김정은 정권은 2012년에 권력승계를 진행하면서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후보를 비난함으로써 대결국면을 지속했다. 김정은 정권은 국내 정치적으로 김정은 권력승계와 권력기반 구축에 주력했기 때문에 남북관계에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김정은 정권은 차기 정부의 대북유화정책을 이끌어냄으로써 남북관계의 주도권을 쥐기 위해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과 박근혜 후보를 비난했다. 김정은 정권은 퇴임을 앞둔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비난공세를 펼쳤다. 이명박 정부를 상대로 남북관계의 주도권을 잡을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경제적 실리도 얻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김정은 정권은 남북관계가 경색된 책임을 전적으로 이명박 정부에게 떠넘기면서 대북유화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했다. 김정은 정권은 김정일 장례를 마친 후 이명박 정부에 대한 비난공세를 시작했다. 이명박 정부가 김정은 조문 불허, 북한체제 위협, 최고존엄 모독, 급변사태 거론, 북 지도부와 주민 분리대응 발언, 대북전단 살포 등을 실행했다고 비난했다.<sup>116)</sup>

<sup>116)</sup> “민족의 대국상앞에 저지른 이명박 역적패당의 만고대죄를 끝까지 결산할 것이다.” 『조선중앙통신』, 2011.12.30.;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성명,” 『조선중앙통신』, 2011.12.31.; “남조선 당국의 반인륜적 망동은 철저히 계산될 것,” 『조선중앙통신』,

김정은 정권은 이명박 정부의 대결적인 대북정책 때문에 남북관계가 단절됐다고 비난하면서 <표 III-12> 조평통 서기국 백서와 <표 III-13> 국방위원회 정책국 공개질문장 등을 통해서 대남요구사항을 제시하면서 대북정책 전환을 요구했다. 이명박 정부가 핵폐기, 천안함 사건, 연평도 문제 등을 조건으로 내세우면서 남북대화 제안을 전면 거부했고, 북한변화 유도, 통일세, 급변사태, 대북 심리전, 김정일 장례 시 체제 위협 등 흡수통일을 추구하면서 반공화국모략소동을 벌였고, 키리졸브·독수리 합동군사훈련, 을지프리트럼가디언 훈련 등 북침전쟁책동을 벌였다고 비난했다.<sup>117)</sup> 김정은 정권은 키리졸브 훈련을 전쟁도발책동으로 규정하면서 남북관계를 개선하려면 한미합동 군사훈련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sup>118)</sup>

**표 III-12** >> 조평통 서기국 백서(2012.1.12.)

유형	대남요구사항
1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의 변화유도 중단</li> <li>- 급변사태 거론 중단</li> <li>- 북 지도부 주민 분리대응 시도 중단</li> <li>- 대북심리전 중단</li> <li>- 반공화국인권모략광대극 중단</li> <li>- 최고존엄 모독 중단</li> </ul>

2012.1.2.; “北 ‘조평통’ 서기국 보도 제989호,” 『조선중앙통신』, 2012.1.5.; “죄악을 덧쌓는 돈키호테식 망발,” 『조선중앙통신』, 2012.1.11.

117)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백서,” 『조선중앙통신』, 2012.1.12.; “조평통 대변인, 1.19李大통령의 남북대화 거론 비난 기자회견,” 『조선중앙통신』, 2012.1.19.; “北외무성 군축 및 평화연구소 연구보고서,” 『조선중앙통신』, 2012.1.20.; “대결광신자의 필사적 발악,” 『조선중앙통신』, 2012.1.23.;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대변인 성명,” 『조선중앙통신』, 2012.3.2.

11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대변인성명,” 『조선중앙통신』, 2012.2.25.;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답화,” 『조선중앙통신』, 2012.2.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대변인성명,” 『조선중앙통신』, 2012.2.25.



유형	대남요구사항
2유형	- 북남대화제안 거부 - 금강산관광 재개 거부 - 남북협력사업 중단
3유형	- 《키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 중단 - 《태극》훈련 중단 - 《을지프리덤가디언》합동군사연습 중단 - 연평도·백령도 일대 대규모 북침전쟁연습
4유형	- 없음
5유형	- 남조선 진보세력 탄압

출처: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백서,” 『조선중앙통신』, 2012.1.12.

**표 III-13** 국방위원회 정책국 공개질문장(2012.2.1.)

유형	대남요구사항
1유형	- 민족의 대국상에 저지른 대역죄 사죄 - 최고존엄 건드리고 제도와 일심단결 흔들어버리는 행동 중단 - 반공화국심리모략전 중단 - 급변사태와 체제전복 유도 중단
2유형	- 6·15 공동선언, 10·4 선언 전면이행 - 원칙론 폐기 - 비핵·개방·3000 폐기 - 천안호 사건과 연평도포격전 비난 중단 - 북남교류협력을 민족의 평화번영과 공리공영의 방향에서 재개 - 개성공업지구 활성화 - 금강산관광 재개
3유형	- 대규모 합동군사연습 전면 중지 - 《키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 중단 -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
4유형	- 핵포기와 관련한 진정성 확인 요구 부당 - 북핵 폐기 요구 중단 - 미국의 확장된 핵억제력 거부 및 남핵 폐기 선행
5유형	- 《보안법》 등 반민족적, 반통일적 악법 철폐 - 엄정한 정권심판으로 민족화해정부 출범

출처: “北 국방위 정책국, 남당국에 공개질문장 발표,” 『조선중앙통신』, 2012.2.1.

I  
II  
III  
IV  
V

김정은 정권은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전환을 요구했다. 김정은 정권은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의 이행, 5·24 조치 해제, 최고준엄 모독 중단, 한미군사훈련 중단, 대북심리전 중지, 남북교류 재개 및 활성화 등 대북정책 전환을 요구했다.<sup>119)</sup> 4·11 총선을 전후로 한 시기에는 이명박 정부,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등을 비난하면서 최고준엄을 모독하면 서울을 날려버릴 수 있다고 위협했다.<sup>120)</sup> 조선인민국 총참모부는 공개통첩장(6.4)에서 남한의 언론매체들이 최고준엄을 헐뜯는다면 각 언론사들에 대한 군사공격을 감행할 수 있다고 협박했다.<sup>121)</sup>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북한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고, 남북관계는 대결국면을 지속했다.

#### (나) 박근혜 후보 비난과 대북유화정책 유도

김정은 정권은 박근혜 후보를 비난하면서 한국의 대선에 노골적으로 개입했다. 대선 개입 목표는 새누리당의 재집권을 막고 차기정부의 대북유화정책을 유도하는 것이었다. 김정은 정권의 대선 개입 목표는 박근혜 후보의 당선을 막는 것이었다. 조평통(11.3·8)은 박근혜 후보의 대북정책 공약은 전면대결공약이라고 비난하면서 남조선 각 계층은 새누리당의 재집권을 막고 대선에서 정권교체를 실현해야 한다고 선동했다.<sup>122)</sup>

119) “위대한 김정일 동지의 유훈을 받들어 2012년을 강성부흥의 전성기가 펼쳐지는 자랑찬 승리의 해로 빛내이자,” 『로동신문』, 2012.1.1.; “공개질문장,” 『조선중앙통신』, 2012.2.2.; “이명박 4년, 10대 반통일 죄악,” 『로동신문』, 2012.2.22.; “조평통” 서기국 백서,” 『조선중앙통신』, 2012.4.2.

120) “조선법률가협회 대변인 담화,” 『조선중앙통신』, 2012.4.3.; “특급위험신호! 독도가 위험!,” 『우리 민족끼리』, 2012.4.5.; “북, “서울 한반도이라도 도발원점 통째로 날려보낼 것”, 『통일뉴스』, 2012.4.19.

121) “인민군 총참모부 공개통첩장,” 『조선중앙통신』, 2012.6.4.

122) “北조평통, 박근혜 후보 대북정책 공약 비난,” 『연합뉴스』, 2012.11.8.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차기 정부의 대북유화정책을 유도하는 것으로 목표를 조정했다. 김정은 정권은 차기정부가 대북정책을 전환하면 남북관계를 개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조선신보(10.5·11.15)는 남한의 차기정권이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을 존중하면 북한도 적극적으로 호응할 것이고, 남북협력 사업을 활성화할 것이라고 밝혔다.<sup>123)</sup>

조평통(12.1)은 박근혜 대선후보에게 보낸 공개질문장에서 “기만적인 <대북정책> 공약은 누구에게도 통할 수 없다.”면서 앞으로 6·15 공동선언과 10·4 합의 이행, 흡수통일 포기, 미국의 선 핵 포기, 한미동맹 강화 여부, 북한인권법 제정 여부, 5·24 조치 해제, 이명박 정부 대북정책 계승 여부 등 7개 항목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sup>124)</sup> 금강산국제관광특구지도국은 진상공개장(12.8)에서 금강산관광 재개를 요구했고, 박근혜 후보가 당선된 후에는 “대결인가 대화인가, 전쟁인가 평화인가, 북남관계 파탄인가 개선인가, 제2의 이명박인가 아닌가.”라는 물음에 대답할 것을 요구했다.<sup>125)</sup>

<sup>123)</sup> “평화 번영에 대한 기대와 확신: 10·4선언 발표 5돌, 평양의 여론,” 『조선신보』, 2012.10.5.; “실패한 대북정책에서 교훈을 찾아야한다,” 『로동신문』, 2012.11.15.

<sup>124)</sup> “기만적인 <대북정책>공약은 누구에게도 통할수 없다,” 『조선중앙통신』, 2012.12.1.

<sup>125)</sup> “금강산관광을 파탄시킨 괴뢰보수패당의 반민족적죄행은 절대로 용납될수 없다,” 『조선중앙통신』, 2012.12.8.; “악몽의 5년은 절대로 되풀이되지 말아야한다,” 『로동신문』, 2012.12.16.; “실패한 대결정책과의 결별을 요구,” 『조선신보』, 2012.12.21.

I
II
III
IV
V

## 다. c군집(2013년 3~4분기)

### (1) 토픽 분석

c군집은 18개 분기 중에서 2013년 3~4분기까지 2개 분기(6개월)이다. c군집에서 발생한 주요 사건은 을지훈련 비난, 이산가족 상봉행사 취소, 대남비난 등이었다. 이 시기에 남북한은 개성공단 가동 중단사태를 수습하기 위한 회담을 진행했으나 남북관계는 대결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박근혜정부는 북핵 폐기를 요구했고, 북한은 을지훈련 비난, 이산가족 상봉행사 취소, 대남 비난 등으로 대응했기 때문이다.

표 III-14 c군집 주요 사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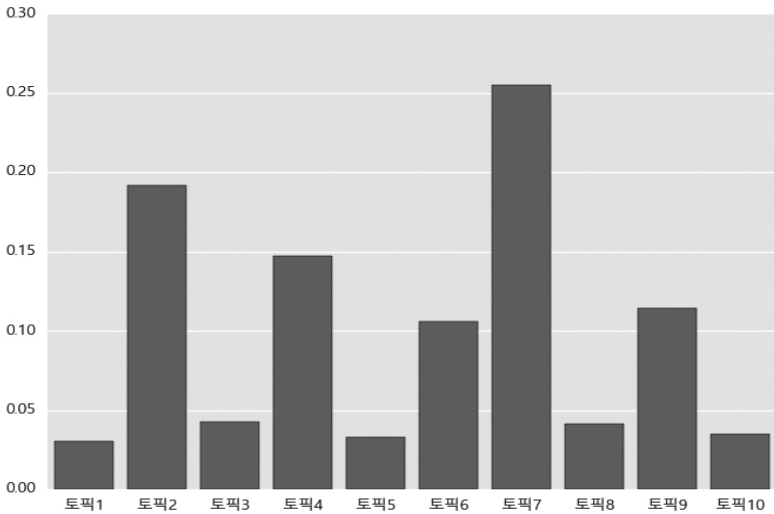
분기	주요 사건
2013년 3~4분기	- 을지훈련 비난 - 이산가족 상봉행사 취소 - 대남비난

출처: 필자 작성.

〈그림 III-7〉 c군집 토픽 분포를 보면, 김정은 정권은 박근혜정부에 대해서 대결적 자세를 취했다. 대결국면에서 사용된 토픽인 토픽4(박근혜정부 비판, 0.15)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토픽3(한미합동 군사훈련 중단, 0.04)과 토픽5(군사적 대결 정책 비난, 0.03)는 매우 낮게 나타났다. 반면, 유화국면에서 사용된 토픽인 토픽8(남북관계 개선, 0.04)이 낮게 나타났고, 토픽6(남북공동선언 이행 요구, 0.11)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 III-7 C군집 토픽 분포

(단위: %)



출처: 텍스트마이닝 분석.

## (2) 주요 현안 분석

김정은 정권은 2013년 3~4분기에 박근혜정부에 대한 비난을 지속 함으로써 남북한 간 대결국면이 지속되었다. 김정은 정권은 박근혜정부의 대북정책을 비난하면서 평화체제와 남북공동선언 이행을 요구했다. 박근혜정부는 개성공단 정상화 이후 대북지원을 재개하면서 남북관계 개선을 모색했다. 그러나 북핵 폐기를 고수하면서 북한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다. 남북관계는 개선되지 않았다.

개성공단 정상화 논의는 7월에 6차례에 걸친 남북실무자회담을 진행했다. 그러나 회담은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채 결렬되었다. 김정은 정권은 개성공단에 군부대를 복원한다고 위협했다. 그러나 박근혜정부가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에게 남북경협보험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발표

- I
- II
- III
- IV
- V

하면서 상황이 반전되었다. 김정은 정권은 8월 14일 7차 실무회담 개최를 제의했고, 개성공단 재가동에 합의했다.

개성공단 합의 이후 이산가족 상봉행사에 합의함으로써 남북한 간 대화분위기가 조성됐다. 박근혜정부는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민간단체의 대북지원(7.29)을 허용했고, 북한 취약계층에게 의약품·영양식 등을 지원하는 12개 민간단체의 반출(9.2)을 승인했다. 이 기간에 북한 국방위 정책국은 을지프리트엄가디언 연습을 북침전쟁 연습이라고 비난하면서 “대화분위기와 평화적 환경마련에 유익한 정책적 결단만이 허용될 때”라고 주장했다.<sup>126)</sup> 그러나 남북한은 금강산관광 재개 문제에 대한 이견을 보였다. 남북관계는 악화되었다. 김정은 정권은 이산가족 상봉행사의 일방적 연기(9.21)를 발표했고, 박근혜정부에 대한 비난을 강화했다.

조평통(10.17)은 남재준 국정원장의 국회보고 내용에 대해 남북관계를 파국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난했고, 박근혜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체제 대결과 북침야망을 실현하려는 반통일대결정책(10.24)이고, 체제통일 망상을 실현하기 위한 반민족적 대결정책(11.4)이라고 비난했다. 조평통은 성명(11.6·11·21)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르피가로 인터뷰에 대해서 우리와 대결하려는 흥심만 들어차 있다고 비난했고, 대통령의 국회시정연설에 대해 국내 정치적 위기와 남북관계 악화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여론 기만극이라고 비난했다. 조평통은 공개질문장(12.25)에서 박근혜정부의 대북정책이 신뢰인지 대결인지 밝히라고 요구했다.<sup>127)</sup>

<sup>126)</sup> 통일연구원, 『남북관계연표: 1948~2013년』 (서울: 통일연구원, 2013), p. 561.

<sup>127)</sup> 위의 책, pp. 556~574.

## 4. 유화국면(B군집)의 대남정책 특징

### 가. d군집(2015년 4분기)

#### (1) 토픽 분석

d군집은 18개 분기 중에서 2015년 4분기(3개월)로 가장 적다. d군집은 DMZ 지뢰도발에 합의하면서 남북관계 개선을 모색한 시기이다. <그림 III-8> d군집 토픽 분포를 보면, 김정은 정권이 다른 시기에 비해서 유화적 자세를 취했음을 알 수 있다. d군집은 유화국면에서 사용되는 토픽과 대결국면에서 사용되는 토픽이 비교적 비슷하게 나타났다. 유화국면에서 사용된 토픽인 토픽8(남북관계 개선, 0.14)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런데 대결국면에서 사용된 토픽인 토픽4(박근혜정부 비판, 0.12), 토픽3(한미합동 군사연습 비판, 0.11), 토픽5(군사적 대결정책 비난, 0.09) 등도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왜냐하면 김정은 정권은 대화공세와 함께 한미군사훈련 중단 등 대남비난을 병행했기 때문이다. 물론 d군집에서는 대결국면에서 사용된 토픽이 다른 군집에 비해서 비교적 낮은 편이었다.

I

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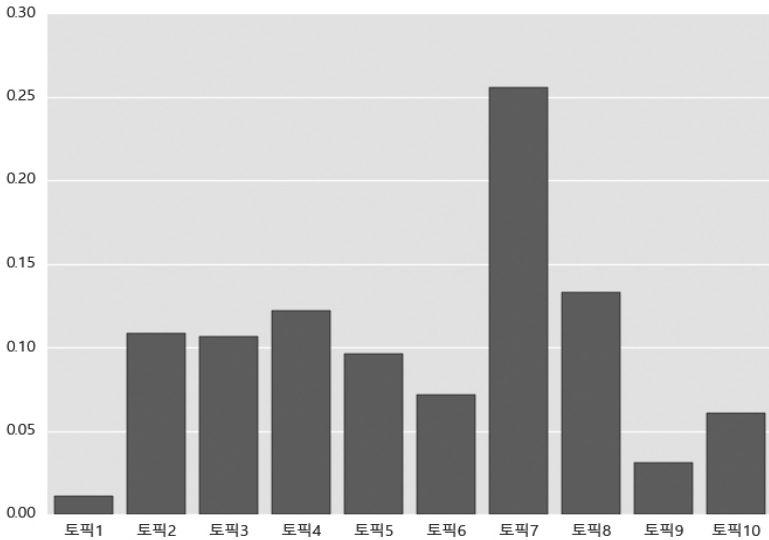
III

IV

V

그림 III-8 d군집 토픽 분포

(단위: %)



출처: 텍스트마이닝 분석.

## (2) 주요 현안 분석

2015년 4분기는 남북한이 DMZ 지뢰도발에 합의(8.22)하면서 남북 대화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남북한은 남북당국회담 개최, 이산가족 상봉행사 개최, 민간교류 활성화 등에 합의했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는 조계종 방북(10.2), 금강산 산림 방제(10.5), 겨레말큰사전 사업(10.12~19), 천주교 방북(10.23), 농자재와 비료지원(10.27), 남북노동자축구대회(10.28~31) 등 남북한 사회문화교류를 지속적으로 확대했다. 이산가족 상봉행사는 10월 20일~26일 금강산에서 열렸다.

남북당국회담도 개최했다. 당국회담 실무접촉(11.26)이 판문점 통일각에서 개최되었고, 제1차 남북당국회담(12.11~12)이 개성공단에



서 진행되었다. 남북한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현안문제를 협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한국 정부는 전면적 생사확인, 서신교환 등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 환경·민생·문화 등 3대통로 개설,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조성, 개성공단 3통 문제 등을 중점적으로 제기했다.

반면에 북한은 금강산관광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하면서 이산가족 문제와 연계시켜 동시추진·동시이행을 주장했고, 금강산관광 재개에 대한 합의를 우선적으로 요구했다.<sup>128)</sup> 조평통은 대변인 담화(12.15)에서 제1차 남북당국회담이 결렬된 것은 남한 당국의 금강산관광 재개 협의 회피 등 “대결정책이 초래한 필연적 귀결”이라고 비난했다.<sup>129)</sup> 그런데 김정은 정권은 2015년 4분기에 남북관계를 개선할 의지가 없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미 이 시기에 2016년 1월 6일 제4차 핵실험 준비를 진행하고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 나. e군집(2014년 1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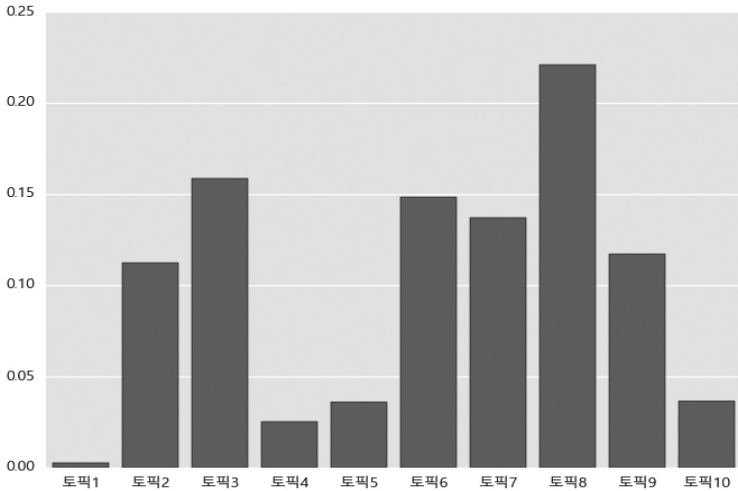
e군집은 d군집과 함께 18개 분기 중에서 2014년 1분기(3개월)로 가장적이다. 이 시기에는 2014년 신년사 이후 대화공세와 남북고위급 접촉이 있었다. 남북한은 남북고위급 접촉을 가지면서 남북관계 개선을 모색했다. <그림 III-9> e군집 토픽 분포를 보면, 김정은 정권이 박근혜정부와의 대화를 모색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sup>128)</sup> 남북회담본부 홈페이지, “제1차 남북당국회담 결과 수석대표 브리핑,” <<http://dialogue.unikorea.go.kr>>.

<sup>129)</sup> 통일부 홈페이지, “남북관계주요일지,” <[www.unikorea.go.kr](http://www.unikorea.go.kr)>.

그림 III-9 e군집 토픽 분포

(단위: %)



출처: 텍스트마이닝 분석.

유화국면에서 사용되는 토픽인 토픽8(남북관계 개선, 0.22)이 18개 분기 중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토픽6(남북공동선언 이행 요구, 0.15)도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e군집에서는 대결국면에서 사용되는 토픽인 토픽4(박근혜정부 비판, 0.03)는 매우 낮게 나타났고, 토픽5(군사적 대결정책 비난, 0.04)도 낮았다. 반면에 대결국면에서 사용되는 토픽인 토픽3(한미합동 군사연습 비난, 0.16)은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김정은 정권이 남북관계 개선을 요구하면서 한미합동 군사훈련 중단 등 대남비난을 병행했기 때문이다.

〈그림 III-9〉 e군집 토픽 분포를 보면, 김정은 정권은 박근혜정부가 집권 2년차로 들어가는 2014년 1분기에 남북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적기로 봤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북한은 한국 정부에게 한미합동 군사훈련 연기를 제안했고, 한국 정부는 남북고위급접촉에서 북한의 제안을

거부했다. 이후 남북관계는 경색되었다.

## (2) 주요 현안 분석

2014년 1분기는 신년사 이후 대화공세와 남북고위급 접촉으로 인해 대화분위기가 조성되었다. 김정은은 2014년 신년사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촉구했다. 신년사에서 한국 정부가 비방·중상, 동족대결, 종북소동 등을 중단하고 남북관계 개선에 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sup>130)</sup> 이후 파상적인 대화공세가 시작되었다. 북한은 한미합동 군사훈련 중단을 요구하면서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 전환을 요구했다. 조평통(1.5·15)은 남한이 대미결탁과 반공화국핵공조 강화, 호전적 폭언과 전쟁연습, 비방·중상 등에 매달리면서 남북관계 개선의지가 없다고 비난했고, 한미합동 군사훈련으로 인해서 남북관계가 파국을 맞았다면서 훈련 중단을 요구했다.<sup>131)</sup>

북한 국방위는 <표 III-15> 북한 국방위원회 중대제안(2014.1.16.)에서 남북관계 개선 분위기 마련을 위해 상호 비방·중상 중지, 모든 군사적 적대행위 전면 중지, 상호 핵재난 방지 조치, 북한의 핵보유 묵인 등을 요구했고, 중대제안은 위장평화공세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국방위는 삐라 살포와 대북심리전방송 중단, 군사적 적대행위 중지, 합동군사훈련 중단, NLL 군사적 적대행위 중지, 핵재난 방지, 이산가족 상봉행사, 금강산관광 재개 등을 통해 남북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자고 밝혔다.<sup>132)</sup> 그러나 박근혜정부는 북한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다.

130) “신년사,” 『조선중앙통신』, 2014.1.1.

131) “조평통 대변인, 중통기자 질의문답,” 『조선중앙통신』, 2014.1.5.; “조평통 대변인 답화,” 『조선중앙통신』, 2014.1.15.

132) “北 국방위, 우리 당국에 ‘중대제안,’” 『조선중앙통신』, 2014.1.16.; “북남관계 개선의 활로를 열어가는데 한사람 같이 떨쳐나서자,” 『조선중앙통신』, 2014.1.24.

**표 III-15** 국방위원회 중대제안(2014.1.16.)

유형	대남요구사항
1유형	- 1월 30일 이후 비방중상 전면 중지 - 호상 비방과 모든 형태의 심리전 중지
2유형	- 없음
3유형	- 모든 군사적 적대행위 전면 중지
4유형	- 우리의 핵무력은 미국의 핵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수단이고 동족을 공갈하고 해치기 위한 수단은 아님 - 남조선 당국이 미국의 위협천만한 핵타격수단들을 남조선과 그 주변수역에 끌어들이는 무모한 행위 중단 - 외세의 핵은 용인하고 동족의 핵은 부인하는 이중적 행태 중단
5유형	- 없음

출처: “北 국방위, 우리 당국에 ‘중대제안,’” 『조선중앙통신』, 2014.1.16.

**표 III-16** 남조선당국과 여러 정당, 사회단체들, 각 계층 인민들에게 보내는 공개서한(2014.1.16.)

유형	대남요구사항
1유형	- 뼈라 살포 중단 - 대북심리전 중단
2유형	- 이산가족상봉 행사 개최 - 금강산관광 재개 - 북남협력과 교류 활성화
3유형	- 한미합동 군사훈련 전면중단 - 서해 5개섬 열점수역 등 모든 군사적 적대행위 중단
4유형	- 핵재난 방지 위한 현실적 조치 - 남조선 당국이미국의 핵타격수단들을 조선반도와 그 주변지역에 끌어들이는 행위 중단 - 남조선당국은 민족의 자위적 핵무력에 대한 시비 중단
5유형	- 없음

출처: “북남관계 개선의 활로를 열어나가는데 한사람 같이 떨쳐나서자,” 『조선중앙통신』, 2014.1.24.

북한 적십자회는 1월 24일 이산가족 상봉을 제의했고, 국방위원회는 2월 8일 고위급 접촉을 제안했다. 남북한은 2월 12일 판문점에서 김규현 국가안보실 1차장과 원동연 통일전선부 부부장을 각각 수석대표로 고위급접촉을 진행했고, 상호 관심 사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sup>133)</sup> 그러나 남북한은 이산가족 상봉과 한미합동 군사훈련에 대해 입장 차이를 드러냈다. 북한은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상호비방 중상과 군사적 적대행위를 중단하고, 2월 24일 예정된 한미군사훈련을 이산가족상봉 행사 이후로 연기하고, 최고준엄과 체제에 대한 한국의 언론보도를 통제하라고 요구했다. 남북한은 우여곡절 끝에 이산가족 상봉과 상호비방 중지에 합의했고,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개최했다. 그러나 북한이 요구한 군사적 적대행위 중단, 최고준엄과 체제에 대한 언론보도 통제 등은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sup>134)</sup>

고위급 접촉 이후 김정은 정권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정책을 비난했다. 국방위원회 검열단 비망록(3.26)에서는 “우리 국방위원회 검열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다시는 《천안》호사건의 《북소행》설을 떠들지 않겠다는것을 공식 확약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sup>135)</sup> 조평통(3.26)과 북남고위급접촉 대변인(3.29)은 반공화국빠라 살포 행위가 남북관계의 파국적 후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위협했다.<sup>136)</sup> 남북관계는 다시 대결국면으로 돌아갔다.

133) 고위급접촉은 전체회의의 2회, 수석대표 접촉 2회 등 4번의 회의를 진행했다.

134) 남북회담본부, “「남북 고위급 접촉」(2.12) 결과,” <<http://dialogue.unikorea.go.kr>>; “남북고위급접촉 북측대표단 대변인 담화,” 『조선중앙통신』, 2014.3.11.

135) “백년, 천년이 흐르다 해도 《천안》호침몰사건의 《북소행》설은 절대로 통할수 없다,” 『조선중앙통신』, 2014.3.26.

136)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보도 제1058호,” 『조선중앙통신』, 2014.3.26.; “남북 고위급접촉 북측대표단 대변인 담화,” 『조선중앙통신』, 2014.3.29.



## IV. 군집별 통일담론의 특징

이경화(통일연구원)







이 장에서는 김정은 정권의 통일담론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기존의 통일정책이나 통일전략에 대한 직접적인 분석과 달리 북한의 담론이 북한의 정책 방향이나 전략을 담고 있다는 전제하에서 담론 분석을 통해 통일정책을 유추해보았다.

담론은 ‘언어 단위의 최상위 단위’이며 다양한 의미를 복합적으로 내재하고 있다. 담론은 또한 사회적으로 사건(events)이 구성되고 이것이 유통 및 전파되는 대상체가 된다.<sup>137)</sup> 담론 분석은 담론이 완전하게 중립적·객관적일 수 없고 또한 자발적·창조적일 수 없으며, 담화 생산자가 속한 특정 문화와 사회, 이념뿐만 아니라 담화의 유통이나 소비 과정에 영향을 받는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sup>138)</sup>

그런 면에서 ‘통일담론’은 ‘통일전략’ 또는 ‘통일정책’과 구별된다. 한국 사회에서는 통일담론을 통일전략 및 통일정책과 함께 통일패러다임의 구성요소이자 통일전략의 하위 개념인 통일정책의 한 구성요소로 본다.<sup>139)</sup> 통일패러다임의 한 구성요소로서 통일담론이란 “통일에 관한 국가적 개인적 철학의 총체로서, 통일에 대한 규범과 가치를 생산하는 인식론적 배경”을 의미한다.<sup>140)</sup> 반면, 통일전략은 통일 추진에 대한 장기적인 구상, 통일정책은 통일 달성을 위한 가용 자원과 수단을 의미한다.<sup>141)</sup> 통일담론은 국가와 사회의 교환과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되며 수정·보완되는 과정을 거친다.

북한의 통일담론은 다른 사회와 달리 북한 정권이 일방적으로 형성

137) 김효연·김규훈, “비판적 담화 분석”의 문법교육적 적용 가능성: 문법 담화 교육을 중심으로, 『국어교육연구』, 제61집 (2016), p. 86.

138) 박병선, “비판적 담화분석 이론의 응용 방안 모색: 한국어 교육을 중심으로,” *Journal of Korean Culture*, vol. 22 (2013), pp. 295~296.

139) 성기영 외, 『신동북아질서 시대의 중장기 통일전략』 (서울: 통일연구원, 2014), pp. 91~94.

140) 통일연구원, 『제10차 KINU 통일포럼: 통일담론 3.0과 북한 변화 전략』, p. 3.

141) 위의 책, pp. 2~3.

I
II
III
IV
V

하며 정권에서 사회로 수직적으로 전달한다. 또한, 북한의 통일담론은 정치적 목표를 이행하는 정치언어로 구성된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담론을 통한 정치는 지배계급의 언어를 통한 억압적 지배를 의미한다. 집권 세력이 자신들의 이해를 통찰하고 사회구성원으로부터 지지와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치적 상징, 가치체계의 생산 과정이 된다.<sup>142)</sup> 이 장에서는 김정은 정권의 통일담론을 통해 권력 상승의 새로운 정책방향과 전략을 추론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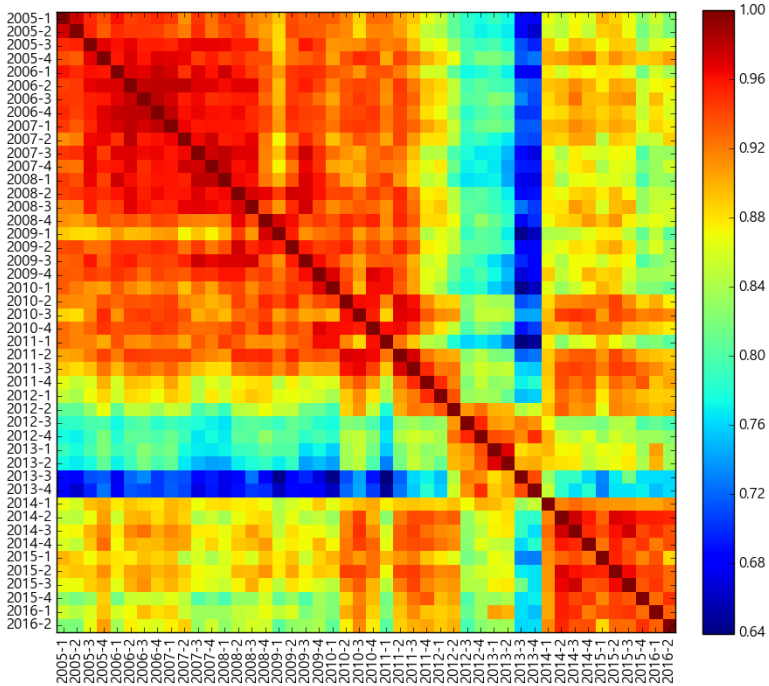
## 1. 분기별 통일담론 군집화

앞 장의 대남정책 군집화와 마찬가지로 <그림 IV-1> 문서 간 유사도 시각화 및 <그림 IV-2> 분기별 통일담론의 계층적 군집화를 이용해 김정은 정권의 분기별 통일담론을 유사한 특성을 가진 서로 다른 두 개의 군집으로 구분하였다. 김정은 정권의 통일과 관련한 담론에서는 두 시기에 주목할 수 있다. 첫 번째 시기는 2012년 1·2분기와 2014년 1분기부터 2016년 2분기이며, 두 번째 시기는 2012년 3분기부터 2013년 4분기까지이다.

---

<sup>142)</sup> 강명구·박상훈, “정치적 상징과 담론의 정치,” 『한국사회학』, 제31집 봄호 (1997), p. 125.

그림 IV-1 문서 간 유사도 시각화: 통일담론



출처: 텍스트마이닝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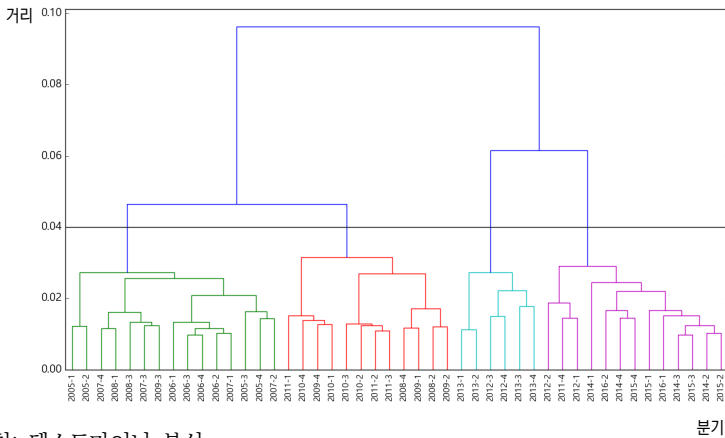
〈그림 IV-1〉은 2005년부터 2016년도 2분기까지 ‘통일, 반통일, 련 방제’의 단어가 포함된 노동신문 기사를 통일담론과 관련한 것이라고 간주하고 추출한 자료들의 문서 간 유사도를 계산한 것이다.

12년 동안 통일담론과 관련해 사용된 명사의 개수는 38,627개였다. 각 연도를 분기별로 나누면 총 48개의 문서가 생성되며 이들의 상관관계를 시각화하면 위의 〈그림 IV-1〉과 같다. 빨간색에 가까울수록 서로 유사한 단어들을 사용했다는 의미이다. 〈그림 IV-1〉을 분석해보면 2012년 3분기의 지점부터 2013년까지 통일담론의 상관도가 상당히 낮아짐을 알 수 있다.

- I
- II
- III
- IV
- V

이와 비슷하게 문서 벡터의 유사도를 계산하는 방법으로 <그림 IV-2>에서는 계층적 군집화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를 살펴보면 김정일 정권 시기와 김정은 시기가 서로 다른 군집으로 묶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거리 0.04를 구분선으로 했을 때, 2012년 1·2분기와 2014년 이후가 비슷한 군집(A)으로 묶이며 역시 2012년 3·4분기와 2013년이 비슷한 군집(B)으로 묶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A군집과 B군집은 서로 0.06에 가까운 상대적으로 먼 거리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덧붙여 김정일 정권 시기와 김정은 정권 시기는 0.10에 가까운 거리가 나타나 김정일과 김정은의 통일담론이 상당히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sup>143)</sup>

**그림 IV-2** 분기별 통일담론의 계층적 군집화



출처: 텍스트마이닝 분석.

<sup>143)</sup> 그 밖에도 이 표를 토대로 여러 가지 분석이 가능하다. 2005년부터 김정일 정권의 통일담론을 살펴보면 2008년 2분기를 제외하고는 2008년 3분기까지 유사한 내용의 담론이 나타났으며, 2008년 2분기, 2008년 4분기부터 2011년 3분기까지 비슷한 담론 유형이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0.04 거리를 기준으로 김정일 정권에서 구분되는 시기상의 통일담론 차이는 김정은 정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

A군집과 B군집은 서로 다른 특징을 가진 것으로 나타난다. 다음 <표 IV-1>은 통일과 연관된 문서(통일, 반통일, 련방제 단어 포함 문서)를 토픽별로 분류한 것이다.

표 IV-1 토픽 모델링

토픽1	토픽2	토픽3	토픽4	토픽5	토픽6	토픽7	토픽8	토픽9	토픽10
전쟁	혁명	박근혜	건설	혁명	위원회	수령	인권	선언	성명
대결	수령	투쟁	생산	수령	사회주의	아버이	파쇼	공동	사업
공화국	건설	대한	사업	전쟁	김정일	총련	패당	자주	대한
도발	사상	집권	경제	승리	조선로동당	사랑	대한	거래	위원회
북남관계	승리	정권	일군	해방	위원장	애국	공화국	투쟁	패당
조선반도	령도	사건	발전	체육	령도자	력사	탄압	평화	총련
평화	사회주의	세력	세계	위원회	위업	대한	보안법	력사	리명박
패당	주체	패당	기술	최고사령관	세계	위인	녀성	북남관계	역적
책동	높이	파쇼	대한	조선인민군	김정은	태양	사회	애국	공화국
대한	위업	독재	부문	중앙	김일성	혁명	사상	수령	지역

출처: 텍스트마이닝 분석.

위의 <표 IV-1> 토픽 중 두 시기의 의미 있는 차이를 비교할 수 있는 토픽들의 주요 주제를 간단하게 나타내면 다음 <표 IV-2>와 같다.

I  
II  
III  
IV  
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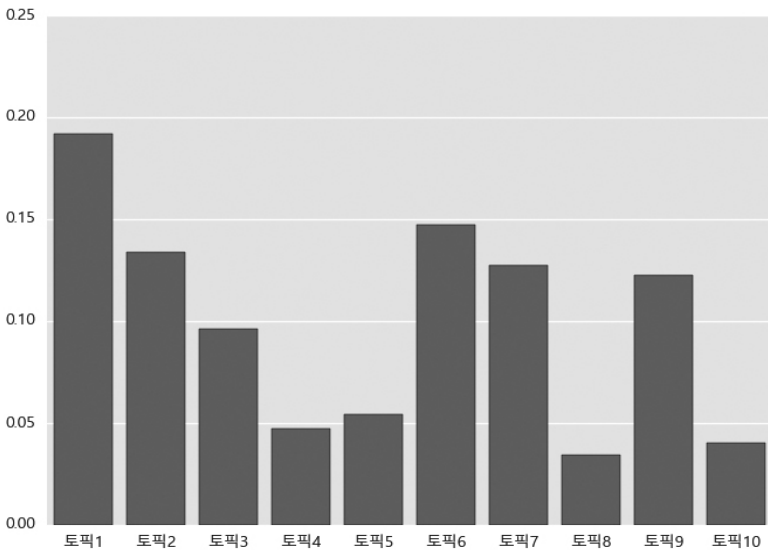
표 IV-2 토픽 주제

토픽	주제	주로 사용된 단어
1	한미군사협동 비난과 대남 위협	전쟁·대결·공화국·도발·북남관계·조선반도
2	통일업적	혁명·수령·건설·사상·승리·령도·사회주의·주체·위업
3	한국 정부 비난(대통령)	박근혜·투쟁·집권·정권·패당·파쇼·독재
6	주체사상과 통일업적	사회주의·김정일·조선로동당·령도자·위업·김정은
8	한국 정부 비난(인권 및 보안법)	인권·파쇼·패당·공화국·탄압·보안법·사상
9	6·15 공동선언 이행과 남북관계 개선	선언·공동·자주·겨레·투쟁·평화·북남관계·애국

출처: 필자 작성.

그림 IV-3 A군집의 토픽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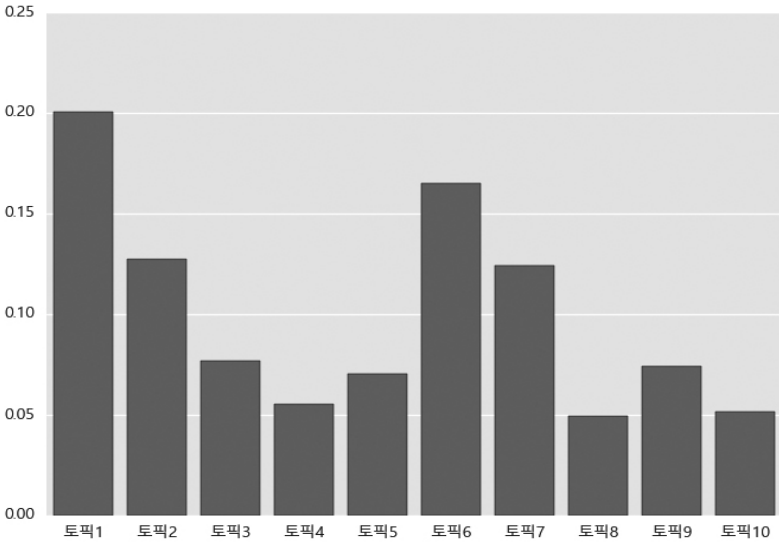
(단위: %)



출처: 텍스트마이닝 분석.

그림 IV-4 B군집의 토픽 분포

(단위: %)



출처: 텍스트마이닝 분석.

A군집과 B군집의 토픽 차이는 대통령의 이름을 언급하며 한국 정부를 비난하는 토픽3이 A군집에서 다소 확대된 것이고, ‘주체사상과 선대 통일 업적’을 강조하는 토픽6은 B군집에서 상대적으로 증가하였다. 더욱 두드러진 차이점이 나타나는 것은 토픽8과 토픽9이다. 인권 및 보안법을 담은 한국 정부를 비난하는 주제는 B군집에서 더 많이 등장하였으며 남북관계 개선을 주제로 한 내용은 A군집에서 상대적으로 다수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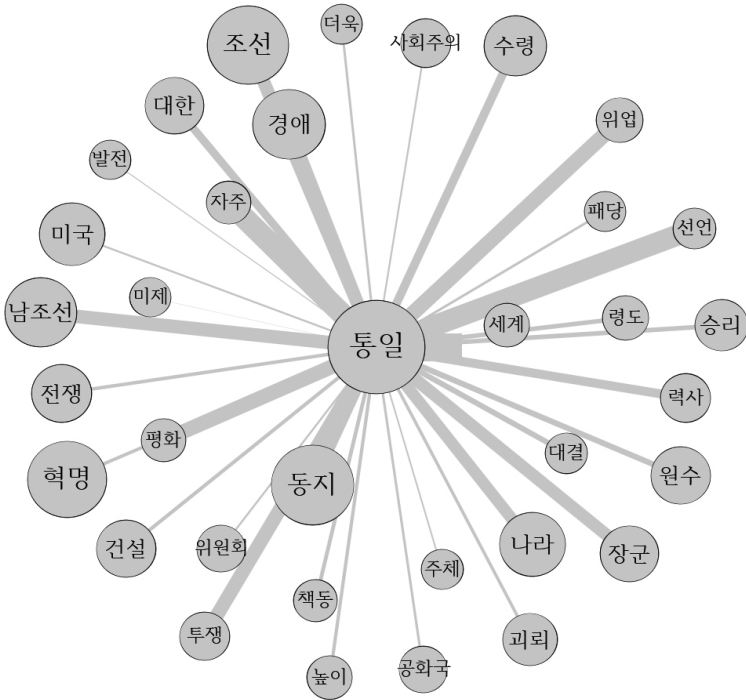
전체적으로 분석해보면, A군집과 B군집의 토픽의 차이는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 A군집에서는 B군집에 비해 대통령 비난이 다소 증가하고 남북관계 개선을 주제로 한 내용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B군집에서는 인권 및 보안법에 대한 한국 정부 비난이 다소 증가하여 나타났고,

- I
- II
- III
- IV
- V





그림 IV-6 B군집 - 통일과 함께 쓰인 단어의 네트워크



출처: 텍스트마이닝 분석.

다음은 A군집과 B군집에 등장하는 단어를 빈도수로 나타낸 것이다. A군집에만 등장하는 단어는 김정은, 김정은, 김일성이며 반면 B군집에만 등장하는 단어는 최고사령관, 조선인민군, 인민군, 군사, 강성국가 등의 단어이다. A군집에서는 B군집 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빈도로 나타나는 것은 북남관계<sup>144)</sup> 등의 단어이며 B군집에서 두드러지게 높은 빈도로 등장하는 것은 전쟁, 원수, 괴뢰 등의 단어이다.<sup>145)</sup>

<sup>144)</sup> '북남관계'의 단어는 A군집에서 0.003047의 비중으로 나타나지만 B군집에서는 0.001473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비중으로 나타난다.

I
II
III
IV
V

표 IV-3

단어 빈도수 분석 통한 군집의 특징: 통일담론

(단위: 건, %)

A군집			B군집		
단어	빈도수	비율	단어	빈도수	비율
통일	28,367	0.011716	인민	13,718	0.01308
인민	27,260	0.011259	통일	10,411	0.009927
민족	26,877	0.011101	조국	9,580	0.009135
동지	24,109	0.009958	민족	9,079	0.008657
혁명	22,246	0.009188	동지	8,512	0.008116
조국	21,763	0.008989	조선	8,301	0.007915
남조선	18,189	0.007513	혁명	8,011	0.007638
수령	15,915	0.006573	경애	7,104	0.006774
경애	15,788	0.006521	남조선	7,009	0.006683
조선	14,593	0.006027	나라	6,266	0.005975
미국	13,249	0.005472	미국	6,134	0.005849
나라	12,905	0.00533	수령	5,736	0.005469
김정일	12,347	0.0051	전쟁	5,401	0.00515
장군	12,130	0.00501	원수	5,397	0.005146
김정은	11,922	0.004924	건설	5,346	0.005097
력사	10,582	0.004371	장군	5,191	0.00495
건설	10,451	0.004317	과외	4,688	0.00447
투쟁	10,319	0.004262	승리	4,538	0.004327
사상	10,253	0.004235	사회주의	4,117	0.003926
김일성	9,784	0.004041	투쟁	4,101	0.00391
사회주의	9,605	0.003967	력사	4,096	0.003906

<sup>145)</sup> <표 IV-3>은 각각의 군집에 나타나는 단어를 빈도순으로 정렬한 것이다. 상위 단어 30여 개 정도만 제시하였다. 전체 표는 부록2에 수록되어 있다.

A군집			B군집		
단어	빈도수	비율	단어	빈도수	비율
공화국	9,302	0.003842	위원회	3,910	0.003728
자주	9,279	0.003833	공화국	3,859	0.00368
위업	9,215	0.003806	위업	3,625	0.003456
령도	9,112	0.003764	령도	3,569	0.003403
전쟁	9,077	0.003749	세계	3,443	0.003283
위원회	8,971	0.003705	평화	3,355	0.003199
승리	8,348	0.003448	자주	3,335	0.00318
괴뢰	8,186	0.003381	책동	3,220	0.00307
평화	7,833	0.003235	선언	3,072	0.002929
세계	7,739	0.003196	대결	3,019	0.002879
주체	7,712	0.003185	주체	2,968	0.00283
원수	7,526	0.003108	패당	2,936	0.002799
모든	7,442	0.003074	더욱	2,902	0.002767
북남관계	7,377	0.003047	미제	2,878	0.002744
대결	7,170	0.002961	발전	2,852	0.002719

출처: 텍스트마이닝 분석.

이처럼 텍스트마이닝 분석을 통해 도출된 통일담론의 A군집과 B군집의 차이는 A군집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강조하면서 통일에 대한 보다 다양한 논의가 나타난 반면, B군집에서는 평화 및 6·15 공동선언 등을 강조하면서도 상대적으로 공세적인 내용들이 많이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I
II
III
IV
V

## 2. 군집별 통일담론 특징: 토픽 모델링을 이용한 분석

### 가. A군집(2012년 1·2분기 및 2014년 1분기·2016년 2분기)의 특징

이 시기 통일담론의 공통된 특징은 남한 정부를 비방하면서도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내용이 다수 등장하며 정권 수호를 위한 평화보장, 평화체제 등의 내용을 부각한 것이다. 즉, B군집과 달리 상대적으로 남북관계 개선과 연방제에 대한 담론이 다수 등장하면서 동시에 남한에 대해 공세적인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 2012년 1분기에 이러한 논조가 시작되어 당분간 중단되었다가 2014년에 다시 이어졌으며, 2016년 도에는 기존의 논조를 바탕으로 새로운 통일방안이 제시되었다.

2012년 1분기와 2분기 시기 김정은은 김정일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인한 혼란에 대한 방어적 태도로 남한의 급변사태 대비, 긴급조치 등을 ‘흡수통일에 대한 망상’으로 강력하게 비난하는 논조를 내놓았다.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 2012년 1월 5일자 노동신문에서 ‘민족의 대국상에 대한 무례와 무도한 전쟁소동’으로 비난하였으며 “민족의 어버이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모독”이라며 우리 정부에 대해 ‘역적패당, 역도, 반통일, 반민족적, 친미파쇼의 광신자, 악의 원흉’ 등으로 강도 높은 비난을 하였다.<sup>146)</sup>

또한, 이명박 정부가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에 기초하여 북남 관계를 개선해 나갈데 대한 원칙적 입장을 무시했다.’며 남북관계의 악화에 대해 남한 정부를 비난하였다.

---

<sup>146)</sup> “괴뢰역적패당의 친인공노할 반인륜적,반민족적죄악의 진상을 폭로한다,” 『로동신문』, 2012.1.5.

ooo 정권은 집권4년간 6.15시대를 <잃어버린10년>으로 락인 하면서 <흡수통일>을 대북정책의 대전제로 삼고 우리의 그 무슨 <급변사태>를 노린 <기다리는 전략>을 추구해왔다. 이러한 <대북정책>과 전략이 북과 남 사이의 신뢰를 여지없이 무너뜨리고 북남관계를 최악의 상태에 몰아넣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sup>147)</sup>

그 밖에도 북한은 한반도 문제에서 남한을 배제하려는 모습도 보였다. 2012년 1월 20일자 노동신문에서는 남한이 북한의 핵위협으로 인해 6자회담의 핵회담의 당사자로 참여하려 한다며 이를 비난하였다.

지구상에 핵무기가 존재하는 한 세계 그 어느 곳에 있든 모든 나라들은 다 핵위협에 직면해있다. 핵전쟁이 일어나면 적아쌍방은 물론 제3자들까지 포함하여 지구 전체가 참화를 입게 되어있다. 남조선당국의 론리대로라면 세계의 모든 비핵국가들이 다 핵문제의 당사자이고 다 핵회담에 참가해야 한다는 황당한 론리가 되는 것이다.<sup>148)</sup>

이처럼 북한은 ‘남한 정부가 미국과 북한의 신뢰 조성을 방해하고 있으며 6자회담이 재개되지 않는다면 그 책임 또한 남한에 있다.’며 적개심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남북관계 개선 의지가 내포되어 있다.

또한 이 시기 통일담론에서는 북한의 안전보장과 평화수호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북한은 통일과 안전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련방제 통일방안이 조선반도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최상의 방안’으로 제시하기도 하였다.<sup>149)</sup> 구체적인 실현 방안으로 2007년 1

147) “ooo<정권>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전을 엄중히 교란시킨 책임에서 벗어날수 없다.” 『로동신문』, 2012.1.21.

148) “파렴치한 거짓말로 민심을 우롱한 시정배들의 죄악: 공동선언도 흥정물로 삼은 반역의 무리.” 『로동신문』, 2012.1.20.

I
II
III
IV
V

0·4 선언에서 채택된 “서해수역을 평화수역으로 만들데 대한 합의”, “유관측들과 함께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북과 남이 협력할데 대한 합의” 등을 거론하였다.<sup>150)</sup>

한반도의 평화수호에 대한 논의는 노동신문 2012년 2월 20일자에서 다시 논의되었는데 한미합동 군사연습에 대해 북침전쟁도발책동으로 비난하며 조선반도의 평화 수호에 대한 강조, 미군의 철수를 주장하였다.<sup>151)</sup> 또한 미국에 대해 ‘적대시정책과 핵전쟁전략을 포기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하였다.

ooo패당이 추구하는 체제대결은 우리의 사상과 제도를 부정하고 <자유민주주의체제하의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그 전제가 북침전쟁이라는 것은 너무도 명백하다. 역적패당이 외세를 등에 업고 북침불장난소동을 번질나게 벌리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치 않다. 지난 3월 ooo패당이 우리의 최고존엄을 악랄하게 중상모독하는 한편 외세와 야합하여 대규모적인 북침합동군사연습들을 련이어 강행한 것도 그 연장이다. 온 삼천리 강토를 잿더미로 만들고 우리 겨레를 피바다에 몰아넣더라도 체제대결야망을 실현하겠다는 것이 만고역적 ooo패당의 흥심이다.<sup>152)</sup>

다음 <표 IV-4>는 2012년 1월부터 6월까지 북한의 통일방안인 ‘련방제’라는 단어를 포함하는 기사의 내용이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한국 정부에 대한 비난 외에도 북한의 평화 보장과 평화 수호를 위한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다.

149) “조선반도의 안전과 동북아시아의 평화보장을 위한 불멸의 공헌,” 『로동신문』, 2012.2.16.

150) “파렴치한 거짓말로 민심을 우롱한 시정배들의 죄악: 공동선언도 흥정물로 삼은 반역의 무리,” 『로동신문』, 2012.1.20.

151) “조선반도평화수호의 강위력한 보루,” 『로동신문』, 2012.2.20.

152) “민족의 어버이, 조국통일의 구성,” 『로동신문』, 2012.4.24.

표 IV-4 2012년 1·2 분기 ‘련방제’ 포함 노동신문 기사<sup>153)</sup>

일자	제목
2012.1.5.	괴뢰역적패당의 천인공노할 반인륜적, 반민족적죄악의 진상을 폭로한다 - 조국평화통일위원회서기국 상보
2012.1.18.	위대한 김정일 장군님은 영원한 선군태양, 민족의 아버지로 천 세만세 온 겨레와 함께 계신다. - 조국통일연구원 공보
2012.1.20.	파렴치한 거짓말로 민심을 우롱한 시정배들의 죄악: 공동선언도 흥정물로 삼은 반역의 무리
2012.1.21.	000정권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전을 엄중히 교란시킨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군축 및 평화연구소 연구보고서
2012.2.8.	련방제통일은 우리 당의 확고부동한 의지
2012.2.10.	불한당들의 가소로운 대화타령
2012.2.16.	조선반도의 안전과 동북아시아의 평화보장을 위한 불멸의 공헌
2012.2.20.	조선반도평화수호의 강위력한 보루
2012.4.23.	대결광신자들의 종착점은 종국적 파멸

출처: 필자 작성.

2012년 3분기부터 중단되었던 김정은 정권의 통일담론은 2014년부터 양적으로 증대하였으며 그 내용이 구체화되기 시작하였다. 다음의 <표 IV-5>와 <표 IV-6>을 보면 2014년부터 2015년까지 ‘련방제’를 포함한 통일 관련 기사가 비교적 많은 수준이다.

<sup>153)</sup> 노동신문의 기사 중 북한의 통일방안인 ‘련방제’라는 키워드를 포함한 기사를 검색하여 추려낸 것이다. 텍스트마이닝 기법으로 ‘통일, 반통일, 련방제’라는 키워드로 문서를 추출하였으며, 여기서는 북한이 제시하는 통일방안인 ‘련방제’로 한정하여 살펴보았다. 외국 대사 면접 등 형식적인 외교 내용을 담은 선전 기사는 배제하였다.

표 IV-5 2014년 ‘련방제’ 포함 노동신문 기사

일자	제목
2014.3.1.	북남공동선언리행은 평화보장의 기본방도
2014.4.3.	핵포기 망상, 체제대결광증에서 벗어나야 한다.
2014.4.24.	북남관계의 전도는 전적으로 박근혜의 태도여하에 달려있다.
2014.4.29	송고한 조국통일의지로 한생을 불태우시며 체제대결, 전쟁을 바라는가
2014.5.15.	체제통일 망상은 언제 가도 실현될수 없다.
2014.6.8.	통일의 보자기로 감싼 체제대결, 북침전쟁론
2014.6.23.	반통일세력의 두 개 조선 조작책동에 철추를 내리시어
2014.7.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성명 백두산 절세위인들께서 조국통일성업에 쌓아올리신 민족사적대업적은 천추만대에 길이 빛날 것이다.
2014.8.4.	자주통일을 추동하는 위대한 사상리론적 지침
2014.8.12.	불순한 체제통일야망에서 깨어나야 한다
2014.9.29.	유엔총회 제69차회의에서 우리나라 대표단 단장 연설
2014.10.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군축 및 평화연구소 대변인 담화
2014.10.6.	련방제통일을 위한 길에 빛나는 불멸의 민족사적 업적
2014.10.11.	고려민주련방제창립방안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 온 민족이 떨쳐나서자
2014.10.14.	북남선언들의 리행은 시대의 요구, 거래의 지향 남조선주둔 미군은 조선통일의 주요장애물
2014.10.15.	조선통일의 가장 현실적인 방안
2014.11.8.	공명정대한 통일방안이 마련되던 나날을 더듬어
2014.12.13.	조국통일3대헌장은 민족공동의 통일대강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군축 및 평화연구소 연구보고서
2014.12.16.	제 처지도 모르는 자들의 헛된 망상

출처: 필자 작성.



표 IV-6 2015년 ‘련방제’ 포함 노동신문 기사

일자	제목
2015.1.7.	우리의 통일현장은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
2015.1.10.	체제대결, 제도통일을 추구하지 말아야 한다
2015.1.14.	민족공동의 통일현장. 통일대강을 따라야 한다
	조국통일의 대강 불변의 원칙
	미국은 조국통일의 악랄한 훼방군
2015.6.3.	체제대결망동이 빚어낸 극도의 불신과 긴장
2015.6.15.	거래의 가슴에 소중히 간직된 6.15 통일시대
2015.6.16.	역사적인 6.15 공동선언의 가치따라 북남관계발전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나가야 한다.
2015.6.20.	공동선언에 대한 입장부터 바로가져야 한다.
2015.6.23.	분열주의세력에 내리신 준엄한 철추
2015.6.29.	반민족적인 체제통일 야망을 버려야 한다
2015.7.9.	자주,평화통일,민족대단결의 기치를 높이 들고 제2의 6.15 통일시대를 열어나가자 - 조국통일민족련합 남측본부 성명 발표
2015.8.4.	온 거래를 조국통일유훈관철으로 부르는 불멸의 기치
2015.8.10.	체제통일은 대결광신자들의 허황한 망상
	백두산절세위인들께서 조국해방과 나라의 통일성업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은 민족만대에 길이 빛날 것이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비망롱
2015.9.15.	외세의존이 아니라 자주의 입장에 서야 한다.
2015.10.2.	성과를 이룩하며 전진하는 평화협상
2015.10.11.	우리 인민의 조국통일위업을 지지
2015.10.14.	련방제통일은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숭고한 뜻
	10월에 대한 생각
2015.11.3.	통일국가건설의 위황한 설계도
2015.11.17.	체제통일 야망을 드러낸 교과서 국정화 소동
2015.11.24.	애국위업의 한길에서 - 조국통일투쟁이 우리도 한몫
2015.12.4.	체제대결의 력사에 증지부를 찍어야 한다
2015.12.13.	북남관계에 림하는 자세부터 바로가져야 한다
2015.12.27.	스스로 드러내놓은 동족대결의 흉심

출처: 필자 작성.

I  
II  
III  
IV  
V

2014년과 2015년의 통일담론을 살펴보면 북한은 박근혜정부에 대해 ‘체제대결, 체제통일, 외세의존’에 대한 비난을 하였다. 박근혜정부의 ‘통일대박, 통일시대 대비,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등에 대해서는 ‘체제대결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비난하고 연방제통일로 나아가야 할 것을 주장하며 ‘그 밖에는 전쟁밖에 벌어질 수 없음’을 강조하였다.<sup>154)</sup>

반면, 남북관계 개선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냉전시대와 다른 관점을 가져야 할 것을 주장하였다. 즉, “사상과 제도가 다르면 적대시하던 냉전시대의 관점에서 벗어나 체제대결의 관점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하였다.<sup>155)</sup> 핵개발에 대해서는 “우리 핵은 통일의 장애도, 북남관계개선의 걸림돌도 아니며 공화국의 핵무력은 외세의 침략야망을 억제하고 자주통일과 민족만대의 평화와 안전, 번영을 위한 확고한 담보”라고 주장하며,<sup>156)</sup> 북한은 핵을 보유하는 것이 남북관계를 막는 것이 아니며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남한이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2016년에 북한은 1980년에 열렸던 제6차 당대회 이후 36년 만이자 김정은 집권 5주년인 2016년 5월 6일~9일, 제7차 당대회를 개최하였다. 김정은 정권의 본격적인 개막을 선언하면서 채택한 결정서에서 통일과 관련하여 ‘조국통일 3대헌장, 연방제 방식의 통일, 남북관계 개선, 적대행위 중지’ 등을 강조하였다. 새로운 내용이나 선언보다는 과거의 답습에 치우쳤으나 통일에 대해 적극적으로 언급하고 담론을 확대하기 시작하였다.

북한의 제7차 당대회와 그 이후 통일과 관련된 각종 담론 및 담화가 쏟아져 나왔다. 다음 <표 IV-7>에서 알 수 있듯이, 제7차 당대회 이후인 5월과 6월의 두 달 동안에만 다양한 주체에서 수많은 담론이 제시되었다.

---

154) “북남관계의 전도는 전적으로 박근혜의 태도여하에 달려있다.” 『로동신문』, 2014.4.24.

155) “시대착오적인 적대 관념에서 벗어나야 한다.” 『로동신문』, 2014.4.16.

15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성명.” 『로동신문』, 2014.7.7.

표 IV-7 2016년 ‘련방제’ 포함 노동신문 기사

일자	제목
2016.1.4.	가장 현실적인 통일방안 - 우루과이, 브라질출판보도물의 글
2016.1.13.	체제대결은 불신과 긴장격화의 근원
2016.2.7.	거래의 가슴마다에 뜨겁게 간직된 불멸의 통일대강
<b>제7차 당대회 이후</b>	
2016.5.8.	3. 조국의 자주적 통일을 위하여
2016.5.9.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결정서
2016.5.11.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하신 당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를 여러나라 출판보도물들 보도
2016.5.14.	당 제7차대회에서 제시된 조국통일방침을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찬성한다. - 재미동포전국연합회 대변인 성명 발표
2016.5.15.	조국의 자주적 통일은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
2016.5.17.	절세위인의 숭고한 애국애족의 뜻과 불멸의 조국통일대강을 높이 받들고 자주통일위업의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가자
2016.5.19.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기 위한 가장 공명정대한 통일대강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하신 당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를 여러나라에서 광범히 보도
2016.5.22.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밝혀주신 불멸의 조국통일대강을 높이 받들고 자주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거족적인 투쟁에 힘차게 떨쳐나서자 -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김기남동지의 담화 절세위인의 통일대강을 받들어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위한 거족적투쟁에 총매진할 것이다 - 반제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 성명
2016.5.23.	북남공동선언의 기치를 높이 들고 자주통일의 새시대를 열어나가자 조국땅위에 통일강국을 일떠세우는 애국성전에 이바지해나갈 것이다. - 총련본부 위원장들 담화 발효
2016.5.24.	민족자주와 민족대단결, 평화보장과 련방제실현의 대통로를 기어이 열어나가겠다. - 김영대 조선사회민주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담화 북남, 해외의 광범한 애국력량은 민족대단결의 기치밑에 조국통일의 대통로를 힘차게 열어나가자 - 최진수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북측본부 의장 담화

I  
II  
III  
IV  
V

일자	제목
2016.5.25.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방침은 온 겨레를 민족대단결 으로 힘있게 추동하는 불멸의 고무적 기치이다. - 강련학 조국통일민 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의장 담화
	불멸의 통일대강을 높이 받들고 조국통일의 대통로를 열기 위하여 힘 차게 싸워나가자 - 리종혁 조국통일연구원 원장 담화
2016.5.26.	경애하는 원수님을 통일의 령수로 높이 받들어모시고 조국통일운동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다 - 류미영 천도교천우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담화
	련방제는 평화적통일의 유일한 방도
2016.5.27.	위대한 통일대강을 높이 받들고 자주통일의 궤도따라 힘차게 전진하 자 - 주영길 조선직업총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 담화
2016.5.28.	온 민족이 힘을 합쳐 존엄높고 번영하는 통일강국을 반드시 일떠세울 것이다. - 방강수 민족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 담화
2016.5.29.	통일애국의 필봉을 높이 들고 자주통일위업의 최후승리를 힘있게 고 무추동해나갈 것이다 - 차승수 조선기자동맹중앙위원회 위원장 담화
2016.5.30.	삼천리강토우에 존엄높고 번영하는 통일강국을 일떠세우는 투쟁에서 조선녀성의 기개를 힘있게 떨쳐나가자 - 김정순 조선민주녀성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 담화
2016.6.2.	조선로동당의 앞길에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것이다
2016.6.3.	조국통일대강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 힘차게 떨쳐나설 것이다. - 총련의 중앙단체 책임일군들이 강조
2016.6.10.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제시된 조국통일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자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정당, 단체련석회의 진행
2016.6.11.	미국은 우리 인민의 지향과 대세의 요구를 똑바로 보고 중대결단을 내 려야 한다. - 미합중국에 보내는 공개서한
2016.6.14.	조선사회민주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진행
2016.6.15.	북남공동선언의 기치를 높이 들고 조국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자 천도교천우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진행
2016.6.17.	온 겨레를 조국통일의 대통로를 열기위한 투쟁으로 부르는 애국애족 의 호소를 열렬히 지지한다. - 총련중앙상임위원회 부의장 담화 발표
2016.6.23.	하나의 조선로선을 불변의 기치로 내세우시고

출처: 필자 작성.

특히 당대회 이후 각 조직에서 담화를 발표한 것이 눈에 띈다. 그 내용은 7차 당대회에서 제시된 새로운 통일노선에 대한 실천 의지를 다지고, 남한의 계층까지 아울러 통일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결의로 이루어져 있다.

조선직업총동맹, 조신민주여성동맹, 천도교 청우당, 조선기자동맹 등의 중앙위원회 위원장의 대표 담화를 통해 각계 각층의 조직은 김정 은의 조국통일방침을 관철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이러한 노력은 남 한 계층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선언되었다.

#### 나. B군집(2012년 3·4분기~2013년 4분기) 특징

2012년 중반기부터 2013년 말까지의 통일담론에서는 A군집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연방제에 대한 논의는 거의 나타나지 않으며 반면 위협적이고 공세적인 담론이 확대되었다. 당시의 주요 사건들을 살펴보면, 2013년 2월 제3차 핵실험이 발발했으며, 이명박정부의 임기가 끝나고 박근혜정부가 새롭게 등장한 시기였다. 2013년 3·4분기에는 대남 비난이 고조되었던 시기이기도 하다.

이 시기에는 통일담론이 ‘통일대전’의 위협으로 나타났으며 조선인 민군의 역할을 상당히 강조하였다. 북한의 통일방안인 ‘련방제’를 포함한 노동신문 기사는 다음 <표 IV-8>과 같이 거의 등장하지 않았다.

**표 IV-8** 2012년 3·4분기~2013년 4분기 ‘련방제’ 포함 노동신문 기사

일자	제목
2013.3.7.	조선의 핵억제력은 자위를 위한 조치 - 조선의 통일과 평화를 위한 국제련락위원회 서기장 담화 발표
2013.10.31.	가장 정당한 조국통일방안 - 남녘겨레들 높이 칭송

출처: 필자 작성.

I
II
III
IV
V

B군집에서 사용된 단어의 빈도를 A군집과 비교해 보면, 그 차이가 확연히 드러난다. A군집에서 빈번히 사용되며 통일담론에서 자주 등장하게 되는 김일성(비율\_0.004041),<sup>157)</sup> 김정일(0.0051), 김정은(0.004924)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하지 않는 것이다. 대신 높은 비율로 등장하는 단어는 전쟁(0.00515), 원수(0.005146), 괴뢰(0.00447)이다. 그 밖에도 A군집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던 ‘최고사령관, 인민군, 조선인민군’ 등 군사적 단어와 ‘강성대국’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였다.

가장 큰 특징은 ‘통일대전’이라는 단어의 사용이다. 북한의 통일대전 언급은 A군집의 초반부에 해당하는 2012년 1월부터 2012년 6월까지 단 두 개의 문서에서만 등장하였다. B군집에서는 2012년도 10월부터 12월까지에만 38건, 2013년에 통일대전 언급은 246건의 문서에서 나타났다. 이러한 특성은 B군집에만 한정된 것으로 이후 다시 A군집으로 돌아가는 2014년에는 39건, 2015년도에는 47건으로 다시 줄어든다.<sup>158)</sup>

2012년 10월 통일대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외세의 핵전쟁머슴군이 되어 북침전쟁도발에 미쳐날뛰는 000 패당의 망동은 용납될수 없다. 도발에는 즉시적인 대응타격으로, 침략전쟁에는 정의의 조국통일대전으로! 이것이 우리 군대와 인민의 원칙적립장이며 철석의 의지이다. 미제와 000역적패당이 감히 불질을 해댄다면 우리는 천금을 주고도 살수 없는 그 절호의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고 조국통일대전으로 이어가 최후승리를 이룩하고야 말 것이다. 조선반도에 조성된 엄중한 정세는 온 겨레를 정의의 조국통일대전으로 부르고 있다.<sup>159)</sup>

157) 이하 비율 생략, 표는 부록 참조.

158) 노동신문에서 통일대전이 사용된 기사를 검색한 것으로, 단어의 수가 아닌 ‘통일대전’이 포함된 기사 수이다. 2013년에 246건이 검색된 것은 2013년 한 해에 노동신문 기사에서 ‘통일대전’ 단어를 포함한 일자가 많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루에 복수의 문서에 ‘통일대전’ 단어가 포함되는 경우도 다수 있다.

이처럼 북한은 ‘통일대전’을 언급하며 남한의 위협에 대해 강조하고 전쟁을 통한 통일로 대응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후 2013년에는 신년사에서부터 ‘조국통일대전’에 대해 자주 언급하였다.

모든 군인들을 실전능력을 갖춘 일당백의 싸움군으로 키우고 고도의 격동상태를 유지하여 침략자들이 감히 신성한 우리 조국강토에 선불질을 한다면 무자비하게 격멸소탕하고 조국통일대전의 승리를 이룩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sup>160)</sup>

우리는 이미 도발에는 즉시적인 대응타격으로, 침략전쟁에는 정의의 조국통일대전으로 대답한다는 원칙적립장을 내외에 천명한바 있다. 통일된 강성국가를 기어이 일떠세우기 위하여서는 크고작은 그 모든 전쟁도발행위를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단호히 짓부셔버려야 할것이다.<sup>161)</sup>

이처럼 B군집에서는 통일담론에서 통일대전의 승리를 위한 군인들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으며 강성국가를 달성할 수 있다고 선전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통일대전의 제시는 김정을 군사지도자로 내세우고 내부 결속을 위한 목적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한편으로 또 다른 특징은 연방제의 통일방안에 대한 논의는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민족적 차원에서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의 이행을 통한 평화와 통일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5년간 리명박패당의 반역적인 대결정책으로 말미암아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에 의해 마련된 모든 성과들이 말살되고 조선반도에 일촉즉발의 전쟁위험이 조성된 현실은 우리

159) “북남공동선언의 가치를 높이 들고 자주통일의 길을 열어나가자,” 『로동신문』, 2012.10.4.

160) “신년사,” 『로동신문』, 2013.1.1.

161) “새해벽두부터 벌리는 동족대결소동에 각성을 높여야 한다,” 『로동신문』, 2013.1.3.

민족의 화해와 단합, 평화와 통일을 실현하자면 보수패당의 동족대결정책부터 철폐시켜야 한다는 것을 뚜렷이 실증해주고 있다.<sup>162)</sup>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리행하며 자주적으로 평화와 통일, 민족번영의 길을 열어나가려는 것이 남녘의 민심이다.<sup>163)</sup>

위의 내용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이 시기 김정은 정권의 통일담론은 다른 기간과 차별되는 특징을 보인다. ‘연방제’ 논의가 축소되고 한국 정부에 대한 강한 비난과 병행하여 민족 단결의 담론은 여전히 강조되었다.

### 3. 통일담론의 내용적 특징

앞서 살펴보았듯이, 김정은 정권 시기의 통일담론은 한국 정부에 대한 공세성의 확대, 전쟁 위협, 6·15 공동선언의 이행을 통한 남북관계 개선 등을 요구해왔다.

김정은 정권의 통일담론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앞서 정량적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북한의 담론에 대한 정성적 분석을 통해 그 진행 추이를 살펴보았다.

#### 가. 전체적인 담론의 특징

김정일 시기에는 ‘연방제에 의한 통일’, ‘6·15 공동선언’이나 ‘민족

---

162) “시대의 요구, 겨레의 지향,” 『로동신문』, 2103.1.9.

163)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민족번영의 길을 열어나가자,” 『로동신문』, 2013.1.9.



단결' 등을 강조하면서 직접적으로 남한 정부를 비난하는 내용은 빈번하게 등장하지 않았다. 간혹 비난의 대상이 등장하는 경우에도 '외세의 분렬리간책동',<sup>164)</sup> '반통일분렬주의자',<sup>165)</sup> '미국과 남조선호전세력'<sup>166)</sup> 등으로 표현하였다. 통일담론의 흐름도 선대 정권의 업적 칭송이나 통일의 당위성, 연방제 통일방식의 강조 등 온건한 논조가 주를 이루었다.

반면에, 김정은 정권에서는 초기부터 통일담론에서 민족공조를 강조하면서도 한국 정부에 대한 강도 높은 비난조가 등장하였으며, 남북관계를 강조하는 내용에서도 정부를 비난하는 내용이 함께 등장하고 있다. '민족자주'와 '우리민족끼리', '6·15 공동선언'의 이행을 강조하면서 같은 사실에서 '내외호전광', '전쟁도발책동', '남조선 괴뢰'<sup>167)</sup> 등으로 남한 정부를 겨냥한 강도 높은 비난이 등장하였다. 또한, "북남관계가 최악의 상태이며 동족대결이 사상 류례없는 험악한 지경"이라고 제시하며 이는 남한 정권의 남북관계 '파괴 책동', '미국과의 공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sup>168)</sup>

이처럼 김정은 정권의 통일담론은 6·15 공동선언의 이행을 통한 남북관계 개선을 강조하면서도 남한 정부에 대한 비난, 특히 체제통일 및 제도통일에 대한 강도 높은 비난이 나타났다.

164) "민족단합의 길을 열어준 희망의 표대," 『로동신문』, 2007.6.4.

165) "위대한 통일선언으로 분렬선언을 날려버리시며," 『로동신문』, 2007.6.23.

166) "위대한 수령님의 유훈을 받들어 자주통일을 앞당기자," 『로동신문』, 2007.8.4.

16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군축 및 평화연구소 대변인 담화," 『로동신문』, 2014.10.2.

168) 위의 기사.

I
II
III
IV
V

## 나. 대남위협 강조(2012년 후반~2013년 말)

2012년 중반기부터 2013년의 시기는 ‘연방제’에 기반한 통일 논의가 상당히 줄어들었으며 상대적으로 남한을 위협하는 ‘통일대전’의 담론이 확대된 시기이다. 2013년 2월 한국에 박근혜 정권이 들어서고, 북한은 제3차 핵실험을 실시하였으며 김정은 정권의 안정화를 도모한 시기였다. 대남정책에서도 긴장고조의 정책이 추진되었다. 이 시기의 전쟁 위협과 조국통일대전의 언급은 대남 또는 대외 위협의 목적보다도 김정은의 유훈통치 강조와 대내 결속을 강조한 내용일 가능성이 높다.

2011년 말 김정은은 집권하면서 “나의 통일관은 무력통일이며 직접 탱크를 몰고 서울까지 진격하겠다.”고 언급했다고 알려져 있다.<sup>169)</sup> 또한 2012년에는 “3년 내 혁명무력으로 통일할 것”이며 2015년을 ‘통일대전의 해’로 선포했다고 한다.<sup>170)</sup> 2012년 8월 25일 김정일 선군영도 25돌 기념행사를 맞아 북한은 ‘조국통일대전과 강성국가건설의 승리’를 다짐했다.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선군영도따라 백두산대국의 필승의 기상을 힘있게 떨치며 조국통일대전과 강성국가건설의 최후승리를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가야 한다.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혁명업적을 김일성조선의 만년재보로 끝없이 빛내여나가야 한다.<sup>171)</sup>

이후 북한의 ‘통일대전 구호’가 본격적으로 사용된 것은 2012년 9월이다. 김정은 정권은 2012년 9월 9일 NLL 일대를 담당하는 서남전선

169) “김정은, 2015 통일대전 만반의 지시,” 『조선일보』, 2014.3.26.

170) “김정은의 통일대전에 대한 분석,” 『데일리NK』, 2014.9.15.

171) “선군의 길에 백두산대국의 영원한 승리와 변영이 있다,” 『로동신문』, 2012.8.25.

사령부를 창설하였는데 조선인민군 서남전선사령부 공개보도를 통해 처음으로 통일대전 구호가 등장하였다.<sup>172)</sup> 공개보도에서는 서해에서의 전쟁 위협을 제시하였다. 여기에 “이제 남은 것은 통일대전을 위한 최후명령뿐”이라고 하며 ‘도발에는 즉시적인 대응타격으로, 침략전쟁에는 정의의 조국통일대전으로!’라는 구호를 처음으로 제시하였다.<sup>173)</sup>

2013년에도 ‘통일대전’의 언급은 ‘강성국가 건설’과 ‘선군위업’과 함께 자주 등장한다.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원수님을 높이 모시고 무진막강한 핵억제력을 가진 천하무적의 백두산혁명강군이 있기에 조국통일대전의 승리는 확정적이며 어버이장군님의 필생의 념원인 주체의 사회주의강성국가는 이 땅에 반드시 일떠서게 될것이다.<sup>174)</sup>

김정은은 김정일의 뒤를 이어 선군정치를 지속하여 통일대전의 위업을 이어나가고 통일강성국가를 달성할 것임을 강조하며 최고사령관으로서의 입지를 다지려는 모습을 보인다.

위인중의 위인을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시고있기에 선군조선의 국력은 천백배로 다져지고있으며 통일강성국가의 희망찬 래일이 밝아오고 있다. 위대한 백두령장의 힘찬 발걸음을 따라 우리 군대와 인민이 벌려나가는 조국통일대전은 필승의 애국위업이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조국통일대전명령을

<sup>172)</sup> 북한의 서남전선사령부는 2011년 6월 15일 출범한 우리 군대의 서북도서방위사령부에 대응하기 위해 창설된 조직으로 파악된다. NLL 일대만을 담당하는 부서가 신설된 것이다. “北 남 서방사 대응위한 서남전선사령부 창설,” 『데일리NK』, 2012.9.23.

<sup>173)</sup> “조선인민군 서남전선사령부 서해를 어김없이 도발자들의 최후무덤으로 만들것이라고 언명,” 『조선중앙통신』, 2013.9.9.

<sup>174)</sup>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성원들,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작전지휘성원들,조선인민군 지휘성원들과 함께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으시였다,” 『로동신문』, 2013.2.17.

I
II
III
IV
V

받아안고 산악같이 일떠선 우리 군대와 인민의 기세는 하늘을  
찌를듯 높다.<sup>175)</sup>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북한은 한국 정부에 대한 비난과 전쟁위협을  
확대하면서도 동시에 자주적 통일, 민족 단결을 통한 6·15 공동선언  
이행을 주장하는 논조는 그대로 유지하였다.

#### 다. 김정은 시대 통일논의의 발전(2014년 이후~2016년 중반기)

2013년 말까지 연방제의 통일방식을 자주 언급하지 않던 김정은  
정권은 2014년 이후 다시 연방제 통일방안에 대한 담론을 확대하기  
시작하였다. 2013년까지의 통일담론이 대내 결속 및 김정일의 유훈을  
따르는 모습을 강조하며 김정은 정권의 공고화를 위해 창출되었다면,  
2014년 이후로 북한의 통일담론은 대내적으로 김정은 시대의 통일  
방식을 선포하며 대남 및 대외 화자까지 염두에 둔 내용으로 그 폭을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16년 제7차 당대회 이후 북한은  
적극적으로 연방제 논의를 확대하면서 남한과 북한을 아우르는 통일  
담화를 각 계층에서 내놓기도 하였다.

##### (1) 비평화적 통일방안의 제시

김정일 정권은 김일성 정권에서 통일방안에 대해 ‘평화적 방법’과  
‘비평화적 방법’을 추진했었던 것<sup>176)</sup>과 달리 평화적 방법에 의한 통일

175) “천출명장의 조국통일의지를 과시한 력사적사변,” 『로동신문』, 2013.3.4.

176) 김일성 정권 시기 추진되었던 비평화적 방법에 의한 통일은 ‘직접 남침에 의한 무력 통일’과 ‘남한 혁명에 의한 혁명통일’로 폭력을 수반한다. 신정현, 『북한의 통일정책』 (서울: 을유문화사, 1989), p. 47.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통일을 위한 길에는 “평화적 방법 밖에” 없음을 강조해왔다.<sup>177)</sup> 김정은 정권의 통일담론에서 2012년까지도 평화적 방법을 통한 통일이 강조되었다. 또한, 평화적 방법으로는 연방제 통일이 유일함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의 통일은 평화적으로 이룩되어야 한다. 북과 남에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가 존재하고 있지만 그것은 무력행사의 조건이 아니다. 북과 남의 사상과 제도는 달라도 민족공동의 리익을 앞세우면서 평화적 방법으로 얼마든지 통일을 실현할 수 있다. 우리가 시종일관 주장해온 연방제 통일은 그 유일한 방도이다.<sup>178)</sup>

그러나 2014년 이후에는 통일의 방법에 과거 김일성 정권에서 주장하였던 ‘비평화적 통일방법’이 있음을 강조하며 핵전쟁을 암시하는 위협을 병행하고 있다. 이러한 비평화적 통일방법을 언급하는 내용은 남한의 제도통일에 대한 비난과 함께 등장하여 김정은 정권의 흡수통일에 대한 경계심을 드러낸다. 2014년 4월 24일자 노동신문에서는 “체제통일은 북과 남이 서로 자기의 제도를 양보하려 하지 않는 조건에서 비현실적이며 그것이 초래할 것은 전쟁밖에 없다.”고 강조하기도 하였다.<sup>179)</sup>

이러한 경향은 제7차 당대회 이후 더욱 자주 등장하고 있는데, 2016년 5월 8일자 노동신문에서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는데는 평화적 방법과 비평화적 방법”이 있을 수 있으며 북한은 이 두 가지 방법에 모두

177) 본 연구의 조사 시작점인 2005년 이후로 한정된다. “조국통일을 위한 위대한 방도,” 『로동신문』, 2005.5.8.

178) “조선반도평화수호의 강위력한 보루,” 『로동신문』, 2012.2.20.

179) “북남관계의 전도는 전적으로 박근혜의 태도여하에 달려있다,” 『로동신문』, 2014.4.24.

준비되어 있다고 강조하기도 하였다.<sup>180)</sup>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다 준비되어 있지만 조국강토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조선민족이 또다시 전쟁의 참화를 당하는 것을 바라지 않기 때문에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여왔습니다.<sup>181)</sup>

김정은은 이처럼 북한이 비평화적 통일방법에도 준비되어 있다고 선언하며 평화적 통일을 위해 ‘련방제’를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이러한 김정은 정권의 논조는 ‘평화통일로 가는 길은 북한이 주장하는 연방제 밖에 없으며 다른 방법으로는 전쟁’이라는 통일에 대한 공세적 입장을 나타낸다. 이는 앞서 제시되었던 통일대전과의 결합으로도 볼 수 있다. 남한의 흡수통일 또는 제도통일가능성을 ‘전쟁의 길’로 간주하고 이에 대해 북한은 ‘정의의 통일대전’으로 대응할 것을 강조한다.<sup>182)</sup>

## (2) 평화보장의 강조

북한의 평화보장 강조는 체제생존을 위한 안전보장의 성격을 지닌다. 북한은 평화보장을 위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논의를 지속적으로 제시해왔다. 평화보장을 위한 평화협정 체결논의는 1955년부터 시작되었는데 통일논의와 마찬가지로 북한의 상황에 따라

---

180) “조국의 자주적 통일을 위하여,” 『로동신문』, 2016.5.8.

181) 위의 기사.

182)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만일 남조선당국이 천만부당한 《제도통일》을 고집하면서 끝끝내 전쟁의 길을 택한다면 우리는 정의의 통일대전으로 반통일세력을 무자비하게 쓸어버릴 것이며 겨레의 숙원인 조국통일의 역사적위업을 성취할 것이다.” “련방제는 평화적 통일의 유일한 방도,” 『로동신문』, 2016.5.26.

몇 번의 변화가 나타났다. 평화협정 체결논의는 1970년대까지는 남과 북 간의 협정 체결로 주장되었다. 이때까지는 주한미군 철수를 전제로 남북한 군축 및 협정 체결에 주력하였다. 1972년 김일성은 남북평화협정과 주한미군 철수 이후 남북한이 군축하는 것으로 한반도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제의를 하기도 하였다. 당시의 평화협정은 남북한 무력행사 불사용이라는 소극적이고 제한적인 의미로 사용되었다.<sup>183)</sup>

역사적으로 북한의 평화 논의와 통일논의는 분리되어 있었으며 평화를 당면 정책과제로 더 우선시하고 있었다.<sup>184)</sup> 1980년에 북한이 제시한 ‘평화보장 4원칙’에서는 “조선반도의 평화는 나라의 통일을 지향하는 것으로 한다.”고 언급함으로써 평화가 통일의 하위개념으로 볼 수도 있지만 북한의 평화 제의는 통일개념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해왔으며 통일논의보다 비중이 상승되어 왔다.<sup>185)</sup>

김정은 정권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담론에서 한반도의 통일과 안전에 대해 크게 강조하고 있다. 2012년에는 “민족이 항시적인 전쟁 위험 속에서 살고 있으며 통일과 안전이 가장 중요하고, 이것이 유기적으로 직결되어 있다.”고 강조하기도 하였다.<sup>186)</sup> 2013년에는 기존 입장과 마찬가지로 “온 민족이 북남관계발전과 조선반도평화보장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풀어나갈 것”으로 제시하면서 “조선반도의 평화보장문제는 북남관계를 전진시키고 조국통일을 실현하는데서 선차적으로 나서는 문제”로 언급하였다.<sup>187)</sup>

183) 고유환,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북한의 전략: 북·미협정,” 광태환 외, 『한반도 평화체제의 모색』 (서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1997), p. 64.

184) 서보혁, “북한의 평화제안 추이와 그 특징,” 『북한연구학회보』, 제13권 제1호 (2009), pp. 72~73.

185) 위의 글, p. 76.

186) “위대한 김정일 장군님은 영원한 선군태양, 민족의 아버지로 천세만세 온 겨레와 함께 계신다,” 『로동신문』, 2012.2.16.

187) “민족공동의 번영을 위한 고귀한 업적을 마련하시어,” 『로동신문』, 2013.10.4.

북한의 안전과 평화보장에 대한 담론은 김정은 시대에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점차적으로 통일과 결합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2016년 1월 1일에 “조선반도에서 전쟁위험을 막고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는 것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근본조건”<sup>188)</sup>으로 제시하였다. 제7차 당대회 이후 제시된 조선로동당의 조국통일노선에서는 “민족자주와 민족대단결, 조선반도에서의 평화보장과 연방제 실현이 조국통일3대 현장을 관철하여 조국통일의 길을 열어나가기 위한 우리 당의 투쟁방침”<sup>189)</sup>으로 강조하면서, 평화보장을 연방제와 동일선상에 두는 통일노선의 4가지 방침 중 하나로서 제시하였다. 김정은 정권의 연방제 통일방안과 평화보장의 선언적 동시추진은 통일 과업의 중대성을 의미할 수 있다.

### (3) ‘민족자주’의 새로운 의미

김정은 정권은 제7차 당대회를 계기로 핵을 중심으로 한 민족자주의 새로운 의미를 제시하고 있다. 제7차 당대회 이후 ‘우리 민족의 전략적 지위’를 자주 언급하고 있다. 담론상으로 직접적인 언급은 나타나지 않지만, 이러한 새로운 지위의 근거는 핵보유국 지위로 인한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최근 북한은 통일담론에서 과거에는 “제 나라, 제 민족을 지킬 힘이 없어 여기저기를 찾아다니며 보호와 독립을 구걸하고 해방이 분렬로 이어지는 통탄스러운 비극조차 막을 수 없었던” 예전과 달리 이제 ‘조선민족’이 “자기 존엄과 리익을 함부로 통락하는 그 어떤 침략자도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 강대한 민족으로 운명의 극적전환”을 이룩하였다

<sup>188)</sup> “신년사,” 『로동신문』, 2016.1.1.

<sup>189)</sup> “조국의 자주적통일은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 『로동신문』, 2016.5.15.



고 주장하고 있다.<sup>190)</sup> 북한은 이러한 논조로 제7차 당대회의 자주통일 대강에 “새로운 높이에 올라선 우리 민족의 전략적지위와 강력한 주체 힘에 토대하여 조국통일의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가려는 단호한 결심과 의지”가 담겨있다고 언급하고 있다.<sup>191)</sup>

이처럼 북한은 자신들이 새로운 지위에 올라 있으며 강력한 힘이 있으므로 미국이 통일문제에서 배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것이 “민족자주의 새롭고 참된 의미”라고 강조하고 있다.<sup>192)</sup>

민족자주의 새로운 의미를 강조하는 김정은 정권은 핵을 중심으로 북한이 강력해졌으며 미국을 배제하고 통일을 이룰 수 있다는 담론을 확대하고 있다.

#### (4) 연방제 통일방안 제시의 적극성

김정은 정권은 연방제 통일방안을 계승하고 있다. 노동신문 2014년 4월 29일자에서는 “련방제통일은 우리나라의 통일을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하며 북과 남의 모든 계급, 계층들과 각당, 각파가 다같이 받아들일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며 공명정대하며 합리적인 통일방안”이라고 하며 북한의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였다.<sup>193)</sup>

연방제안은 그동안 북한이 일관되게 주장해 온 통일방식이다. 그 성격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계기 때마다 의미 있는 변화를 보여왔다. 특히 1980년대 말 이후 수세적으로 변화되었다고 평가된다.<sup>194)</sup> 1991

190) “미국은 우리 인민의 지향과 대세의 요구를 똑바로 보고 중대결단을 내려야 한다. - 미합중국에 보내는 공개서한,” 『로동신문』, 2016.6.11.

191) 위의 기사.

192) 위의 기사.

193) “체제대결 전쟁을 바라는가,” 『로동신문』, 2014.4.29.

194) 배영애, “탈냉전기 이후의 북한의 연방제 통일방안 변화 분석,” 『통일전략』, 제7권

I
II
III
IV
V

년 김일성은 신년사에서 “조국통일은 누가 누구를 먹거나 누구에게 먹히지 않는 원칙에서 1민족, 1국가, 2제도, 2정부에 기초한 련방제 방식”으로 실현해야 함을 주장하면서 체제생존을 위해 수세적 입장을 견지하면서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통일방안을 제시하였다.<sup>195)</sup> 이러한 방향은 김정일 정권에서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으로 더욱 구체화되었다. 북한은 정상회담 이후 연방제안이 남한의 연합제안과 서로 공통성이 있음을 인정하고 ‘낮은 단계의 연방제’는 정치, 군사, 외교권 등 현존하는 남북정부의 기능과 권한을 그대로 두고 ‘민족통일기구’를 내오는 방식으로 협의하였다.<sup>196)</sup>

김정은 정권은 선대의 통일방안을 계승하면서도 더욱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연방제안의 발전을 모색하고 있다.

첫 번째로, 김정은 정권은 2012년 중후반부터 2013년도까지 ‘련방제’에 대해 거의 언급하지 않았다. 이후 그 동안 북한에서 거의 쓰이지 않았던 ‘련방연합제’라는 명칭을 2014년 중후반의 한정된 기간 동안 여러 번 사용되었다. ‘련방연합제’는 2000년 6·15 공동선언에서 남과 북이 통일방안에서 서로의 공통성을 인정한데서 이러한 논의를 주도하기 위한 표현이다.<sup>197)</sup> 이 표현은 2014년 7월부터 12월까지 여러 번 등장했는데 남한과 북한이 통일방안에 대해 합의했다고 주장하며 선제적으로 주도적인 표현을 제시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sup>198)</sup>

---

제1호 (2007), p. 291.

195) “신년사,” 『로동신문』, 1991.1.1.

196) 조민·최대석, 『남북한 통일원칙과 통일방안의 접점』, 통일연구원 협동연구총서 2000-02 (서울: 통일연구원, 2000), p. 44.

197) 장석, 『김정일 장군 조국통일론 연구』 (평양: 평양출판사, 2002), pp. 379~394.

198)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강조는 저자) “북과 남은 온 겨레가 지지하고 민족의 공동번영을 담보하는 합리적인 통일방안을 지향해 나가야 한다. ... 북과 남은 6·15 남북공동선언에서 북측의 낮은 단계의 련방제안과 남측의 련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두 번째로, 연방제 통일방안에 대해 통일국가를 설립할 실질적 내용을 지닌 것으로 선전하였다. 2014년 10월 11자 노동신문에서는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은 련방국가형성의 원칙과 방도, 련방국가의 성격과 기능, 통일정부와 지역정부의 임무와 그 호상관계 등 통일국가 창립과 관련한 문제들이 전면적으로 밝혀져있다.”고 언급하였다.<sup>199)</sup> 또한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은 통일국가의 전모와 그 실현방도를 밝혀준 설계도이다. 이 방안은 련방국가의 조직과 구성원칙, 권한 분배와 임무, 대외적 지위 등을 북과 남의 공통된 지향과 요구에 맞게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sup>200)</sup> 즉, 북한은 연방국가형성의 원칙과 방도, 연방국가의 성격과 기능, 통일정부와 지역정부의 임무와 관계를 확정하였으며 그 조직과 구성원칙, 권한분배와 임무, 대외적 지위 등 실질적 내용까지 정했다고 선전하는 것이다.

북한은 2016년 제7차 당대회에서는 새로운 통일노선과 방침이 제시 되었다고 선언하였다. 2016년 5월 17일자 노동신문에서는 새로운 조국통일노선과 방침을 언급하고 있다.

이 노선과 방침을 끝까지 고수하고 관철해나가면 온 겨레가

합의하였다. 북과 남은 **련방련합제** 방식의 통일방안을 구체화하고 실현하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공존, 공영, 공리를 적극적으로 도모해나가야 한다.” 『로동신문』, 2014.7.7.; 6·15 공동선언을 통하여 북과 남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북측의 낮은 단계의 련방제안과 남측의 련합제안이 서로 공통점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이것은 불신과 대결의 악순환을 거듭하던 민족분렬사에서 북과 남이 처음으로 합의한 민족공동의 통일방식으로 된다. **련방련합제방식**으로 통일국가를 건설할데 대한 이 력사적인 합의는 사상과 리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민족의 대단합을 실현할 수 있는 전망을 열어놓은 거대한 민족사적 재부이며 조국통일3대현장의 정당성과 생활력에 대한 실천적 검증으로 된다. 『로동신문』, 2014.12.13.

199) “고려민주련방제창립방안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 온 민족이 떨쳐나서자,” 『로동신문』, 2014.10.11.

200) 위의 기사.

I
II
III
IV
V

바라는 통일의 종착점에 순조롭게 가닿을 수 있지만 여기에서 탈선하면 우리 민족은 항시적인 분열과 전쟁위험의 소용돌이 속에서 헤어나갈 수 없으며 궁극적으로 다 자멸을 면할 수 없게 되어있다.<sup>201)</sup>

아직 그 구체적 방향이 정확히 드러나지 않고 있으나 향후 김정은은 북한의 연방제 내용을 구체화하여 선전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 (5) 상징적 개념 사용

### (가) 통일담론에서의 태양민족

김정은 정권에서 2016년 5월 제7차 당대회 이후 정권을 공고화하면서 통일담론에서 상징적 개념이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그 중 하나가 ‘태양민족’이라는 단어이다. 이 개념은 김일성 사망 이후 예술문화계통에서 등장한 단어로 통일담론에서는 사용되지 않았다. 김일성 민족을 의미해오던 이 단어는 1994년 김일성 주석의 사망 이후 ‘김일성민족문학’, ‘태양민족문학’ 등으로 예술문화를 정치화하여 사용한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1997년 7월 29일 사회과학원에서 개최된 언어학 학술발표회에서 김정일은 ‘언어예술교양사업을 강화할 것’을 교육하면서 김일성민족과 태양민족의 우월적 선민사상을 고취하기도 하였다. 김일성 생존 시에도 태양은 절대성과 유일성을 의미하는 것이었다.<sup>202)</sup>

통일 관련 노동신문 기사에서 김정일 정권 기간 동안 이러한 단어가 사용되지 않다가, 2014년 1회, 2015년에는 2회 등장하였고 2016년도

---

201) 5월 17일자 노동신문에서는 “혁신적인 제안”으로 언급하고 있다. 『노동신문』, 2016.5.17.

202) 전영선, “북한 아리랑의 현대적 변용 양상과 그 의미,” 『한국문화논총』, 제36집(2008), p. 8.

에 들어와 6월까지 총 10회 등장하였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김정은원수님의 령도를 충직하게 받드는 여기에 민족의 숙원인 조국통일의 밝은 앞날을 앞당겨오는 유일한 길이 있다는 것은 태양민족의 후손들 모두가 심장에 새긴 철의 진리”라고 언급하고 있다.<sup>203)</sup> 이러한 내용은 남한과 북한을 아우르는 김정은의 절대성을 내세우기 위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 (나) 민족공동의 재부, 핵

김정은 정권의 통일담론에서는 지속적으로 민족공조를 강조하고 있다. 민족 중시 담론은 김정일 정권에서부터 강조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현상은 아니다.<sup>204)</sup> 이러한 내용은 남북 간의 통일 논의를 확대함으로써 미국을 더욱 한반도에서 배제하려는 시도도 담겨있다.

민족운명의 주인은 민족자신이며 모든 민족은 자기 운명을 자기의 의사에 따라 자주적으로 개척해나가야 한다. 조국통일은 우리 민족자신의 문제이며 민족의 자주권에 관한 문제이다. 따라서 우리 민족은 통일위업의 주인이 되어 자기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민족자체의 힘으로 통일을 이룩해나가야 한다.<sup>205)</sup>

그러나 김정은 정권은 ‘민족’ 담론을 내세우면서도 이에 덧붙여 핵보유를 정당화하는 것으로 자신들의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 민족 공조를 강조하는 담론과 함께 핵을 민족공동의 재산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핵은 통일조국의 룡성변명을 영원히 담보하는 민족공동의 귀중한 재부입니다.”라는 동일 제목의 노동신문 기사가 2013년 2월과

203) “조국통일성업에 바치신 민족의 대성인의 빛나는 한생,” 『로동신문』, 2016.4.11.

204) 김정일 정권의 민족담론에 대해서는 박영자, “김정일시대 북한 통일정책 추이와 평가,” 『북한연구학회보』, 제14권 1호 (2010)을 참조.

205) “조국통일은 민족공동의 통일원칙에 따라 이룩되어야 한다,” 『로동신문』, 2014.3.14.

2014년 3월에 실렸다.<sup>206)</sup>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핵을 중심으로 선군정치와 자위적인 전쟁억제력이 조국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확고한 담보이며 ‘통일조선의 국보’라고 선전하고 있다. 이는 ‘핵’이 남북한의 공동 재산이라고 선전함으로써 북한이 우월한 것처럼 선전하고 남남갈등을 야기하려는 목적으로 볼 수 있다.

#### 4. 담론을 통한 통일전략 평가

최근 북한학계 일각에서는 북한이 통일을 포기하고 분리공존을 추구한다는 내용의 두 개의 조선 전략으로의 변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sup>207)</sup> 북한이 2015년 8월 평양시간을 표준시로 변경하여 남한과 30분간의 시차를 두어 남북한의 이질성 심화를 유도한 것, 김정은 정권에서 남한에 대해 ‘대한민국’으로 표기한 것, 북한 담론에서 민족공조의 표현이 줄어들고 강성국가 및 애국 등의 단어가 증가한 것 등을 더 이상 분단국가 차원이 아닌 국가차원의 담론이 발생하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결국, 북한에서 현실적으로 3대 혁명역량이 쇠퇴하자 체제유지를 위해 분리공존하려는 두 개의 조선 전략으로 전환하였다는 가설이 제기된 것이다.

이러한 연구경향은 김정일 정권 이후 상당히 수세적이고 소극화된 북한의 통일논의에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1990년대 이후 북한의 통일역량이 여러 방면으로 쇠퇴하고 통일추진담론보다 민족공

206) “우리의 핵은 통일조국의 룡성변영을 영원히 담보하는 민족공동의 귀중한 재부입니다.” 『로동신문』, 2013.2.13.; “우리의 핵은 통일조국의 룡성변영을 영원히 담보하는 민족공동의 귀중한 재부입니다.” 『로동신문』, 2014.3.23.

207) 김근식, “남북관계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신훈과 파경을 지나 중년부부로,” *Future Horizon* (2016), pp. 22~25.

조론이 대두하면서 북한의 선공존 추구에 주력하고 있다고 보았다.<sup>208)</sup>

그러나 북한에서 김정은 정권이 점차 안정화되고 정책적 방향을 찾아가면서 통일담론이 구체화되기 시작하였고 김정일 정권과 비교하여 상당한 양의 담론을 쏟아내며 북한 주도 통일에 적극성과 공세성을 보이고 있다.<sup>209)</sup>

김정은 정권이 제7차 당대회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에서 밝힌 통일에 대한 기본 입장은 과거 1980년대부터 1990년대 선대 정권에서 형성된 노선과 정책을 그대로 유지한 것으로 평가되었다.<sup>210)</sup> 제시된 통일노선은 조국통일3대원칙과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 전민족대단결 10대 강령으로 이루어져 있는 조국통일 3대헌장과 민족대단결 5대방침이며 이에 대한 투쟁방침은 민족자주와 민족대단결, 평화보장 및 연방제 통일이다.

이러한 지속성과 함께 통일담론에서 변화된 내용은 통일 추진과 통일논의에 대한 적극성 및 공세성이다. 김정일이 통일논의에 소극적이고 통일보다는 민족 담론을 확대한 것과 달리, 김정은은 ‘련방연합제’라는 표현을 제시하기도 하였고, 연방제에 대한 구체적인 실현성을 선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7차 당대회에서 제시된 ‘주체적통일방안’을 전파하기 위해 ‘각계각층에서 남한의 계층까지 아우르는 통일제안’이 등장하기도 하였다. 민족을 강조하는 담론에서도 핵을 보유하

208) 배영애, “탈냉전기 이후의 북한의 연방제 통일방안 변화 분석,” 『통일전략』, 제7권 제1호 (2007), pp. 289~320; 최완규·이수훈, “김정일정권의 통일정책,” 『통일문제연구』, 제236호 (2001), pp. 163~170; 고병철, “북한의 통일전략은 변하고 있는가,” 『계간사상』, 1991년 봄호 (1991), p. 106; 박영자, “김정일시대 북한 통일정책의 추이와 평가,” 『북한연구학회보』, 제14권 1호 (2010), pp. 216~240.

209) 이정철, “북한의 공세적 대외정책과 경제확장전략: 핵-경제 병진노선의 역조함,” 『사회과학논총』, 제18집 (2015), pp. 29~33.

210) 통일연구원, 『제13차 KINU 통일포럼: 북한 제7차 당대회 분야별 평가 및 향후 전망』, p. 50.

는 새로운 전략적 지위와 자주성에 대해 새롭게 언급하고 있다.

김정은 정권은 이와 같은 새로운 통일담론을 내놓기 위해 상당 기간 고민했던 것으로 보인다. 2012년도 중후반부터 2013년까지 연방제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고 '통일대전'의 위협적인 담론이 주된 내용을 이루었던 시기와 2014년 후반기에 북한이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을 뒤이어 통일방안을 주도하기 위해 잠시 동안 등장했던 '련방연합제'의 제시는 북한의 통일담론을 어떤 방향으로 제시할 것인지에 대한 고심의 기간 중에 등장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북한은 2016년 제7차 당대회를 계기로 김정은 시대를 열며 통일담론의 확대와 함께 '연방제의 통일방안이 아니면 전쟁의 길 밖에 없다.'는 식의 공세적이고 적극적인 통일담론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을 종합해 보았을 때, 첫째, 북한이 북한주도의 적화통일을 포기했다고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오히려 북한이 지금 제시하고 있는 담론은 그 어느 때보다 솔직한 표현으로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북한은 지금 속내를 숨기지 않고, 북한의 체제를 위협하는 남한의 '제도통일, 체제통일'에 맞서 북한 주도의 연방제 통일방안이 '평화적인 방법'을 주장하며, 그 길이 아니면 '비평화적인 방도'인 핵전쟁으로 답할 수도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둘째, 김정은 정권에서 통일담론의 중요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김정은 정권에서 제7차 당대회를 계기로 '통일'에 대한 담론을 확대한 것은 북한의 대내외 전략에서 통일전략이 차지하는 위치가 정권의 새로운 동력을 불어 넣어줌으로써 정권 공고화를 뒷받침해 준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김정은 정권은 통일담론을 통해 핵개발을 정당화하고 평화보장과 연방제 실현을 함께 도모하려는 새로운 전략을 내비치고 있다.



# V. 결론 및 정책 시사점

오경섭·이경화(통일연구원)





# 1. 결론

## 가. 대남정책

이 연구는 조선중앙통신·노동신문에 대한 텍스트마이닝과 정성적 연구방법을 이용해서 2012년 1분기~2016년 2분기까지 18개 분기(54개월) 동안 김정은 정권의 대남정책과 통일담론의 특징을 분석했다. 북한의 공식문헌, 조선중앙통신·노동신문 등을 분석할 결과 김정은 정권은 민족해방 민주주의혁명을 목표로 한 대남전략을 고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족해방 민주주의혁명을 당규약과 사회주의헌법에 명시했고, 당·군에 대남사업담당비서·정찰총국·통일전선부 등의 대남전략 추진 조직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정은 정권은 민족해방 민주주의혁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는다. 한국을 상대로 민족해방 민주주의혁명을 실현할 수 있을 만큼 국가의 힘과 능력이 부족하고, 외부적 환경도 대북 경제제재로 인해서 심각하게 고립되었기 때문이다. 김정은 정권의 핵심엘리트들은 사실상 민족해방 민주주의혁명을 불가능한 목표로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 정권이 민족해방 민주주의혁명을 고수하는 이유는 김정은 정권의 통치를 정당화하는 통치이데올로기이기 때문이다. 김정은 정권은 민족해방 민주주의혁명을 내걸고, 미국과 한국을 적으로 설정한다. 외부의 적은 개인독재를 위한 내부 통제 수단으로 활용된다. 김정은 정권은 미국과 한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해야 한다는 명분을 가지고 인민들의 희생을 요구하고, 경제 위기 등 국가의 실패를 미국과 한국에게 전가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통치이데올로기인 대남전략을 포기하면, 3대세습 정권의 정당성은 뿌리째 흔들릴 것이다.

김정은 정권은 실제적 대남정책 목표를 국가전략의 차원에서 실행한다. 김정은 정권의 대남정책 목표는 김정은의 권력 안정화 여건 조성, 핵 국가 인정, 대남 주도권 장악과 대북정책 전환 유도 등이다. 김정은 정권은 대남정책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북한체제·지도자 비방 중단,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 전환, 한미합동 군사훈련 중단, 핵보유 정당화와 한국 정부의 북핵 묵인 유도, 남한 내 반미·반정부투쟁 선동 등의 대남 요구사항을 제시한다. 이명박·박근혜정부에서 남북관계가 악화한 것은 남북한이 북핵 문제로 대립했기 때문이다. 북한은 10·3 합의를 어기고 장거리 미사일과 핵실험을 진행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북핵 폐기를 대북정책의 핵심과제로 설정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대남정책의 목표와 대남요구사항을 거부하면서 6·15 공동선언과 10.4선언을 통해 합의된 남북한 간 거래조건의 변경을 시도했다. 남북관계는 경색되었다.

텍스트마이닝 분석 결과는 이상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김정은 정권의 대남정책은 16개 분기(48개월)가 대결국면이었고, 단 2개 분기(6개월)만 유화국면이었다. 대결국면은 3·4차 핵실험, 한미합동 군사훈련, NLL 충돌, 각종 남북한 현안을 둘러싼 대남비난, 남북고위급 접촉 무산, DMZ 지뢰도발 등의 사건이 발생했다. 남북한은 대결국면에서 첨예하게 대립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북핵 폐기를 목표로 북한의 대남정책 목표와 대남요구사항을 거부했다.

그러나 유화국면에서도 남북관계는 진전되지 않았다. 유화국면은 북한이 신년사 이후 대화공세를 펼치면서 남북고위급 접촉을 시도한 2014년 1분기와 남북한이 DMZ 지뢰도발에 합의한 2015년 4분기이다. 김정은 정권은 2개 분기의 유화국면에서도 박근혜 정부가 대남정책의 목표와 대남요구사항을 수용하는 것을 전제로 한 남북관계 개선을 주장했다. 실제로 김정은 정권은 한미합동 군사훈련 중단을 요구(토픽

3)하고, 박근혜정부를 비난(토픽4)하면서 남북관계 개선(토픽8)을 모색했다. 유화국면에서도 대결국면에서 사용하는 토픽3·4·5가 많이 등장했다. 그러나 박근혜정부는 북핵 폐기를 목표로 대북제재를 실행하면서 북한의 대남정책 목표와 대남요구사항을 거부했다. 김정은 정권에서 유화국면은 한시적이었고, 대결국면이 지속되었다.

## 나. 통일담론

김정은 정권의 통일담론 연구에서는 텍스트마이닝 분석 기법으로 통일과 관련된 문서의 상관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2012년 중반부터 2013년의 기간이 김정은 정권 내의 통일담론에서 차이를 보이는 지점이라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텍스트마이닝의 결과에 따라 통일담론의 분석시기를 두 군집으로 나누어 각 기간에 대한 텍스트마이닝 분석과 정성적 연구를 통해 김정은 정권의 통일담론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김정은 정권의 통일담론은 내용상 별다른 변화 없이 김정일의 담론을 답습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북한의 통일담론은 세습정권을 안정화하고 대내결속을 도모하는 목적과 함께 남한에 대해 남북관계 개선, 6·15 공동선언 이행, 민족자주 강조, 연방제 실현 등의 여러 일관된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분석 결과 김정은 집권 5년의 짧은 기간 동안 획기적 전환이 될 만한 커다란 변화는 없으나 내용상으로 조금씩 다른 강조점을 가지고 통일담론을 제시하고 있었다. 김정은이 정권을 장악해 나가는 초기인 2012년 중후반과 2013년까지 북한은 북한식 통일방안인 연방제에 대해 거의 언급을 하지 않았고 대신 통일대전의 위협적인 발언을 쏟아내었으며 선군 유훈 강조, 통일대전을 위한 인민군의 역할과 최고사령관으

로서 김정은의 지위에 대한 담론을 확대하였다. 2014년 이후로 김정은 정권이 ‘연방연합제’라는 단어를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함으로써 연방제 통일방안을 대내외에 어떻게 제시할 것인지 고심한 흔적도 엿보였다.

이러한 시기를 지나 김정은 정권의 본격적인 개막을 알리는 2016년 5월 제7차 당대회를 계기로 북한은 새로운 통일노선을 제시했다고 선언하며 통일에 대한 담론을 쏟아내었다. 동시에 북한 주도 통일에 대한 적극성과 공세성을 드러냈다. 특히 북한은 ‘연방제에 의한 통일이 유일한 평화통일의 길이며 그 외에는 비평화적 통일방법 밖에 없다’며 북한식 통일방안을 강조하면서도 흡수통일에 대한 경계를 드러내고 있다.

김정은 정권의 통일담론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았을 때, 김정은이 통일담론을 주도하기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했으며, 제7차 당대회를 계기로 북한의 향후 통일정책의 방향이 선언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김정은은 앞으로 더욱 공세적으로 통일담론을 제시하고, 이에 따라 적극적인 통일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식 연방제 통일방안을 한반도의 통일담론으로 주도하기 위해 그 구체적 내용을 제시하여 대내외에서 선전할 것이며, 핵을 통일담론과 연결 지어 핵개발을 정당화하고 북한이 새로운 지위의 강성국가임을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 2. 정책 시사점

### 가. 대북정책

이 연구를 통해서 김정은 정권의 대남정책은 몇 가지 중요한 특징과 행동패턴을 확인할 수 있다. 김정은 정권의 대남정책 특징과 행동패턴 분석을 통해서 도출한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 (1) 북한의 핵전략의 수단으로써 대남정책 실행

김정은 정권의 대남정책은 국가전략인 핵전략의 실행 수단이다. 대남정책의 주된 목표는 핵보유에 유리한 남북관계의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김정은 정권이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핵보유전략을 수정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을 추구한다면, 북한의 핵보유를 사실상 묵인하거나 수용해야한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핵전략을 감안해서 북한의 변화를 목표로 한 대북정책을 수립·실행해야한다. 대북정책은 크게 두 가지 접근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북핵을 묵인하거나 수용하면서 북한체제와 정권의 실체를 인정하는 접근이다. 이러한 접근은 남북한 간 교류협력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북한의 변화와 북핵 폐기를 유도한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사실상 두 개의 한국을 수용하면서, 평화공존을 모색하는 정책이다.

다른 하나는 북핵 폐기와 북한체제의 변화를 목표로 대북제재와 압박을 지속적으로 실행하는 접근이다. 한국 정부는 북핵 폐기를 최우선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대북체제와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 이러한 접근은 통일을 목표로 북한의 변화를 추구하기 위해서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대북압박을 실행하고, 북한의 정보 자유화를 촉진함으로써 북한의 변화를 추구하는 정책이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이 두 가지 접근의 사이에서 중간지대를 설정하기 어렵다. 물론 한국 정부가 이 두 가지 접근 중에서 어떤 접근을 취하든지 북핵 위협을 사실상 무력화할 수 있는 군사적 대응방안을 갖춰야한다. 한국의 안보를 북한의 선의에 맡길 수는 없기 때문이다. 또 대북정책의 두 가지 수단인 교류협력과 압박·제재를 병행해서

활용해야 한다.

## (2) 남북한 간 거래조건(6·15 공동선언과 10·4 합의) 수정 거부

김정은 정권은 한국 정부가 김대중·노무현정부에서 합의한 남북한 간 거래조건으로 돌아갈 것을 요구한다. 북한이 생각하는 균형점은 북핵을 묵인한 조건에서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을 이행하는 것이다. 이명박·박근혜정부는 북핵 폐기를 핵심적인 대북정책 목표로 설정했고, 김대중·노무현정부가 합의한 남북한 간 거래조건을 변경을 시도했다. 양 정부는 북한이 핵개발을 가속화하는 상황에서 기존의 거래조건을 파기하고, 한국의 안보에 중대한 위협요인으로 부각한 북핵 폐기를 관철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김정은 정권은 남북한 간 거래조건을 변경을 거부했다. 당연히 김정은 집권 5년 동안 남북관계는 경색되었다. 김정은 정권은 김정은의 권력 안정화 여건 조성, 핵 국가 인정, 대남 주도권 장악과 대북정책 전환 유도 등 대남정책 목표와 북한체제·지도자 비방 중단,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 전환, 한미합동 군사훈련 중단, 핵보유 정당화와 한국 정부의 북핵 묵인, 남한 내 반미·반정부투쟁 선동 등 대남요구사항을 고수했다.

이명박·박근혜정부는 남북한 간 거래 조건의 수정을 요구했다. 향후 한국 정부는 김대중·노무현정부에서 합의한 남북한 간 거래조건의 파기가 잘된 일이든 잘못된 일이든 다시 과거의 거래조건으로 돌아가는 잘못을 범하지 않아야 한다. 차기정부의 대북정책은 이명박·박근혜정부가 재설정된 거래조건을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 한국 정부는 대북 전략의 큰 그림을 그리고, 북한의 대남정책 목표와 대남요구사항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지를 숙고해서 대응해야 한다.



또한 한국 정부는 핵무기를 실전배치한 북한의 대남정책에 대비해야 한다. 핵무기를 가진 북한은 군사적 자신감을 가지고 더 공세적이고 도발적인 대남정책을 실행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 (3) 대남군사도발 위협에 대응태세 유지

김정은 정권은 언제든 자국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서 대남군사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 남북한 간 핵심이익이 충돌하는 위험 지역은 서해 NLL이다. 김정은 정권은 NLL을 무력화하고, 자신들의 해상경계선 재설정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서 서해상에서 언제든 군사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 또 김정은 정권은 DMZ 지뢰도발과 같은 저강도 도발을 감행할 수도 있고, 사이버테러를 실행할 수도 있고, 북한의 소행이라는 사실이 드러나지 않는 도발을 감행할 수도 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다양한 군사도발 실행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응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응은 DMZ 지뢰도발의 경우처럼 대북억지전략 차원에서 강경하고 단호하게 즉각적으로 실행해야 한다.

### (4) 북한체제의 특성을 고려한 대북정책 실행

북한은 김정은 비판과 체제 위협에 강한 거부반응을 보인다. 민간단체가 공개적으로 대북전단을 살포하고, 정부가 급변사태를 언급하는 것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한다. 이것은 북한의 수령유일지배체제에서 기인한다. 당·군·정의 엘리트들은 한국 정부의 김정은 비판을 묵인하지 않는다. 이는 당과 군의 엘리트들이 생존하는 방법이고, 김정은에게 자신들의 충성심을 입증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I
II
III
IV
V

대북정책결정자들은 북한체제와 엘리트들의 특성을 고려해서 대북 정책을 입안·실행해야한다. 한국 정부는 대북전략이 어떤 것이든, 사소하고 소모적인 감정싸움에 시간을 낭비할 필요는 없다. 대북전략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북핵 폐기, 인권, 개방, 정보의 자유 등 본질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집중해야한다.

## 나. 통일담론

### (1) 대북·통일정책의 일관성 유지

김정은 정권이 제시하는 통일 추진 방향은 상당히 일관되어 있다. 북한은 한반도에 '연방제' 통일방안만이 평화통일을 달성 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강조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또 다른 통일방법으로 무력통일인 핵전쟁 위협을 하고 있는 것은 북한이 남한으로 흡수통일 될 수 있다는 두려움 내지 경계심에서 기인하고 있다. 만약 북한이 남한에 의한 흡수통일 가능성이 더욱 커진다고 판단한다면, 한반도에 핵전쟁 불사의 강력한 위협이 가능하다. 우리는 이러한 북한에 대해 일관된 대북·통일정책을 유지해야 한다.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는 강력히 대응하고, 북한의 태도 변화가 있다면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 (2)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비

북한은 2012년 중반부터 2013년까지 통일대전에 대한 언급을 확대하였고 그 이후 '비평화적 통일방법'을 통한 무력통일 가능성을 제시하며 위협하고 있다. 특히 '통일대전'을 강조하는 시기에는 군인들의 역

량 구축을 도모하고 최고사령관으로서의 김정은의 군사적 이미지를 부각시켰다. 김정은 정권 시기 대남도발을 감행하는 요인은 남한의 흡수통일 또는 제도통일의 위협, 즉 남한의 통일정책에 대한 대응을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될 수 있다. 이는 북한이 한국의 통일정책에 대해 상당한 경계심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도발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3) 남남갈등을 부추기는 북한의 선전 경계

김정은 정권은 통일담론을 통해 핵보유국을 통한 지위 향상을 주장하며 대담 선전 공세를 펼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북한은 핵보유국임을 주장하며 민족적 지위가 향상된 것처럼 선전하고 있다. 동시에 공세적인 태도로 통일에 대한 주도권을 확보하고 북한의 통일 방안을 따르지 않을 경우 핵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고 위협하고 있다. 이는 남한 사회에서 핵을 가진 북한에 대한 위협과 우려를 확대하며 다른 한편으로 핵보유 주장 등 남남갈등을 부추길 여지가 있다. 또한, 남북 관계가 개선되지 못하는 현 상황에 대해 한국 정부에게 책임을 돌리고 비난하고 있다. 한국이 대북 적대시 정책을 하고 있으며, 북한에 대한 일방적 흡수통일을 추진하고 있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남북관계 악화의 책임은 한국 및 국제사회의 우려와 제재에도 불구하고 핵무기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북한에 있음을 확실하게 제시해야 한다.

### (4) 북한의 의도 파악을 통한 대북통일정책 구상

북한에 대한 대북통일정책을 구상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의도와 변화

방향을 면밀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북한은 대남통일정책에 대해 상당기간 고심의 시간을 거쳤으며 2016년 제7차 당대회를 계기로 대북통일정책의 방향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방향은 김정일 정권의 답습 보다는 더욱 공세적이고 적극적인 대남통일정책의 추진이다. 앞으로 그 그림이 더욱 명확하게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통일정책에서金正은은 2016년 제7차 당대회에서 북한의 통일노선이 김일성·김정일을 계승하는 ‘주체적 통일노선’임을 강조하며 연방제 통일방안의 추진 내용을 구체화하였다. 향후 더욱 완성된 형태의 ‘연방제’ 통일방안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金正은은 통일과 관련된 새로운 내용과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자신의 정책적 능력을 과시하고 세습 정당성을 확고히 할 것으로 관측된다.

우리는 북한이 제시하는 대남·통일담론을 통해 북한의 대남메시지와 정권 정당성 강화를 위한 숨겨진 의도를 파악하고 이에 대비하는 대북통일정책을 구상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1. 단행본

- 김계동. 『북한의 외교정책: 벼랑에 선 줄타기외교의 선택』. 서울: 백산서당, 2003.
- 김계동 외. 『현대외교정책론』. 서울: 명인문화사, 2007.
- 김동식. 『북한 대남전략의 실제』. 서울: 기파랑, 2013.
- 김정일. 『김정일선진14』.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0.
- 김진웅. 『냉전의 역사, 1945~1991』. 서울: 비봉출판사, 1999.
- 김한교 외. 『한반도의 통일전망: 가능성과 한계』. 서울: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1986.
- 로이드 젠슨 지음. 김기정 옮김. 『외교정책의 이해』. 서울: 평민사, 2010.
- 모리스 A. 이스트 외 지음. 최성권 옮김. 『비교외교정책론』. 서울: 한울아카데미, 2008.
- 박영자. 『김정은 정권의 대남 긴장조성: 2013년과 향후 전망』. 서울: 통일연구원, 2014.
- 박재영. 『국제정치패러다임』. 서울: 법문사, 1998.
- 밸러리 허드슨 지음. 신옥희 외 옮김. 『외교정책론』. 서울: 을유문화사, 2009.
- 성기영 외. 『신동북아질서 시대의 중장기 통일전략』. 서울: 통일연구원, 2014.
-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 엮음. 『북한의 국가전략』. 서울: 한울아카데미, 2003.
- 송민순. 『빙하는 움직인다』. 서울: 창비, 2016.

- 스즈키 마사유키 지음. 유영구 옮김. 『金正日과 수령제 사회주의』. 서울: 중앙일보사, 1994.
- 신정현. 『북한의 통일정책』. 서울: 을유문화사, 1989.
- 양성철·강성학 공편. 『북한외교정책』. 서울: 서울프레스, 1995.
- 오경섭. 『북한의 위기와 선군정치』. 서울: 시대정신, 2015.
- 와다 하루키 지음. 서동만·남기정 옮김. 『북조선』. 서울: 돌베개, 2005.
- 이종석. 『분단시대의 통일학』. 서울: 한울, 1998.
- 임동원. 『피스메이커』. 서울: 중앙books, 2008.
- 장 석. 『김정일 장군 조국통일론 연구』. 평양: 평양출판사, 2002.
- 전현준. 『북한의 대남정책 특징』. 서울: 통일연구원, 2002.
- 정성철. 『국내불안과 대외도발: 북한에 대한 적용 가능성 탐색』. 서울: 통일연구원, 2013.
- 조민·최대석. 『남북한 통일원칙과 통일방안의 접점』. 통일연구원 협동 연구총서 00-02. 서울: 통일연구원, 2000.
-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당력사연구소. 『우리당의 선군정치』.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6.
- 통일연구원. 『제13차 KINU 통일포럼: 북한 제7차 당대회 분야별 평가 및 향후 전망』. KINU 통일포럼 16-02. 서울: 통일연구원, 2016.
- \_\_\_\_\_. 『제10차 KINU 통일포럼: 통일담론 3.0과 북한 변화 전략』. KINU 통일포럼 15-04. 서울: 통일연구원, 2015.
- \_\_\_\_\_. 『남북관계연표: 1948~2013년』. 서울: 통일연구원, 2013.
- 편집부. 『북한 ‘조선로동당’대회 주요 문헌집』. 서울: 돌베개, 1988.
- 한기홍. 『진보의 그늘』. 서울: 시대정신, 2012.
- 현대북한연구회 엮음. 『김정일의 북한, 어디로 가는가?』. 서울: 한올아카데미, 2009.

- \_\_\_\_\_. 광승지 외 지음. 『현대북한연구의 쟁점2』. 서울: 한울아카데미, 2007.
- Joshua S. Goldstein 지음. 김연각·김진국·백창재 옮김. 『국제관계의 이해』. 고양: 인간사랑, 2004.
- Axelrod, Robert. *The Evolution of Cooperation*. New York: BasicBooks, 1984.
- Brecher, Michael and Jonathan Wilkenfeld. *The Foreign Policy of Israel*.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72.
- Clausewitz, Carl Von. *On War*.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4.
- Modelski, George. *A Theory of Foreign Policy*. New York: Frederick A. Praeger, Inc., 1962.
- Padelford, Norman J. and George A. Lincoln. *The Dynamics of International Politics*. New York: The Macmillan Company, 1962.
- Rosenau, James N. *The Scientific Study of Foreign Policy*. London: Frances Pinter, 1980.

## 2. 논문

- 강명구·박상훈. “정치적 상징과 담론의 정치.” 『한국사회학』. 제31집 봄호, 1997.
- 고병철. “북한의 통일전략은 변하고 있는가.” 『계간사상』. 1991년 봄호, 1991.
- 고유환.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북한의 전략: 북·미협정.” 광태환 외. 『한반도 평화체제의 모색』. 서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1997.

- \_\_\_\_\_. “북한의 대내 정치와 대남정책의 상관성 분석.” 『통일경제』. 제25호, 1997.
- 김근식. “남북관계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신희과 파경을 지나 중년 부부로.” *Future Horizon*. 2016.
- \_\_\_\_\_. “김정은 시대 북한의 대외전략 변화와 대남정책.” 『한국과 국제정치』. 제29권 제1호, 2013.
- 김연수. “북한의 대내·대남정책 평가: ‘후계계승의 정치와 정통성 문제’를 중심으로.” 『신아세아』. 63호(여름호), 2010.
- 김연철. “최근 남북한 환경변화에 따른 북한의 대남정책 변화.” 『통일경제』. 40호, 1998.
- 김열수. “북한의 무력도발 위협: 심리전인가, 실제인가?.” 『통일로』. 안보문제연구원, 2009.
- 김진무. “북한의 대남 정책결정과정에서 군부의 역할.” 『통일정책연구』. 제11권 2호, 2002.
- 김학노. “평화통합전략으로서의 햇볕정책.” 『한국정치학회보』. 39집 5호, 2005.
- 김효연·김규훈. “‘비판적 담화 분석’의 문법교육적 적용 가능성: 문법 담화 교육을 중심으로.” 『국어교육연구』. 제61집, 2016.
- 김효진. “김정일-김정은 체제 대남정책의 새로운 이해: 신제도주의적 관점에서.” 통일부 『신진연구논문집』. 2014.
- 박병선. “비판적 담화분석 이론의 응용 방안 모색: 한국어 교육을 중심으로.” *Journal of Korean Culture*. vol. 22, 2013.
- 박영자. “김정일시대 북한 통일정책의 추이와 평가.” 『북한연구학회보』. 제14권 1호, 2010.
- 박은정·조성준. “KoNLPy: 쉽고 간결한 한국어 정보처리 파이썬 패키지.” 『제26회 한글 및 한국어 정보처리 학술대회 논문집』. 2014.



- 박종희·박은정·조동준. “북한 신년사(1946-2015)에 대한 자동화된 텍스트 분석.” 『한국정치학회보』. 49권 2호, 2015.
- 배영애. “탈냉전기 이후의 북한의 연방제 통일방안 변화 분석.” 『통일전략』. 제7권 제1호, 2007.
- 백성호. “김일성 사후 북한 외교노선의 변화와 대외관계의 특징: 1995년부터 2004년까지 ‘로동신문’의 사설분석을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제45집 4호, 2005.
- 백학순. “최근 북한과 관련된 일련의 사태를 어떻게 보아야 하며 우리는 과연 햇빛정책을 지속해야 하는가.” 『정세와 정책』. 7월호, 1999.
- 서보혁. “북한의 평화제안 추이와 그 특징.” 『북한연구학회보』. 제13권 1호, 2009.
- 오경섭. “김정은 정권 대남전략과 한국 정부의 대응방안.” 『북한체제의 내구력 평가와 한국의 통일전략』. 제29차 세종국가전략포럼, 2014.
- \_\_\_\_\_. “북한정권의 본질과 대남도발.” 『북한 체제지속 여부와 대북정책 과제』. 세종연구소 주최 2011 대북정책심포지엄 자료집, 2011.6.28.
- 유동열. “북한의 대남전략.” 『주제가 있는 통일문제 강좌23』. 서울: 통일부 통일교육원, 2010.
- 이기종. “북한의 대남정책 결정요인과 전망.” 『국제정치논총』. 제37집 2호, 1997.
- 이정철. “북한의 공세적 대외정책과 경제확장전략: 핵-경제 병진노선의 역조합.” 『사회과학논총』. 제18집, 2015.
- 임재형. “북한외교정책결정과정의 특징과 군의 역할: 김정일 시대를 중심으로.” 『북한연구학회보』. 제6권 제1호, 2002.

전영선. “북한 아리랑의 현대적 변용 양상과 그 의미.” 『한국문화논총』. 제36집, 2008.

전희관. “‘핵보유’ 시대 북한의 대남정책 변화와 우리 사회의 논쟁.” 『인문사회과학연구』. 제16집, 2007.

최완규·이수훈. “김정일정권의 통일정책.” 『통일문제연구』. 통권 236호, 2001.

Betts, Richard K. “Is Strategy an Illusion?.” *International Security*. vol. 25, no. 2, Autumn, 2000.

Blei, David M., Andrew Y. Ng, and Michael I. Jordan. “Latent Dirichlet Allocation.” *Journal of Machine Learning Research*. vol. 3, January, 2003.

Hagan, Joe D. “Does Decision Making Matter?.” *International Studies Review*. vol. 3, no. 2, 2001.

Harris, Zellig Sabbetai. “Distributional Structure.” *Word*. vol. 10, no. 2-3, 1954.

Herman, Margaret G. “How Decision Units Shape: Foreign Policy: A Theoretical Framework.” *International Studies Review*. vol. 3, no 2, 2001.

Kim, Samuel S. “Chinese Foreign Policy in Theory and Practice.” In *China and the World: Chinese Foreign Policy Faces the New Millennium*. edited by Samuel S. Kim. Boulder: Westview Press, 1988.

Mikolov, Tomas *et al.* “Efficient Estimation of Word Representations in Vector Space.” arXiv preprint arXiv:1301.3781, 2013.

Schwenk, H. “Continuous Space Language Models.” *Computer Speech and Language*. vol. 21, 2007.

### 3. 기타자료

『데일리NK』.

『동아일보』.

『로동신문』.

『문화일보』.

『연합뉴스』.

『우리민족끼리』.

『조선신보』.

『조선일보』.

『조선중앙통신』.

『중앙일보』.

『통일뉴스』.

남북회담본부. <[www.dialogue.unikorea.go.kr](http://www.dialogue.unikorea.go.kr)>.

통계청 북한통계. <<http://kosis.kr/bukhan/index.jsp>>.

통일부. <[www.unikorea.go.kr](http://www.unikorea.go.kr)>.

Rand Corporation. <[www.rand.org](http://www.rand.org)>.

「조선로동당 규약」. (2010.9.2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 (2016.6.)

박형중. “김정은 통치 1년과 신주류의 권력 공고화 프로젝트 추진.”  
통일연구원 Online Series CO 12-43, 2012.12.11.

오경섭.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 분석(3): 통일전략과 남북관계.” 통일  
연구원 Online Series CO 16-14, 2016.5.13.



## 부록 1 단어 빈도수 분석 통한 군집의 특징: 대남정책

(단위: 건, %)

a군집			b군집			c군집			d군집			e군집		
단어	빈도수	비율	단어	빈도수	비율	단어	빈도수	비율	단어	빈도수	비율	단어	빈도수	비율
우리	34,710	0.020805	우리	13,387	0.018286	우리	2,810	0.014768	남조선	2,588	0.022541	우리	3,919	0.024329
남조선	23,054	0.013818	남조선	8,911	0.012172	남조선	2,274	0.011951	우리	1,973	0.017185	민족	2,668	0.016563
미국	21,517	0.012897	리명박	7,896	0.010786	인민	2,172	0.011415	미국	1,464	0.012751	미국	2,632	0.016339
민족	14,358	0.008606	민족	7,459	0.010189	조국	1,732	0.009102	당국	953	0.008301	통일	2,251	0.013974
통일	13,923	0.008345	통일	6,539	0.008932	통일	1,644	0.00864	인민	901	0.007848	남조선	2,204	0.013682
과외	13,081	0.007841	인민	6,528	0.008917	조선	1,573	0.008267	민족	859	0.007482	평화	1,560	0.009684
인민	11,743	0.007039	패당	6,248	0.008535	민족	1,529	0.008036	통일	819	0.007133	조국	1,329	0.00825
조국	10,077	0.00604	미국	6,116	0.008354	미국	1,152	0.006054	력사	797	0.006942	북남관계	1,285	0.007977
대한	9,548	0.005723	과외	4,671	0.00638	대한	1,141	0.005996	대한	756	0.006585	대한	1,144	0.007102
전쟁	9,285	0.005565	전쟁	4,611	0.006299	과외	1,139	0.005986	공화국	587	0.005113	인민	1,131	0.007021
공화국	9,009	0.0054	역적	4,235	0.005785	투쟁	1,041	0.005471	북남관계	551	0.004799	개선	1,129	0.007009
나라	7,764	0.004654	조국	4,189	0.005722	전쟁	1,019	0.005355	전쟁	535	0.00466	나라	1,125	0.006984
조선	7,534	0.004516	대한	4,102	0.005603	나라	1,015	0.005334	조선반도	519	0.00452	전쟁	1,076	0.00668
미제	6,056	0.00363	동지	3,516	0.004803	수령	980	0.00515	투쟁	518	0.004512	조선반도	1,047	0.0065
대결	5,685	0.003408	조선	3,349	0.004575	승리	877	0.004609	집권	504	0.00439	투쟁	882	0.005475
도발	5,652	0.003388	대결	3,346	0.004571	장군	862	0.00453	평화	484	0.004216	당국	835	0.005184
평화	5,636	0.003378	도발	3,288	0.004491	동지	854	0.004488	대결	481	0.004189	거레	749	0.00465
당국	5,630	0.003375	나라	3,166	0.004325	경애	826	0.004341	조국	451	0.003928	경애	735	0.004563
혁명	5,599	0.003356	공화국	3,085	0.004214	혁명	780	0.004099	나라	426	0.00371	제안	721	0.004476
세계	5,586	0.003348	선언	3,021	0.004127	세계	701	0.003684	조선	420	0.003658	자주	718	0.004457
침략	5,580	0.003345	장군	2,755	0.003763	공화국	683	0.003589	민중	420	0.003658	조선	715	0.004439
조선반도	5,432	0.003256	책동	2,725	0.003722	평화	678	0.003563	개선	417	0.003632	세계	709	0.004401
박근혜	5,430	0.003255	역도	2,679	0.003659	력사	657	0.003453	문제	411	0.00358	공화국	697	0.004327
책동	5,232	0.003136	평화	2,556	0.003491	정보원	626	0.00329	교과서	403	0.00351	위원회	662	0.00411
력사	5,205	0.00312	혁명	2,488	0.003399	원수	618	0.003248	책동	394	0.003432	문제	655	0.004066
북남관계	5,203	0.003119	투쟁	2,481	0.003389	책동	580	0.003048	국정	392	0.003414	군사	635	0.003942
패당	5,122	0.00307	공동	2,445	0.00334	자주	550	0.00289	도발	390	0.003397	책동	588	0.00365
수령	5,059	0.003032	경애	2,199	0.003004	해방	537	0.002822	세력	362	0.003153	군사연습	582	0.003613
투쟁	4,979	0.002984	존엄	2,166	0.002959	다음	523	0.002749	세계	337	0.002935	력사	579	0.003594
동지	4,970	0.002979	군사	2,161	0.002952	패당	521	0.002738	대화	330	0.002874	공동	574	0.003563
문제	4,829	0.002894	수령	2,121	0.002897	위해	521	0.002738	대해	327	0.002848	침략	565	0.003507
경애	4,591	0.002752	더욱	2,039	0.002785	미제	500	0.002628	군사	313	0.002726	대결	552	0.003427

a군집			b군집			c군집			d군집			e군집		
단어	빈도수	비율	단어	빈도수	비율	단어	빈도수	비율	단어	빈도수	비율	단어	빈도수	비율
군사	4,506	0.002701	그것	2,027	0.002769	정치	500	0.002628	정책	312	0.002717	활동	547	0.003396
자주	4,336	0.002599	조선반도	2,006	0.00274	선언	495	0.002601	위해	304	0.002648	총대	528	0.003278
그것	4,158	0.002492	세계	1,968	0.002688	사람	491	0.00258	거래	299	0.002604	선언	527	0.003272
더욱	4,033	0.002417	자주	1,947	0.00266	령도	487	0.002559	사회	297	0.002587	김정은	527	0.003272
사람	3,864	0.002316	력사	1,938	0.002647	더욱	486	0.002554	소통	294	0.002561	요구	509	0.00316
일본	3,839	0.002301	사건	1,935	0.002643	조선반도	485	0.002549	그것	290	0.002526	국방	507	0.003147
위해	3,777	0.002264	정책	1,930	0.002636	높이	472	0.002481	경애	287	0.0025	행위	499	0.003098
지금	3,750	0.002248	북남관계	1,868	0.002552	위원회	458	0.002407	외세	285	0.002482	위협	495	0.003073
세력	3,720	0.002223	지금	1,840	0.002513	규탄	456	0.002396	반대	282	0.002456	변영	493	0.00306
공동	3,686	0.002209	최고	1,828	0.002497	집권	442	0.002323	지역	260	0.002265	원수	486	0.003017
승리	3,633	0.002178	세력	1,828	0.002497	사회주의	439	0.002307	김정은	256	0.002223	동지	474	0.002943
집권	3,622	0.002171	거래	1,785	0.002438	특재	436	0.002291	자주	256	0.002223	도발	470	0.002918
인권	3,622	0.002171	실현	1,753	0.002395	건설	436	0.002291	보수	253	0.002204	지역	462	0.002868
김정은	3,617	0.002168	위해	1,729	0.002362	비롯	433	0.002276	인권	251	0.002186	실현	458	0.002843
모든	3,544	0.002124	일본	1,725	0.002356	자기	426	0.002239	요구	247	0.002151	위해	455	0.002825
선언	3,544	0.002124	미제	1,654	0.002259	박근혜	423	0.002223	위협	246	0.002143	모든	451	0.0028
위협	3,528	0.002115	문제	1,621	0.002214	강조	418	0.002197	지난	242	0.002108	끼리	441	0.002738
정책	3,391	0.002033	행위	1,608	0.002196	세력	415	0.002181	일본	241	0.002099	연습	439	0.002725
사건	3,389	0.002031	침략	1,587	0.002168	거래	408	0.002144	침략	241	0.002099	단합	427	0.002651
실현	3,378	0.002025	위원회	1,586	0.002166	공동	408	0.002144	더욱	239	0.002082	혁명	426	0.002645
거래	3,367	0.002018	성명	1,574	0.00215	모든	406	0.002134	장부	238	0.002073	그것	411	0.002551
자기	3,323	0.001992	동족	1,553	0.002121	사건	402	0.002113	정권	232	0.002021	일본	409	0.002539
개선	3,291	0.001973	정치	1,552	0.00212	요구	392	0.002026	행위	230	0.002003	녀성	408	0.002533
행위	3,249	0.001947	복침	1,544	0.002109	단체	391	0.002055	지금	229	0.00199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393	0.00244
대해	3,247	0.001946	소통	1,531	0.002091	애국	379	0.001992	사람	228	0.001986	더욱	381	0.002365
활동	3,196	0.001916	군대	1,481	0.002023	대결	369	0.001939	선언	226	0.001968	운동	380	0.002359
비롯	3,187	0.00191	정권	1,452	0.001983	주식	369	0.001939	혁명	224	0.001951	지금	379	0.002353
요구	3,106	0.001862	사람	1,448	0.001978	침략	367	0.001929	실현	224	0.001951	애국	376	0.002334
지역	3,097	0.001856	새누리당	1,448	0.001978	사회	364	0.001913	규탄	222	0.001934	사람	371	0.002303
오늘	3,089	0.001852	비롯	1,447	0.001977	지난	364	0.001913	비롯	221	0.001925	다음	366	0.002272
군사연습	3,073	0.001842	지역	1,416	0.001934	오늘	360	0.001892	원수	218	0.001899	의지	363	0.002253
위원회	3,007	0.001802	집권	1,415	0.001933	위업	360	0.001892	민주	218	0.001899	건설	361	0.002241
사회주의	2,994	0.001795	발표	1,413	0.00193	진행	355	0.001866	동지	217	0.00189	무력	354	0.002198
지난	2,943	0.001764	김정일	1,386	0.001893	당국	354	0.00186	로동	216	0.001881	외세	345	0.002142

a군집			b군집			c군집			d군집			e군집		
단어	빈도수	비율	단어	빈도수	비율	단어	빈도수	비율	단어	빈도수	비율	단어	빈도수	비율
사상	2,936	0.00176	요구	1,341	0.001832	지금	353	0.001855	단체	215	0.001873	긴장	344	0.002136
존엄	2,932	0.001757	위업	1,327	0.001813	파소	352	0.00185	사건	212	0.001846	핵전쟁	342	0.002123
건설	2,914	0.001747	대해	1,324	0.001809	민주주의	349	0.001834	장군	211	0.001838	대해	337	0.002092
정치	2,893	0.001734	규탄	1,314	0.001795	사랑	344	0.001808	동족	210	0.001829	비롯	335	0.00208
원수	2,882	0.001727	보수	1,306	0.001784	중앙	343	0.001803	수령	210	0.001829	단체	334	0.002073
복침	2,849	0.001708	강화	1,306	0.001784	군대	343	0.001803	계속	209	0.00182	지지	326	0.002024
높이	2,836	0.0017	단체	1,303	0.00178	업적	339	0.001782	미제	207	0.001803	발표	324	0.002011
소동	2,835	0.001699	건설	1,287	0.001758	경기	339	0.001782	복침	198	0.001725	정책	321	0.001993
강화	2,792	0.001674	당국	1,272	0.001738	유신	339	0.001782	모든	196	0.001707	높이	320	0.001987
사회	2,779	0.001666	기자	1,255	0.001714	발표	334	0.001755	김정일	195	0.001698	사회주의	319	0.00198
외세	2,775	0.001663	승리	1,239	0.001692	개입	334	0.001755	평화협정	193	0.001681	장군	315	0.001955
장군	2,725	0.001633	자기	1,237	0.00169	문제	334	0.001755	체결	193	0.001681	자기	315	0.001955
전략	2,669	0.0016	어버이	1,235	0.001687	탄압	330	0.001734	사실	191	0.001664	현실	311	0.001931
동족	2,639	0.001582	지난	1,231	0.001682	어버이	328	0.001724	조약	188	0.001637	전략	306	0.0019
누구	2,630	0.001576	모든	1,213	0.001657	진보	322	0.001692	너성	185	0.001611	화해	305	0.001893
연습	2,617	0.001569	보수패당	1,211	0.001654	주장	321	0.001687	꿀기	184	0.001603	적극	300	0.001862
핵전쟁	2,614	0.001567	령도자	1,196	0.001634	민주	317	0.001666	로동자	181	0.001576	정세	299	0.001856
대화	2,564	0.001537	높이	1,190	0.001626	일본	315	0.001655	독재	179	0.001559	동족	299	0.001856
군대	2,551	0.001529	무리	1,190	0.001626	집회	312	0.00164	발표	176	0.001533	사회	299	0.001856
의지	2,532	0.001518	단결	1,185	0.001619	선군정치	311	0.001634	강화	174	0.001516	계속	298	0.00185
발표	2,487	0.001491	의지	1,181	0.001613	행위	310	0.001629	집회	173	0.001507	누구	297	0.001844
사실	2,481	0.001487	오늘	1,145	0.001564	군사	304	0.001598	국회	173	0.001507	안전	294	0.001825
김정일	2,443	0.001464	중앙	1,125	0.001537	도발	303	0.001592	공동	172	0.001498	복침	291	0.001806
타격	2,436	0.00146	누구	1,122	0.001533	실현	303	0.001592	호전광	170	0.001481	위업	291	0.001806
무력	2,424	0.001453	모독	1,106	0.001511	대해	303	0.001592	관련	169	0.001472	성명	289	0.001794
다음	2,400	0.001439	미싸일	1,104	0.001508	그것	301	0.001582	주장	168	0.001463	사상	286	0.001775
이번	2,365	0.001418	다음	1,102	0.001505	령도자	297	0.001561	마련	167	0.001455	독수리	281	0.001744
김일성	2,364	0.001417	사상	1,100	0.001503	선거	295	0.00155	무슨	166	0.001446	시대	280	0.001738
범죄	2,341	0.001403	호전광	1,072	0.001464	지지	294	0.001545	정치	166	0.001446	올해	278	0.001726
주체	2,314	0.001387	반역	1,069	0.00146	의지	293	0.00154	언론	166	0.001446	미군	276	0.001713
감행	2,305	0.001382	외세	1,062	0.001451	주체	292	0.001535	존엄	166	0.001446	세력	273	0.001695
가장	2,301	0.001379	김정은	1,060	0.001448	서울	288	0.001514	장세	165	0.001437	리졸브	272	0.001689
현실	2,249	0.001348	시대	1,047	0.00143	민중	282	0.001482	감행	164	0.001428	훈련	270	0.001676
애국	2,237	0.001341	무슨	1,043	0.001425	사상	282	0.001482	긴장	163	0.00142	발전	268	0.001664





부록 2 단어 빈도수 분석 통한 군집의 특징: 통일담론

(단위: 건, %)

A군집			B군집		
단어	빈도수	비율	단어	빈도수	비율
통일	28,367	0.011716	인민	13,718	0.01308
인민	27,260	0.011259	통일	10,411	0.009927
민족	26,877	0.011101	조국	9,580	0.009135
동지	24,109	0.009958	민족	9,079	0.008657
혁명	22,246	0.009188	동지	8,512	0.008116
조국	21,763	0.008989	조선	8,301	0.007915
남조선	18,189	0.007513	혁명	8,011	0.007638
수령	15,915	0.006573	경애	7,104	0.006774
경애	15,788	0.006521	남조선	7,009	0.006683
조선	14,593	0.006027	나라	6,266	0.005975
미국	13,249	0.005472	미국	6,134	0.005849
나라	12,905	0.00533	수령	5,736	0.005469
김정일	12,347	0.0051	전쟁	5,401	0.00515
장군	12,130	0.00501	원수	5,397	0.005146
김정은	11,922	0.004924	건설	5,346	0.005097
력사	10,582	0.004371	장군	5,191	0.00495
건설	10,451	0.004317	괴뢰	4,688	0.00447
투쟁	10,319	0.004262	승리	4,538	0.004327
사상	10,253	0.004235	사회주의	4,117	0.003926
김일성	9,784	0.004041	투쟁	4,101	0.00391
사회주의	9,605	0.003967	력사	4,096	0.003906
공화국	9,302	0.003842	위원회	3,910	0.003728
자주	9,279	0.003833	공화국	3,859	0.00368
위업	9,215	0.003806	위업	3,625	0.003456
령도	9,112	0.003764	령도	3,569	0.003403
전쟁	9,077	0.003749	세계	3,443	0.003283
위원회	8,971	0.003705	평화	3,355	0.003199
승리	8,348	0.003448	자주	3,335	0.00318
괴뢰	8,186	0.003381	책동	3,220	0.00307
평화	7,833	0.003235	선언	3,072	0.002929

A군집			B군집		
단어	빈도수	비율	단어	빈도수	비율
세계	7,739	0.003196	대결	3,019	0.002879
주체	7,712	0.003185	주체	2,968	0.00283
원수	7,526	0.003108	패당	2,936	0.002799
모든	7,442	0.003074	더욱	2,902	0.002767
북남관계	7,377	0.003047	미제	2,878	0.002744
대결	7,170	0.002961	발전	2,852	0.002719
공동	6,814	0.002814	사상	2,789	0.002659
사업	6,784	0.002802	모든	2,773	0.002644
선언	6,611	0.002731	중앙	2,688	0.002563
조선로동당	6,508	0.002688	군대	2,635	0.002512
더욱	6,500	0.002685	령도자	2,621	0.002499
발전	6,288	0.002597	사업	2,571	0.002451
거래	6,207	0.002564	리명박	2,556	0.002437
문제	6,150	0.00254	다음	2,496	0.00238
실현	6,080	0.002511	도발	2,477	0.002362
단결	6,003	0.002479	침략	2,407	0.002295
책동	5,901	0.002437	강화	2,387	0.002276
강화	5,644	0.002331	세력	2,383	0.002272
패당	5,615	0.002319	공동	2,350	0.002241
령도자	5,517	0.002279	실현	2,340	0.002231
애국	5,475	0.002261	오늘	2,305	0.002198
중앙	5,452	0.002252	군사	2,296	0.002189
당국	5,206	0.00215	비롯	2,294	0.002187
오늘	5,156	0.00213	애국	2,228	0.002124
개선	4,955	0.002047	존엄	2,227	0.002123
정치	4,856	0.002006	위해	2,151	0.002051
도발	4,758	0.001965	단결	2,103	0.002005
업적	4,712	0.001946	아버이	2,098	0.002
비롯	4,711	0.001946	정치	2,096	0.001999
존엄	4,638	0.001916	의지	2,084	0.001987
사람	4,619	0.001908	업적	2,081	0.001984
아버이	4,582	0.001893	최고사령관	2,028	0.001934

A군집			B군집		
단어	빈도수	비율	단어	빈도수	비율
군사	4,581	0.001892	일군	2,025	0.001931
일군	4,562	0.001884	조선로동당	2,010	0.001917
시대	4,533	0.001872	겨레	1,949	0.001858
다음	4,495	0.001857	그이	1,945	0.001855
군대	4,491	0.001855	자기	1,936	0.001846
위해	4,467	0.001845	문제	1,927	0.001837
의지	4,435	0.001832	경제	1,918	0.001829
운동	4,423	0.001827	진행	1,886	0.001798
자기	4,419	0.001825	지금	1,828	0.001743
사회	4,398	0.001817	인민군	1,800	0.001716
대회	4,336	0.001791	강조	1,790	0.001707
정신	4,224	0.001745	정책	1,780	0.001697
가장	4,202	0.001736	위원장	1,712	0.001632
요구	4,179	0.001726	사람	1,708	0.001629
침략	4,174	0.001724	사회	1,688	0.00161
청년	4,130	0.001706	그것	1,653	0.001576
번영	4,115	0.0017	조선인민군	1,653	0.001576
미제	4,095	0.001691	백두산	1,630	0.001554
주의	4,027	0.001663	사랑	1,618	0.001543
지금	3,949	0.001631	번영	1,612	0.001537
마련	3,947	0.00163	최고	1,595	0.001521
조직	3,921	0.001619	강성국가	1,588	0.001514
진행	3,904	0.001612	운동	1,585	0.001511
정책	3,852	0.001591	성명	1,585	0.001511
사랑	3,806	0.001572	자주권	1,563	0.00149
최고	3,797	0.001568	해방	1,563	0.00149
그것	3,796	0.001568	시대	1,558	0.001486
세력	3,785	0.001563	불멸	1,556	0.001484
위인	3,785	0.001563	역적	1,556	0.001484
백두산	3,770	0.001557	수호	1,552	0.00148
위원장	3,751	0.001549	북남관계	1,545	0.001473
외세	3,694	0.001526	위인	1,543	0.001471



## 최근 발간자료 안내



## 최근 발간자료 안내



### KINU 통일포럼 시리즈

2014-01 제1차 KINU 통일포럼: 「드레스덴 구상」과 ‘행복한 통일’	통일연구원
2014-02 제2차 KINU 통일포럼: 김정은 시대 북한의 핵보유 및 대남정책	통일연구원
2014-03 제3차 KINU 통일포럼: 북일 스톡홀름 합의와 동북아정세	통일연구원
2014-04 제4차 KINU 통일포럼: 통일준비를 위한 과제와 전략	통일연구원
2014-05 제5차 KINU 통일포럼: 동북아 전략환경의 변화와 한국의 대응방향	통일연구원
2014-06 제6차 KINU 통일포럼: 북한인권정책 추진전략	통일연구원
2015-01 제7차 KINU 통일포럼: 동북아 국제질서 전환기 한국의 전략적 딜레마와 통일·외교정책 방향	통일연구원
2015-03 제9차 KINU 통일포럼: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업그레이드 전략 - 8·25남북합의의 평가와 박근혜정부 후반기 대북·통일정책 방향 -	통일연구원
2015-04 제10차 KINU 통일포럼: 통일담론 3.0과 북한 변화 전략	통일연구원
2015-05 제11차 KINU 통일포럼: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의 대내외 정책 평가와 전망	통일연구원
2016-01 제12차 KINU 통일포럼: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한반도 정세와 대북정책방향	통일연구원
2016-02 제13차 KINU 통일포럼: 북한 제7차 당대회 분야별 평가 및 향후 전망	통일연구원
2016-03 제14차 KINU 통일포럼: 북한인권법 제정 이후 한국의 북한인권정책 방향	통일연구원

### 통일나침반(통일정세분석)

#### 통일정세분석

2014-01 2014년 북한 신년사 분석	박형중 외
2014-02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1차 회의결과 분석과 전망	박영자 외
2014-03 한미 정상회담 결과 분석	김규륜

#### 통일나침반

2015-01 2015년 북한 신년사 분석	북한연구센터 신년사 분석팀
2015-02 최근 2년 간 미·일·중·러 4개국 정상외교 분석 및 한국 통일외교에 대한 시사점	김진하 외
2015-03 북한인권정책 추진전략과 실천과제	한동호, 도경옥
2015-04 북한 외화벌이 추세와 전망	김석진
2015-05 연해주 지역 북한 노동자의 실태와 인권	이애리아, 이창호
2016-01 효율적 대북제재: 데이터 분석과 함의	이 석
2016-02 2016년 북한 신년사 분석	김갑식 외
2016-03 4차 북핵실험 이후 대북정책	통일연구원 현인대책팀

2016-04 4차 북핵실험 이후 정세 전개와 향후 전망  
 2016-05 사드 배치 결정 이후 한반도 정세 및 대응 방안  
 2016-06 4차 북핵실험 이후 미중관계와 대북정책 방향

통일연구원 현안대책팀  
 통일연구원 북핵대응 T/F팀  
 통일연구원 대외협력팀

## 통일플러스

2015-01 KINU 통일 플러스 Vol.1 No. 1 (봄호) 통일연구원  
 2015-02 KINU 통일 플러스 Vol.1 No. 2 (여름호) 통일연구원  
 2015-03 KINU 통일 플러스 Vol.1 No. 3 (가을호) 통일연구원  
 2015-04 KINU 통일 플러스 Vol.1 No. 4 (겨울호) 통일연구원  
 2016-01 KINU 통일 + Vol.2 No. 1 (봄호) 통일연구원  
 2016-02 KINU 통일 + Vol.2 No. 2 (여름호) 통일연구원  
 2016-03 KINU 통일 + Vol.2 No. 3 (가을호) 통일연구원

## 북한인권백서

북한인권백서 2014 한동호 외 24,000원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4* 한동호 외 23,000원  
 북한인권백서 2015 도경욱 외 19,000원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5* 도경욱 외 23,000원  
 북한인권백서 2016 도경욱 외 18,000원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6* 도경욱 외 22,500원

## 연구보고서

### 2014년도 연구보고서

#### ■ 연구총서 ■

2014-01 북·중 간 인적 교류 및 네트워크 연구 이교덕 외 7,500원  
 2014-02 북한변화 촉진 및 남북친화성 증대: 이론발굴과 적용모색 박형중, 박영자 7,500원  
 2014-03 북한 비공식 경제 성장요인 연구 김석진, 양문수 9,000원  
 2014-04 신동북아질서 시대의 중장기 통일전략 성기영 외 7,000원  
 2014-05 '행복한 통일'로 가는 남북 및 동북아공동체 형성을 위한 통합정책: EC/EU 사례 분석을 통한 남북 및 동북아공동체 추진방안 손기웅 외 6,000원  
 2014-06 탈북청소년의 경제 경험과 정체성 재구성 조정아, 홍민, 이희영, 이향규, 조영주 14,000원  
 2014-07 한국의 대북 인권정책 연구 한동호 6,000원  
 2014-08 법치지원과 인권 증진: 이론과 실제 이금순, 도경욱 8,000원  
 2014-09 신뢰정책의 과제와 추진전략 박영호, 정성철 외 11,000원  
 2014-10 대미(對美)·대중(對中) 조화외교: 국내 및 해외 사례연구 김규륜 외 10,500원

2014-11	북한의 핵전략과 한국의 대응전략	정영태, 홍우택 외	12,000원
2014-12	중국의 주변외교 전략 연구: 중국의 대북정책 결정에 대한 함의	이기현, 김애경, 이영학	7,000원
2014-13	한반도에 있어서 과도기 정의(Transitional Justice)	김수암 외	
2014	The Trust-building Process and Korean Unification (통일대계연구 13-03)	최진욱 편저	8,000원
2014	중국 권력엘리트와 한중교류 네트워크 분석 및 DB화 (중국 지도부의 리더십 분석과 한중 정책협력방안 2014)	전병곤, 홍우택, 신중호 외	9,000원
2014	북한의 시장화와 인권의 상관성 (북한인권정책연구 2014)	북한인권연구센터	11,000원
2014	동북아 4국의 대외전략 및 대북전략과 한국의 통일외교 전략	배정호, 봉영식, 한석희 외	9,500원
2014	2014년 통일에측시계	박영호, 김형기	9,500원
2014	통일한국의 국가상과 한중협력 (통일대비 중국에 대한 종합적 전략 연구 2014-01)	배정호 외	15,500원
2014	China's Strategic Environment and External Relations in the Transition Period (A Comprehensive Strategic Study on China in Preparation for Korean Unification 2014-02)	Bae, Jung-Ho et al.	18,000원
2014	Global Expectations for Korean Unification (Research on Unification Costs and Benefits 2014-01)	Kyuryoon Kim et al.	19,000원
2014	Lessons of Transformation for Korean Unification (Research on Unification Costs and Benefits 2014-02)	Kyuryoon Kim et al.	15,500원
2014	한반도 통일의 효과 (통일 비용·편익 종합연구 2014-3)	김규륜 외	4,500원
2014	2014 남북통일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박종철, 허문영, 송영훈, 김갑식, 이상신, 조원빈	12,000원
2014	통일교육 콘텐츠 개발 IV(1)	조정아 외	7,000원
2014	통일교육 콘텐츠 개발 IV(2)	조정아 외	22,000원
2014	신통일대계 구현을 위한 구조분석	허문영 외	12,000원
2014	Law and Policy on Korean Unification: Analysis and Implications	박종철 외	11,000원
2014	'그린 데탕트' 실천전략 환경공동체 형성과 접경지역-DMZ 평화생태적 이용방안	손기웅 외	17,000원

### ■ 정책연구시리즈 ■

2014-01	농업분야의 지속가능한 대북지원 및 남북 협력방안 모색	임강택, 권태진
---------	-------------------------------	----------

### ■ Study Series ■

2014-01	Korea's FTA Strategy and the Korean Peninsula	Kim, Kyuroon et al.
2014-02	The Perceptions of Northeast Asia's Four States on Korean Unification	Bae, Jung-Ho et al.
2014-03	The Emergence of a New Generation: The Generational Experience and Characteristics of Young North Koreans	Cho, Jeong-ah et al.
2014-04	Geopolitics of the Russo-Korean Gas Pipeline Project and Energy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Lee, Kihyun et al.

2014-05 Fiscal Segmentation and Economic Changes in North Korea

Park Hyeong Jung, Choi Sahyun

2014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9권 1호

이금순 외

## 2015년도 연구보고서

### ■ 연구총서 ■

2015-01	김정은 정권의 정치체제: 수령제, 당·정·군 관계, 권력엘리트의 지속성과 변화	김갑식 외	9,000원
2015-02	북한의 시장화와 사회적 모빌리티: 공간구조·도시정치·계층변화	홍민	13,000원
2015-03	김정은 시대 북한의 교육정책·교육과정·교과서	조정아 외	13,500원
2015-04	2015 남북통합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인식, 요인, 범주, 유형	박종철 외	16,500원
2015-05	동북아평화협력구상과 유라시아 협력 추진을 위한 다자주의적 접근	현승수 외	8,000원
2015-06	북한주민의 임파워먼트: 주체의 동력	박영자 외	10,500원
2015-08	인권개선을 위한 기술협력	한동호 외	6,500원
2015-09	중국의 주변외교 전략과 대북정책: 사례와 적용	이기현 외	7,500원
2015-10	한반도 증장기 정세 변동 및 정책 도전 관련 요인의 식별(2015~2030)박형중 외		16,500원
2015	'그린 데탕트' 실천전략 환경공동체 및 경제공동체 동시 형성방안	손기웅 외	10,500원
2015	2015년 통일에측시계	홍석훈 외	10,000원
2015	남북한 통합과 북한의 수용력: 제도 및 인식 측면	김수암 외	15,500원
2015	북한에 의한 납치 및 강제실종	북한인권연구센터 편	10,000원
2015	전환기 국가의 경제범죄 분석과 통일과정의 시사점	이규창 외	8,000원
2015	통일외교 콘텐츠 개발	김진하 외	9,000원
2015	통일 이후 국가정체성 형성방안: 이론과 사례연구 중심	박종철 외	10,000원
2015	통일 이후 사회보장제도 분리 운영방안: 경제적 및 법적 분석	김석진 외	8,000원
2015	한반도 통일의 비용과 편익: 정치·사회·경제분야	조한범 외	11,500원
2015	한반도 통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와 역할: 주변 4국과 G20	조한범 외	14,000원
2015	북한 접경지역에서의 남·북·중 협력방향 모색(종합요약보고서)	전병곤 외	10,000원
2015	길림성의 대북경제협력 실태 분석: 대북투자를 중심으로	배종렬 외	13,000원

### ■ 정책연구시리즈 ■

2015-01	전환기 쿠바와 북한 비교: 정책적 함의	박영자 외
---------	-----------------------	-------

### ■ Study Series ■

2015-01	Tasks and Implementing Strategies of the "Trust-Building" Policy	Park, Young-Ho
2015-02	The Growth of the Informal Economy in North Korea	Kim, Suk-Jin
2015-03	The Experiences of Crossing Boundaries and Reconstruction of North Korean Adolescent Refugees' Identities	Cho, Jeong-ah et al.
2015-04	Implementation Strategies for Policies on North Korean Human Rights	KINU Center for North Korean Human Rights Studies

## 2016년도 연구보고서



## ■ 연구총서 ■

2016-01	북한 핵 개발 고도화의 파급영향과 대응방향	정성윤 외	14,000원
2016-02	일본 아베정권의 대외전략과 대북전략	이기태, 김두승	6,500원
2016-04	과학기술발전과 북한의 새로운 위협: 사이버 위협과 무인기 침투	정구연, 이기태	6,000원
2016-05	김정은 정권의 대남정책 및 통일담론: 텍스트마이닝을 이용한 분석	오경섭, 이경화	8,000원
2016-06	남북통일과 국가재산·채무·양허권의 승계	이규창	8,000원
2016-07	남북통합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박주화 외	12,000원
2016-08	대북정책전략 수단 효용성 분석: 이란의 경험과 경제제재를 중심으로	홍우택 외	7,000원
2016-09	북한 민생경제 진흥을 위한 개발협력 방안	김석진, 홍제환	8,000원
2016-10	북한 기업의 운영실태 및 지배구조	박영자 외	13,000원
2016-11	북한에서 사적경제활동이 공적경제부문에 미치는 영향 분석	조한범 외	9,500원
2016-12	북한인권 제도 및 실태 변화추이 연구	임예준 외	8,500원
2016-13	최근 중동사태에 비추어본 북한 체제지속성 연구	김진하 외	7,000원
2016-14	「그린데탕트」 실천전략 DMZ 세계생태평화공원사업을 중심으로	조한범 외	7,000원
2016-15	Pathways to a Peaceful Korean Peninsula: Denuclearization,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도경옥 외	
2016-16	한중수교이후 북중관계의 발전: 추세분석과 평가	이기현 외	8,000원
2016-17	국내적 통일준비 역량 강화방안	김수암 외	8,500원
2016-18	민주주의 및 시장경제에 대한 탈북민 인식조사	김수암 외	15,000원
2016-19	전환기 남북관계 영향 요인 및 향후 정책 방향	신종호 외	16,500원
2016-20	북한인권 책임규명 방안과 과제: 로마규정 관할범죄에 대한 형사소추 문제를 중심으로	이규창 외	12,000원
2016-21	2016년 통일예측시계	홍우택 외	7,000원
2016-22	남북한 주민의 통일국가정체성 인식조사	박종철 외	19,000원
2016-23	구술로 본 통일정책사	홍민 외	13,000원
2016-24	북한 전국 시장 정보	홍민 외	17,000원

## ■ 정책연구시리즈 ■

2016-01	미국 대선 주요 후보의 Think-Tank 및 의회 네트워크 분석	정구연, 민태은
---------	--------------------------------------	----------

## ■ Study Series ■

2016-01	Identifying Driving Forces for Changes and Policy Challenges on the Korean Peninsula (2015-2030)	Park, Hyeong Jung et al.
2016-02	China's Neighborhood Diplomacy and Policies on North Korea: Cases and Application	Lee, Ki-Hyun et al.
2016-03	The Costs and Benefits of Unific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in the Political, Social and Economic Areas	Cho, Han-Bum et al.
2016-04	Development of Unification Diplomacy Contents	Kim, Jin-Ha

### 연례정세보고서

2014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14~2015	6,000원
2015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15~2016	8,000원

### 논 총

통일정책연구, 제23권 1호 (2014)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3, No. 1 (2014)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3권 2호 (2014)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3, No. 2 (2014)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4권 1호 (2015)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4, No. 1 (2015)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4권 2호 (2015)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4, No. 2 (2015)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4, No. 3 (2015)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5권 1호 (2016)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5, No. 1 (2016)	10,000원

### 기 타

2014 북핵일지 1955~2014	조민, 김진하
---------------------	---------

# 통일연구원 定期會員 가입 안내

통일연구원은 민족공동체 실현을 위한 국민 역량을 축적하고 통일환경 변화에 적극적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통일문제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전문적,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본원의 연구성과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보다 많은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고자 연간 회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간 회원에게는 간행물을 우편으로 우송해 드리며 각종 학술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혜택을 드립니다.

## 1. 회원 구분

- 가) 학생회원: 대학 및 대학원생
- 나) 일반회원: 학계나 사회기관소속 연구종사자
- 다) 기관회원: 학술 및 연구단체 또는 도서관

## 2. 가입방법

- 가) 회원 가입신청서 작성
- 나) 신한은행 140-002-389681(예금주: 통일연구원)으로 계좌입금
- 다) 연회비: 학생회원 7만원, 일반회원 10만원, 기관회원 20만원

## 3. 회원 특전

- 가)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 및 국내학술회의 등 각종 연구행사에 초청
- 나) 연구원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인 『통일정책연구』,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단행본 시리즈인 연구총서, 협동연구총서 등 우송
- 다) 도서관에 소장된 도서 및 자료의 열람, 복사이용
- 라) 통일연구원 발간자료 20% 할인된 가격에 구입

## 4. 회원가입 문의

- 가) 주소: (06578)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통일연구원 도서회원 담당자
- 나) 전화: (02)2023-8009, FAX: (02)2023-8299, E-Mail: books@kinu.or.kr
- 다)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 가입기간 중 주소 변경 시에는 즉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은 정권의 대남정책 및 통일담론 분석

**김정은 정권의  
대남정책 및 통일담론:  
텍스트마이닝을 이용한 분석**

